

2006.8

특 집 하반기 경제 운용

|경제정책해설|

- 군살 빼고 근육 키운 '몸짱' SOC 투자
-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7년간 7兆 투입
-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60만개 창출

|세계경제의 현장|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놓고 美·유럽 간 시각차 보여
한국, 2년 연속 정보화 최강국

|탐방|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일구는 사람들



만 남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엄격히 규제”



이달의 초점

‘전자상거래 10년’, 세계시장으로 가자!

|글로벌 포커스|

지구촌의 당면과제(下)

|특별기획| 해밀턴 프로젝트

-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나라경제

2006. 8 통권 제189호



2006년 7월호

04 | 탐방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일구는 사람들 / 이은정



| 만남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9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엄격히 규제”

| 경제정책해설 |

- 16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일자리 60만개 창출 / 이동진·과학기술부
- 21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7년간 7兆 투입 / 박철수·농림부
- 25 군살빼고 근육키운 ‘몸짱’ SOC 투자 / 주현중·건설교통부
- 29 수도권, 규제 위주 벗어나 ‘계획적 관리’로 전환 / 김경욱·건설교통부
- 34 ‘아시아의 로테르담항’을 꿈꾼다 / 신연철·해양수산부

| 정부혁신 사례 |

- 80 ‘PCT-ROAD’를 세계 최고 브랜드로 키운다 / 이병엽·특허청

| 해외시장 리포트 |

- 85 인도네시아 편: 농산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전망 밝다 / 민경선·KOTRA

| 특별기획 |

- 110 해밀턴 프로젝트- 기획과 반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우리 산야에 피는 꽃 **화살곰취**

14쪽

| 이달의 초점 |

‘전자상거래 10년’, 세계시장으로 가자!

- 40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를 / 김덕현 · 한국전자거래학회
- 44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의 제1법칙 / 김기욱 · 성균관대학교
- 48 규제장막 걷어야 세계가 보인다 / 이상규 · (주)인터파크
- 51 u-비즈니스 발전 로드맵 만든다 / 정동희 · 산업자원부
- 55 ‘결제대금예치제’로 사기사건 STOP! / 김성환 · 공정거래위원회

| 특집 | 하반기 경제 운용

- 60 일자리 창출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에 주력 / 윤종원 · 재정경제부
- 65 중장기적 정책시계(視界)가 필요하다 / 전주성 · 이화여자대학교
- 69 투자 걸림돌 제거 더 과감하게 / 신용상 · 한국금융연구원
- 73 한·미 FTA 의연하게 추진하라 / 허찬국 · 한국경제연구원

| 쉽게 풀어보는 경제이야기 |

- 78 죽음의 경제학 / 이성표 · KDI 경제정보센터

| 세계경제의 현장 |

- 89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놓고 美·유럽 간 시각차 보어
/ 신영선 · 駐OECD대표부
- 93 한국, 2년 연속 정보화 최강국-2006년 DOI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1위 차지
/ 이승원 · 駐제네바대표부

| 글로벌 포커스 |

- 98 지구촌의 당면과제(下) - AC/UNU 「미래보고서」 / 우천식, 이경영 · KDI
- 106 | 생활경제 | 절세상품 100% 활용하기 / 한상언 · 신한은행
- 122 주요 경제지표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한정택 KDI 원장
편집인 육동한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주간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윤태웅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한동만 통상기획홍보관
 과학기술부 강영철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선영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변영만 법무행정팀장
 정보통신부 김준상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
 환경부 김학주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박종길 재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정병윤 기획총괄팀장
 해양수산부 박경철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처 박춘성 중기재정계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치걸 경쟁정책팀장
 금융감독위원회 김근익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병근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정경진 재정정책팀장
 편집간사 이형철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이재열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자 이정미, 이윤우, 유성임, 길준범
배포업무 김경숙, 안현희

발행일 2006년 8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17권 제8호(통권 제189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77-8033 8
주소 (130-01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서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113

전화 02-958-4656, 465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

기사문의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8

구독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2277-1509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일구는 사람들



류중의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앞은이)을 중심으로 뒷줄 왼쪽으로부터 문창용 사업지원팀 사무관, 이윤철 사업지원팀 사무관, 강준희 기획총괄팀 사무관, 서육근 기획총괄팀 사무관, 이준태 사업지원팀장, 김봉수 기획총괄팀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지난 30여년간 과학발전을 견인해 온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벤처 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 확산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미국 실리콘밸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新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제도를 기획·집행하고 있다.



대

덕연구개발특구는 한국 과학의 꽃이다.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73년부터 국가연구단지로 조성·개발된 대덕연구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에 약 840만평(27.8km²) 규모로 드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6월 말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민간기업연구기관·벤처기업 등 805개 기관이 입주하여 1만5천명의 연구인력이 일하고 있다.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덕연구단지가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견인해 온 역할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덕연구단지가 연구개발 기능에 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하므로, 정부는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형 클러스터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작업을 도맡아 하는 곳이 바로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개념적 정의는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이다.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도의 생산성이 발휘된다.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간 체계화된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 환경을 제공하여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저비용으로 이뤄짐으로써 혁신의 시간도 단축되어 초스피드 혁신이 가능해지는 클러스터이다.

과학기술부는 2003년 12월 5일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대덕연구단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필요한 법적·제도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2004년 3월 10일 제42회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통해 대덕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키로 정부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7월 2,130만평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8월에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설치하고 9월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였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체도를 입안하고 기획한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및 특구지원본부 지원·육성을 통해 특구육성사업을 총괄한다.

현재 기획단 인원은 총 12명. 역할에 따라 기획총괄팀과 사업지원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기술사업화를 통해 과학기술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금융·산업·인력양성·환경 등의



대덕특구의 비전은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이다. 대덕특구는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연구 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되어 한국의 新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우선, 2010년까지는 연구소기업·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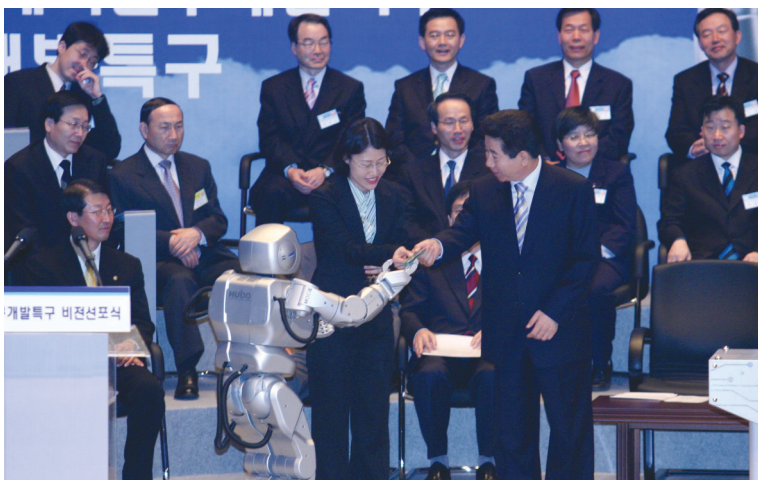
업무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12명의 인력 중 5명은 재정부·산자부·건교부·교육부·대전시 등에서 파견나온 인력으로서, 각 부처의 다양한 경험·아이디어 등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기획단을 이끌어가는 류중익 국장은 아주대 전자공학파를 졸업하고 기술고시를 거쳐 과학기술처에 들어온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영국 맨체스터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기획과, 원자력개발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책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5월 기획단장으로 선임됐다.

류 국장 아래는 김봉수 과장과 이준태 과장이 각각 기획총괄팀과 사업지원팀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김봉수 과장은 과기부에서 협력3과·종합기획과·종합조정과 등 주로 정책기획과 국제협력 업무를 맡아 왔다. 이준태 과장은 산자부에서 석탄 개발, 자원협력, 에너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이번에 연구개발특구 출범과 함께 과기부로 파견돼 특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여 특구 내 입주기업이 824개(2004년)에서 1,500개(2010년)로, 연간 매출액이 3조4천억원(2004년)에서 12조원(2010년)으로, 연간 해외특허 등록이 1,659건(2004년)에서 5천건(2010년)으로, 입주 외국연구기관이 2개(2004년)에서 8개(2010년)로 확충될 예정이다.

특구기획단은, 특구육성 종합계획에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벤처 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 확산 등 네 개의 큰 목표를 밝히고 있다. 특구육성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과제 발굴'에서부터 '첨단기술 벤처 창



2005년 3월 개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와 악수하고 있다.



업·성장'에 이르는 '기술가치 실현'의 과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구 내 특허자산을 조사·분석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덕의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장지향형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구 내 소재하고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벤처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벤처 생태계를 위해 기술사업화 관련 77개 기관이 참여한 '대덕특구 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 및 특구 내 기술 융·복합화,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스쿨 운영, 법률, 회계, 마케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창업과 기업경영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해 특구지원본부 내에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외국기업, 연구기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단기체류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2006년 말에 완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특구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종사자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잦은 출장과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육아보육상의 애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확대된 특구의 통합관리를 위해 2006년 6월에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업의 입주용지 확충을 위해 대덕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기획단은 "2015년이 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가 기업체 3천개, 매출액 30조원, 해외특허 등록 1만6천건, 외국연구기관 20개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과학의 꽃을 찬란하게 피워보려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미국 실리콘밸리, 핀란드 울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글·이은정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66 급변하는 세계 물류환경의 변화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시장은 연평균 14%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화물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을 마련, 고객의 수요에 맞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화물이 찾아오는 차별화된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 34페이지) 99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엄격히 규제”



대담 전성훈(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일시 2006년 7월 11일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개별시장에서 집중된 지배력을 바탕으로 행하는 각종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순환출자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장에 취임하신 지 넉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자로 계시다가 공직에 오셔서 활동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 벌써 4개월이나 지났군요(웃음). 공정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전의 학자 입장에서는 규범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연구를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법을 적용하면서도 법이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하고, 또 법적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해서 때로는 적지 않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정거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의 능력과 열정을 모두 쏟아 넣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오신 뒤로, 공정위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긴 건지 소개해 주십시오.

— 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전직원 워크숍’(6월 8~9일)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설정된 공정위의 비전은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 실현’이라는 공정위의 미션에 맞추어 직원들의 참여로 선정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설정된 비전이 자랑스러운 점, 정부부처의 비전으로는 보기 드물게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기업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한결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공정위가 출범 25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공정위도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그 역할을 새로이 정립할 때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제도의 운영방향도 말씀하신 비전에 맞추어 새롭게 설정하고 계실 텐데요.

—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운영되는 틀, 즉 경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기본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하고, 공적집행의 효율화와 사적집행의 보완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규제산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원리를 적극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학계·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제도의 업그레이드를 논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개정작업은 그때 그때 시장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법개정 과정에서 법체계가 정교하지 않거나 시장경제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행 25년을 맞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가 성년에 걸맞은 법규범 체계와 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는 T/F의 ‘공정거래법/정책 선진화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등 실체법 분야와 사건처리절차, 사적집행 등 절차법 분야로 나누어 각각 4개씩 총 8개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둘러서 정비해야 할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에 착수하는 등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우리 법·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취임 이후 강조해 오신 점 중에 하나가 규제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이었습니다. 금융·방송·통신 등 규제산업은 고유의 공익실현을 우선시하여 그동안 경쟁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 말씀처럼 그동안 방송·통신·금융·에너지 등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분야별 규제기관이 ‘네트워크 효과’ 내지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입법을 근거로 규제해 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과거에 보호·육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산업도 경제여건의 변화와 기술발달에 따라 경쟁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그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경쟁원리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위는 이들 규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숨어 있는 경쟁제한적 제도나 관행을 경쟁촉진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경쟁원리를 확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라는 조직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별 규제당국과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쟁질서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례로, 출자총액제한제는 그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재계는 줄곧 폐지를 주장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여러 가지 측면, 즉 일반집중·시장집중·소유집중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9일 '전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우선,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개별시장에서 집중된 지배력을 바탕으로 행하는 각종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개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질서를 해치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하도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미약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아 최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범법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부·산자부·중기청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재를 가하는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장직권조사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상시감시체계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현행 하도급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하도급법



실현'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 소비자 보호원·소비자단체·지자체와 기능을 연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효율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려 합니다.

체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 공정위 이전에 소비자가 포함된 것과 더불어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비자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정책의 목표도 결국은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소극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소비자들을 기업의 능동적·적극적 파트너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경쟁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주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경쟁정책적 시각의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

▲위원장께서는 경쟁에 대한 철학을 여러 차례 밝혀 오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직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시장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질서 하나만은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기업이 값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고, 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성장하는 등 우리 모두가 경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경쟁질서만은 스스로 지킨다'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화살곰취

[*Ligularia jamesii* (HEMSL.) KOM.]



단화탁오(單花囊吾)라 불리기도 하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풀잎의 모양이 화살촉 같다 하여 화살곰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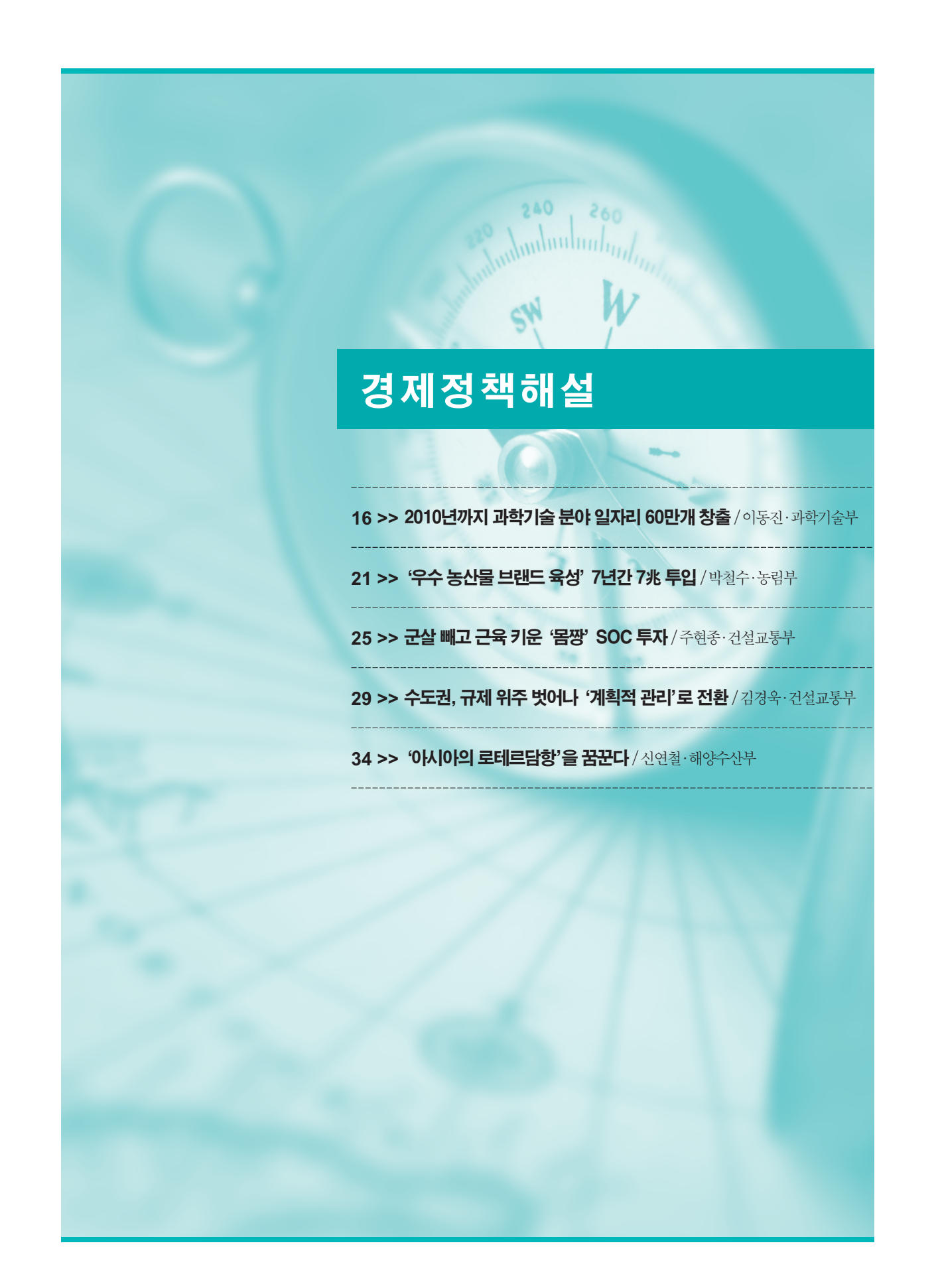
7~8월에 꽃이 피며, 북부 지방 고산지대 백두산 등지의 해발 2천m 이상 높은 고원지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높이는 20~60cm이며, 말라 시든 잎자루로 밑부분이 덮

여 있다. 머리 모양 꽃차례는 한 개인데 지름이 6.5~8cm이다. 꽃싸개잎(포엽)은 줄 모양이며 여러 개의 꽃싸개잎(총포)은 적자색이고 종처럼 생겼다. 꽃잎은 황금색이며 한 줄로 배열되어 있다.

9월에 여원열매(수과)가 익는다. 백두산의 고원지에서 이 꽃이 지면 온갖 벌과 나비들이 모여든다.

글·사진 /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경제정책해설

16 >>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60만개 창출 / 이동진·과학기술부

21 >>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7년간 7兆 투입 / 박철수·농림부

25 >> 군살 빼고 근육 키운 '몸짱' SOC 투자 / 주현중·건설교통부

29 >> 수도권, 규제 위주 벗어나 '계획적 관리'로 전환 / 김경욱·건설교통부

34 >> '아시아의 로테르담항'을 꿈꾼다 / 신연철·해양수산부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60만개 창출



이동진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장
(dongjin@most.go.kr)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2004년 2월),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2005년 1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출범(2005년 10월), 당정공동특위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보고(2006년 4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관계부처 공동으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2005년 10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방안에 기초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2006~2010년)’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심각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GDP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제조업·대기업 부문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과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기술직의 비중(16.2%, 2002년)은 OECD 국가(평균 25% 내외) 중 하위 수준이며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도 저조한 편이다. 특히, 박사급 이공계 연구인력은 대학에 편중(71.3%, 2004년)되어 있어 산업체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체 R&D 연구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42% 이상이 5인 이하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배출되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인 불일치로 인해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졸업자 수의 증가와 기업의 고용패턴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는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빠른 진전과 인력의 질적 불일치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취업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

기술혁신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2006~2010)'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6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39만명에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만3천명에게 취업기회를 알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으나, 과학기술인력 대상의 맞춤형 채용정보 사이트는 적으며, 취업중개센터·학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역할도 미흡한 편이다. 부처별로 인력수급 전망·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연계는 취약하여 이공계 인력의 육성·활용 실태에 대한 통계 인프라도 부족하다.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을 3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첫째, 정부 R&D 사업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중소·벤처 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노동시장 내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감안한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인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다.

둘째,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을 확충하는 한편,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와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취업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활용 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축적·활용하는 등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취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21C 프론티어 사업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범부처적인 장기 연구개발 사업으로, 1999년 2개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20여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선정요건은, 착수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시제품을 생산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국내외의 연구개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기업가형 연구책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별로 10년 이내이며, 사업별로 연평균 80~130억원의 정부지원(10년간 1천억원 내외)을 받게 된다.



2006년 현재 인간유전체 기능연구, 세포 응용연구, 나노소재기술 개발사업, 테라급 나노소재 개발, 자생식물 이용기술 개발, 자원재활용기술 개발, 작물유전체 기능연구, 차세대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 개발,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발 등이 선정되어 있다.

R&D 강화 통해 일자리 지속 창출

전반적인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인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성과 상용화를 촉진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위해 바이오신약·장기사업(과기부), 디스플레이·지능형로봇·미래형자동차·차세대반도체·차세대전지(산자부), 디지털 TV/방송·차세대이동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SW솔루션(정통부) 사업의 R&D 지원을 강화하여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2010년까지 4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기부상열차(건교부)·대형위그선개발(해수부)·치매 치료제개발(복지부) 등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 것이다.

둘째, 중소·벤처 기업과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R&D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개발·기술상용화·기술이전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I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정통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환경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중기청),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중기청) 등이 있다.

정부연구기관, 대학, 지역혁신 지원조직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종합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사업(산자부), 기업협동 기술개발사업(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중기청), 산학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중기청), 산학협력실 지원(중기청) 등이 있다.

산업연관 관계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산자부)을 추진할 것이다.

공공·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산자부)과 연구성과 확산사업(정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인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의 제고를 통해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업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통부)을 추진한다. 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의 '기술사업화 전문펀드'(산자부)와 모태펀드(중기청)를 조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과학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을 육성할 것이다.

연구개발 기획·관리·정보제공·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연구개발서비스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며, R&D 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운용할 것이다.

또한 과학문화 확산사업 관련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실험·체험 중심의 생활과학교실을 3천개소까지 확대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테마과학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교육·계속교육 강화 등으로 일자리 연계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과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기존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변화와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합형·주문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공계 인력의 진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공계 융합교육 연구종합센터사업(과기부),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기부), KAIST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재경·과기·문광·정통부), 기업수요 중심의 NT-IT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정통부), 융합기술 중심의 대학 IT연구센터(ITRC) 육성·지원 사업(정통부), 디스플레이·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교육부·산자부·정통부) 그리고 환경기술(ET)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을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정착을 지원(과기부·산자부·정통부)하고,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을 확산(산자부)시킬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교육·산자부),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산자부),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및 IT 분야 멘토링제도 도입(정통부), 기업-공고 간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중기청)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재직자·미취업자의 재교육을 통해 고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산업기술 인력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KAIST 등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재교육을 실시(과기부), 기술사 연수과정·재교육 등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기준의 기술사 종합교육체계 마련(과기부), 기술경영·기술동향·전문기술 교육을 연구인력에게 제공(과기부), 한국 폴리텍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기술인력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노동부),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퇴직 기술·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전직을 촉진(산자부), IT 인력을 위한 단계별 계속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IT 인력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정통부)하는 것 등이다.

미취업 과학기술인력 활용 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

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공계 미취업자 엔지니어링 인턴과정 지원사업(과기부), 미취업 이공계인력 활용 개발도상국 지원사업(과기부), 문제해결형 인력양성 지원사업(교육부), 중소기업 미취업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산자부) 등이 있다. 또한 기업체의 글로벌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연수(교환학생·인턴십·현지공동연구 등)를 지원(교육부)할 것이다.

셋째, 여성·퇴직 과학기술인의 취업을 확대할 것이다.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확대·운영(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건립·운영(과기부), 여성과학자 지원사업(교육부), 여학생 공과대학 선도대학 지원사업(교육·산자부),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여성기술인력 양성 사업인 ‘Watch21 사업’(산자부)을 추진한다.

출연(연)·정부 출신 과학기술인을 후학양성, 중소기업 지원, 개도국 지원, 기술정보분석 등의 분야에 활용하여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기술 자문봉사사업(과기부),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기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과기부),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 지원사업(과기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1사 1전담멘토 지원사업’(산자부) 등이 있다.

취업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

과학기술 분야의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업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취업정보마당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를 개최하고 정례적으로 이공계 취업박람회도

전국적으로 개최(과기부)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취업중개 체제를 지역별·권역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공계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포털사이트(career.wist.re.kr)를 운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구인·구직활동을 지원(과기부·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하고, IT 인력 대상의 온라인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정통부)할 것이다.

둘째, 이공계 인력에 대한 통계·조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활용 실태와 경력경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것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과기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산자부), IT 인력 통계체계 구축사업(정통부) 등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 미래 직업진로 탐색과 직업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미래 직업세계’를 발간(교육부)하고, 직업지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노동부)하며,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진로교육을 위한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캠프’를 운영(산자부)할 계획이다.

이상의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2006~2010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6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39만명 이상에게 맞춤형 교육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공계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2만3천명에게 취업기회를 알선할 것이다. ■

◀ 관련 자료 ▶

-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안)」, 2006. 6. 23(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7년간 7兆 투입



박철수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cspark@maf.go.kr)

지난 6월 농림부는 한·미 FTA, DD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쌀·원예·축산 분야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농산물 취급비율을 2013년까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현행 20% 수준)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농업인도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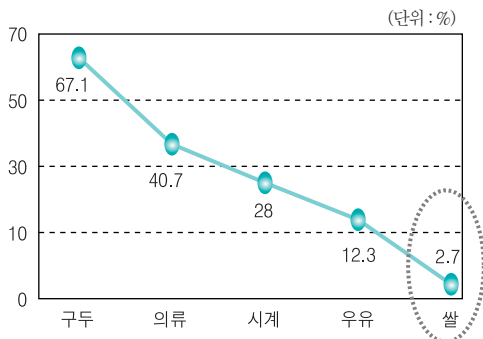
축산물은 그동안 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규모화·전업화·계열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일부 브랜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농산물 전체 브랜드는 2004년 말 기준 5,400여개로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했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개방 파고 넘으려면 브랜드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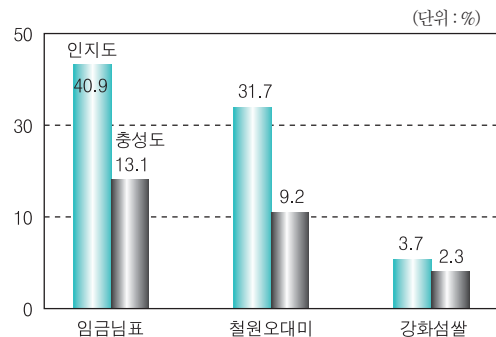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기초 수준인 것은 일반적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위해서는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해야 하나 영세한 생산구조의 한계성과 계절 및 환경에 따른 영향이 커 브랜드화가 어렵고, 산지 생산·유통 업체의 상품 차별화 및 공급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양 위주에서 맛·기능성·안정성 등 질

〈그림 1〉 제품군별 브랜드 중요도 조사결과(중소기업연)



〈그림 2〉 브랜드 쌀의 브랜드 파워(농촌진흥청)



한·미 FTA, DD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정부는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브랜드 기초체질 강화를 위한 산지 노력 강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 확립 및 규모화 추진, 지역 브랜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적인 소비로의 기호 변화, 정보 흐름의 자유화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로의 진입,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과 소비의 세계화 등으로 농산물 브랜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제대로 된 농산물 브랜드화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발표된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기초체질 강화를 위한 산지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산지가 균일한 상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능력(브랜드 기초체질)을 갖추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규모화·조직화된 업체를 중심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마케팅·홍보계획 등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브랜드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립하고 규모화를 추진할 것이다.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는 유통주체들이 균일한 상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와 같은 제도적 기반 정비, 시설지원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생산단계에서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별·수확 후 관리단계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등 유통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을 지원하고, 상품화를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규격에 맞는 상품이 시장에서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 농업·브랜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농업 발전, 수익모형 창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브랜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현실 여건에 맞게 자체 브랜드 전략 및 사업계획을

'굿트래 수박' 맛 보세요

부여군의 9개 농협은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브랜드 통합 및 협약을 체결하고, 수박축제 개최, '굿트래' 상품설명회 개최, 수출시장 개척, 소비지 직거래처 확대 등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굿트래(goodtrae)는 '좋다'는 의미인 good(굿)과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의 뜻인 트리(tree)의 합성어로 좋은 자연을 상징한다. 프랑스어로 '임맛·삼미안·센스' 등의 의미를 가진 gout(굿)과 '매우'의 뜻을 가진 tres(트래)의 합성어로 발음이 굿트래로 동일하다. 굿트래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청정 부여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상품에만 붙일 수 있는 상표인 것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브랜드 규약을 제정하고, 상품화 장비 및 포장비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 지원과 공격적 마케팅을 펼친 덕분에 매출액이 2004년 2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0억원으로 무려 208%나 증가하였으며, 2005년 감동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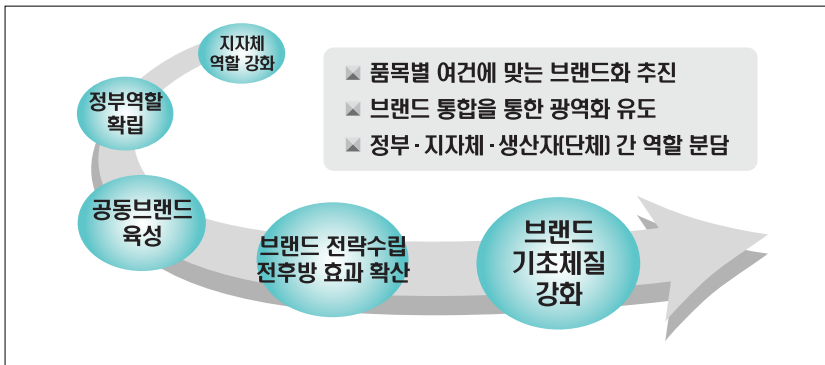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브랜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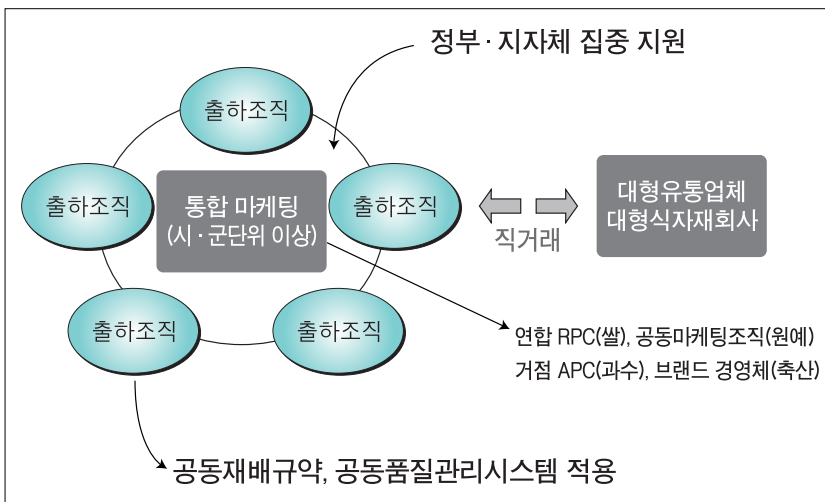
공동브랜드는 산지 유통조직의 대규모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구매·생산·판매를 통한 시장확보가 가능하다. 공동브랜드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및 충성도가 낮은 브랜드는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쌀은 시·군 단위로 RPC를 통합하고, 원예농산물은 지역공동 브랜드와 공동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며, 축산물은 브랜드 경영체를 지원할 것이다.

〈그림 3〉 단계별 역할 분담 체계



〈그림 4〉 브랜드 쌀 지원 체계



쌀 품질검정(인증) 기관 설립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상품화·유통까지 단계별로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은, 시·군 단위 이상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중심으로 원료 확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 쌀 평가 강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 확충 지원, 쌀 품질검정(인증) 전문기관 설립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예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 통일, 재배

방법 등 품질 관리,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규모화·브랜드화된 기업형 공동마케팅 조직 및 시·군 지역 단위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브랜드 경영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상품화를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품목별 주산지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브랜드사업 대상 경영체를 선정하여 총 80개(한우·돈육에 한함)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브랜드 참여농가의 실익 증진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경영 컨설팅 확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등을 통한 판로 개척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노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믿고 사고 제값 받고 판다”

이러한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생산자 스스로 만드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고, 우수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보완할 예정인 ‘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2013년까지 총 7조원 규모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책 수립을 계기

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지역실정 및 품목별 브랜드 여건에 맞게 자체 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새로 쏟아져 나오고 사라지며, 오로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한다. 제대로 된 브랜드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각 주체들의 치열한 고민, 엄청난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며, 이런 노력이 브랜드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브랜드라는 종합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그동안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각자의 노력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이다. 

◀ 관련 자료 ▶

-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 발표」, 2006. 7. 1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군살 빼고 근육 키운 ‘몸짱’ SOC 투자

- 투자 효율성 높이고,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모색



주현종

건설교통부 예산총괄팀장
(joohj@moct.go.kr)

지난 6월 건설교통부는 2007년 예산으로 15조 8,54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다. 물론, 이는 예산 요구액에 불과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예산이 16조4,09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3.4%가 축소된 금액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 감소가 두드러져 도로 부문은 7조1,710억원에서 6조7,636억원으로 5.7% 감소하였고, 철도 부문은 3조2,941억원에서 3조1,465억원으로 4.5% 감소하였다.

이러한 SOC 재정투자의 감소 현상은 2006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아도 정부 전체의 재정이 연평균 6.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평균 1.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이어 2007년에도 SOC 예산 감소

건설교통부의 예산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투자의 감소가 물론 반가울 리는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와 맞물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선진국형 구조로 급속하게 변모함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재정에 대한 소요를 감안하여 경제개발 관련 예산의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구미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개발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러한 시기가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SOC 재정투자의 추세적 감소현상이 지속될 때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불충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공기가 지연되면 현장을 유지해야 할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적기 개통이 될 경우에 누릴 수 있었던 국민적 편익과 경제적 효과도 날아가 버리게 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공사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은 개통시기가 늦어질수록 천문학적인 숫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국에 산재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와 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예산의 축소로 인해 평균 5~7년 걸리던 공기가 10년 내외로 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다른 문제는, 공공사업 발주물량의 감소로 인해

건설교통부는 2007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4%가 축소된 15조8,54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SOC 분야의 예산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SOC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SOC 시설에 민자사업 점진 확대, 공기업 자체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원조달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05년 현재 GDP에 대한 건설투자의 비중은 16.4%로, 아직은 건설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침체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주택 건설경기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SOC 투자의 축소로 1990년대 초반에 경험한 바 있는 국가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해·재난 예방 투자가 축소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천재지변이 잦은 형편이다. 댐 건설, 하천 재해예방, 도로 유지보수와 같은 재해 예방과 관련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악조건을 그간 SOC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제거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과거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오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재정집행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사비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적공사비제도의 확대 시행과 입찰과정에서 가격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있던 수익보

장제도도 대폭 손질하였다. 착공 이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심사제도도 대폭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국민들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낭비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시정하는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시행하고 있다.

교통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에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교통 시설 건설에 5~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교통수요의 예측은 중장기적 소요를 감안하여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향후 교통수요가 그다지 증가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경우에 착공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수요 추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인 교통량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교통량 추정을 잘못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공사의 사업구상보고서를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당초 수요추정과 다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서 이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재정성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7년도 예산 요구 시에는 집행 부진으로 인해 이월과 불용이 많은 사업이나, 재정성과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차없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감액 조치하였다.

민자사업 신뢰성 떨어져...점진적으로 확대

이처럼 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투자 감소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적기준공에 투자의 우선을 두고 있지만, 총투자규모의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신규 세입의 확보를 통해 충분한 세출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재정의 건전성과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채의 추가 발행, 교통세의 탄력적 운용, 공적자금 상환액의 전용 등이 이 범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재정투자를 직접 증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체 투자수단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단으로 먼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SOC 시설에 대한 BTO(수익형 민자사업)나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여섯 개의 BTO 방식의 민자 고속도로가 추진 중에 있고, BTL 방식의 일반철도 건설사업도 두 개가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국도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BTL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가 주도로 단기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는 민간자본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BTL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업자 선정과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민자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낮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보장, 일반국민의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이용료 부담, 금리나 지가 상승 시의 위험부담에 대한 처리경험 부족, 전문 운영기관의 부재, 협상 당사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등은 민자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자본의 활용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개개 사업별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자체 투자 등 재원조달 다변화 추진

최근에는 공기업의 자체 투자를 확대해 재정 부족을 메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사태 전후로 불안한 재무상태를 보였던 여러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노력과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 최근 재무구조가 양호해진 것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독점적인 이익과 각종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 및 공기업이 자체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공기업 투자확대 방안은 크게 보아 첫째,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관련 재정사업에 대체 투자하는 방안 둘째,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하여 이의 매각대금 등을 관련 재정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올해에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을 지방공항 건설 및 광역상수도 건설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자산을 유동화하여 이의 매각대금 5조원을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2007년에는 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접근방안을 대부분의 공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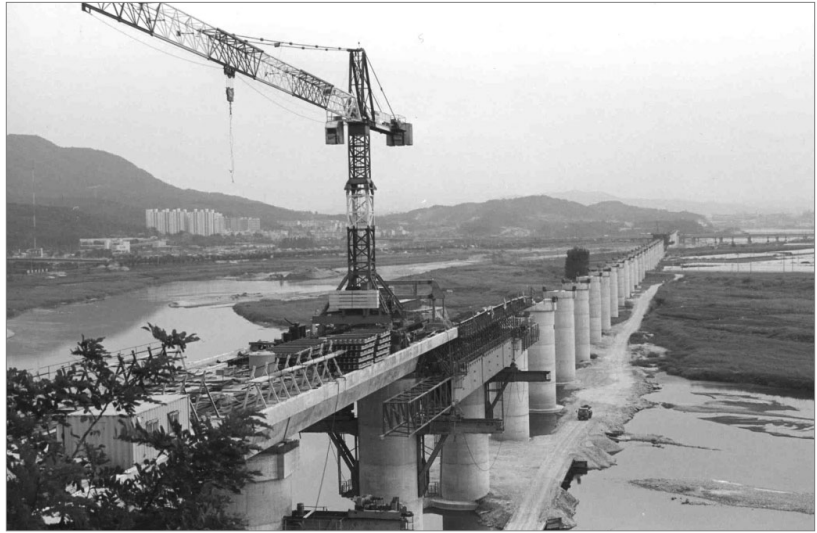
다만,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방안을 시행하는 방안

역시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재무구조가 우량한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공기업들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공기업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리스크를 키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재무개선 노력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을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게 하는 것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좋아지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놓고서는 실제 경영개선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負) 인센티브를 안긴다는 볼멘소리가 공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 평가에 대한 잣대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 재정이 담당하던 사업영역은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자체 투자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공기업이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자산가치의 감소로 인해 대내외의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투자를 하게 되는 시설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공기업의 일반 영업활동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논란이 있겠으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SOC 축적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2004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인구·국토가 비슷한 그리스·영국·포르투갈 등의 국민소득 1만달러 당시 SOC 축적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1만달러 도달 시점 시 SOC 축적도는 도로가



58.9%, 철도는 4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축적도가 낮으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이와 연관되는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지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불러오게 된다.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SOC 투자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위에서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중요한 국책사업들의 완공시기가 이러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각각 2008년과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목표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해결방안을 통해 이러한 국책사업들의 적기 완공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수도권, 규제 위주 벗어나 ‘계획적 관리’로 전환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



김경욱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장
(kkw@moct.go.kr)

정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20여년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공장·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시책으로 대학 인구비중·제조업 생산비중

등은 큰 변화가 없으나,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1985년 전체 인구의 35.5%였던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4년 48.0%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영남 지역 인구마저도 정체로 돌아서 수도권이 전국의 인구증가를 흡수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증가한 반면, 지방은 19만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확산되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선진 대도시권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반면, 기업·수도권·지자체 등은 세계화·분권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한받는 데 대해 불만을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표〉수도권과 선진국 대도시권의 삶의 질 지표 비교

삶의 질 지표		선진국 대도시권				한국
환경	1인당 공원면적(m ²)	베를린 (24.5)	런던 (25.7)	뉴욕 (14.1)	파리 (10)	수도권 (5.9)
	미산면적 (μg/m ³)	동경권 (33)	런던권 (37)	뉴욕권 (21)	파리권 (22)	수도권 (70)
교통	차량밀도 (대/km)	동경 (2.4만)	런던 (1.0만)	뉴욕 (0.9만)	싱가포르 (2.7만)	서울 (3.4만)
	주거밀도 (명/km)	동경 (2.3만)	런던 (0.8만)	뉴욕 (1.2만)	싱가포르 (1.2만)	서울 (3.1만)
주거	1인당 주거면적(평)	일본 (10평)	영국 (13평)	미국 (18평)	독일 (13평)	수도권 (6.6평)
	인구밀도 (명/km)	동경 (0.6만)	런던 (0.5만)	뉴욕 (1.0만)	싱가포르 (0.6만)	서울 (1.7만)
인구	1인당 GRDP (달러)	동경권 (4.0만)	런던권 (2.8만)	뉴욕권 (4.7만)	파리권 (4.6만)	수도권 (1.5만)

입지 규제 위주에서

성장관리 강화로

이러한 한계 및 여건 변화 속에서 수도권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면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계획적 관리방식으로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한 국면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문제점을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관리하며,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연계형 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의 주택을 건설하고,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며, 광역철도망과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이후 혁신신도시 후보지 결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실시 등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新수도권 발전방안 및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수도권이 그동안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입지 규제 위주의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규정 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도권 정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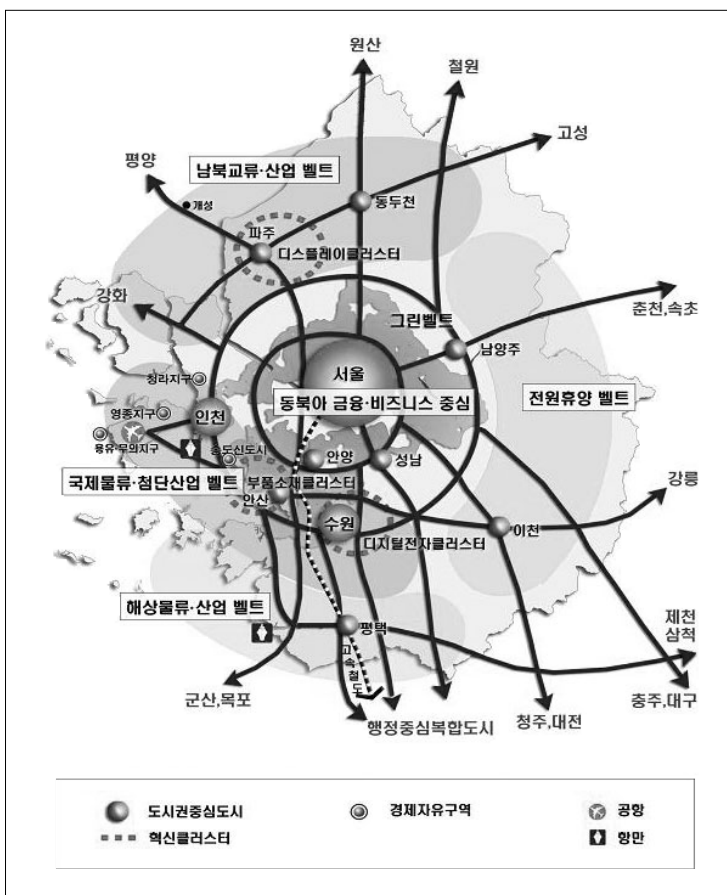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운영 위주로 수립되었던 과거 계획과는 달리 성장관리의 성격이 대 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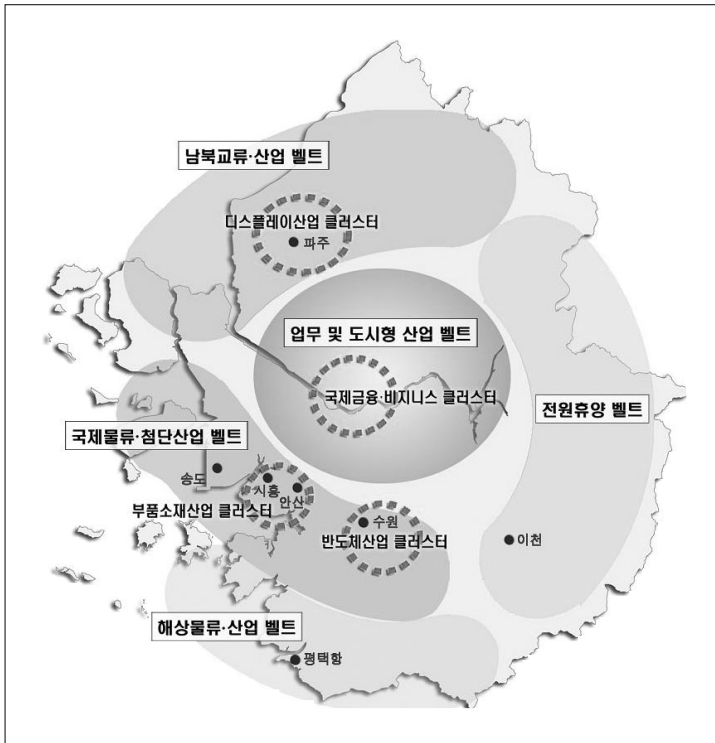
우선,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과 함께 수도권 시도별로 도시 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상한치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지자체별 인구지표의 배분은

〈그림 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그림 2〉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될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2020년 인구지표 :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450만명).

아울러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본격 전환할 것에 대비하여 올해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조기 착수하도록 하였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온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환상격자형으로 전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지원한다.

권역을 정비하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

규제시책을 유지하되, 공공기관 종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권역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계획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수도권 관리목표 및 상세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주민·NGO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5년간 연평균 30만호 주택 공급

주택 및 택지의 경우, 현재 94%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의 주택을 건

설하고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

기존 도심지는 광역개발을 통해 도로·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하고, 신규 개발지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연담화(連擔化)가 불가능할 정도의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도록 하여 다핵연계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유도한다.

공장 및 공업용지의 경우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산화 및 도심지 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산업단지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으로 제한하고,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집산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도심지 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기업 공장은 현행과 같이 수도권 입지를 계속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선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대학과 공공기관 청사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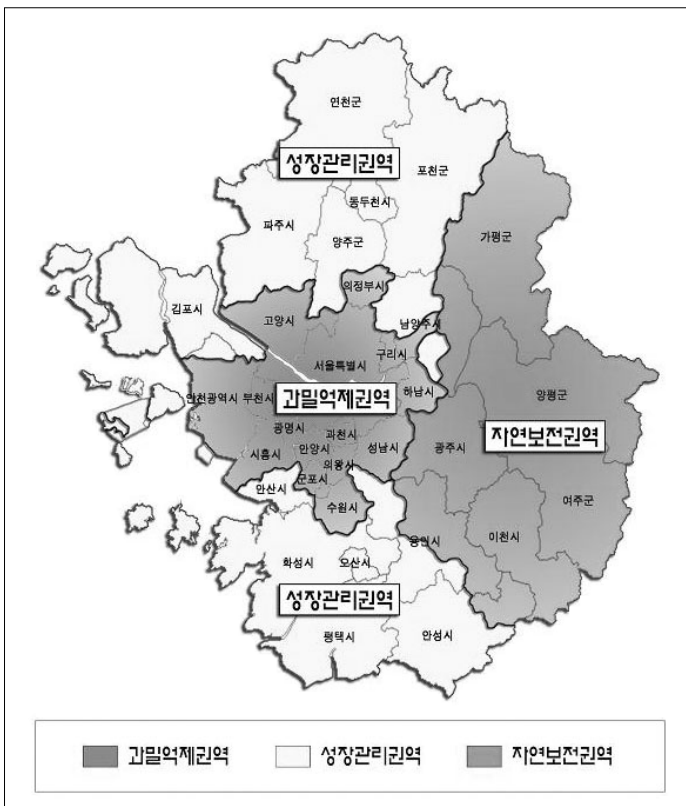
억제하되,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은 수도권 시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은 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보완한다.

대형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 관리에서는 현재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

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6만㎡ 이상 금지)는 중장기적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그림 3〉 권역구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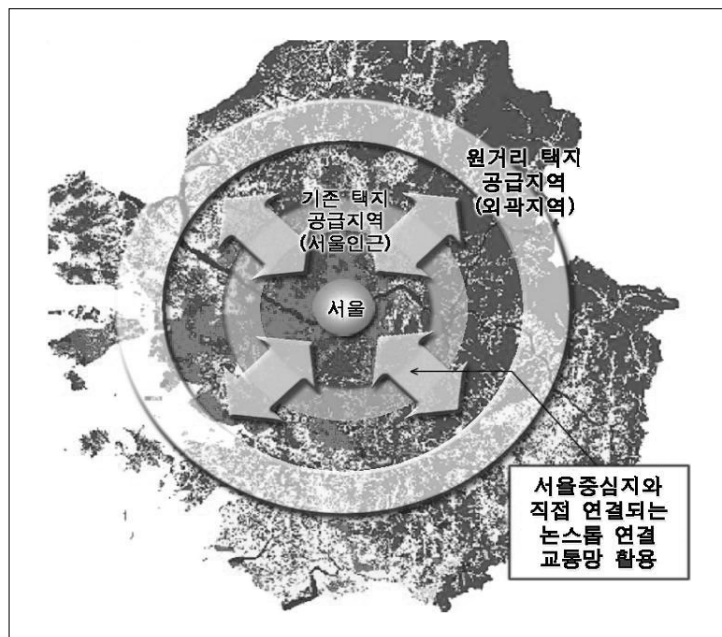
수도권 광역철도망·간선도로 대폭 확충

2002년 현재 23.6%인 수도권 광역전철망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총 30개 사업 782km의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을 반영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남북 7축, 동서 3축, 3개 순환망을 구축하여 2020년까지 간선도로 총연장을 현행 860km에서 1,811km로 확충한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항만·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물 배분체계 조정 및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해 수도권 북부의 물 부족을 해소한다.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2014년

〈그림 4〉원격지 택지 개발 개념도



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15년까지 팔당상수원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자체별로 계획기간 중 확보해야 할 녹지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녹지생태축을 조성한다.

여론 적극 수렴해 갈등 최소화할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하여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시·도별 관리계획이란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성장관리계획으로서, 2006년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NGO·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 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토록 하는 등 수도권 정책수립에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5년 주기로 계획을 평가·보완하고 수도권 경쟁력 및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시책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조기 착수하고, 2007년까지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시·도별 관리계획 및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전문가와 NGO,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설 수도권정책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관련 자료 ▶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심의」, 2006. 7. 4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아시아의 로테르담항’을 꿈꾼다

—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



신연철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총괄기획팀장
(yeoncheol@momaf.go.kr)

풍차와 튜립의 고장 그리고 히딩크와 아드보카트의 나라로 우리에게 친숙한 네덜란드.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고 부존자원도 없는 인구 1,600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유럽의 물류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선진국이다.

물류강국 네덜란드의 중심에는 북유럽 수출입 화물을 전담 처리하는 유럽의 관문항인 로테르담항이 있다. 로테르담항은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3.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2.7%), 식품(3.0%)의 부가가치 창출액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네덜란드 전체 고용인력의 2%에 달하는 14만4천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같이 부존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다. 그러나 우수한 인력과 물류인프라, 지정학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아시아의 관문,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발전의 둔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공항과 항만시설 확충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보다 질...고부가가치 물류허브에 눈 돌릴 때

급변하는 세계 물류환경의 변화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시장은 연평균 14%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상해 양산항 개장을 비롯한 중국의 대규모 물류시설 확충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화물의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동북아 시장 진출 및 대형 물류기업 간 M&A를 통한 세계물류시장의 과점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만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로테르담항은 규모로만 살펴볼 때에는 2005년 세계 7위로서, 세계 5위인 부산항보다 적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총 275억700만달러(28조1,765억원)로서 부산항(80억달러≈8조1,816억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로테르담항의 항만산업 부가가치는 로테르담 지역총생산(GRDP)의 16.3%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항이

정부는 앞선 IT 환경을 바탕으로 u-Port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화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물류 분야의 보안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화물이동의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타깃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8.9%인 데 비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로테르담항의 모습은 중국 등 주변 항만과의 경쟁에서 계속적인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양적인 물류허브가 아닌,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허브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인식하에 기존 동북아 물류중심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우리 항만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 허브화 전략의 보완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과제를 담은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을 수립,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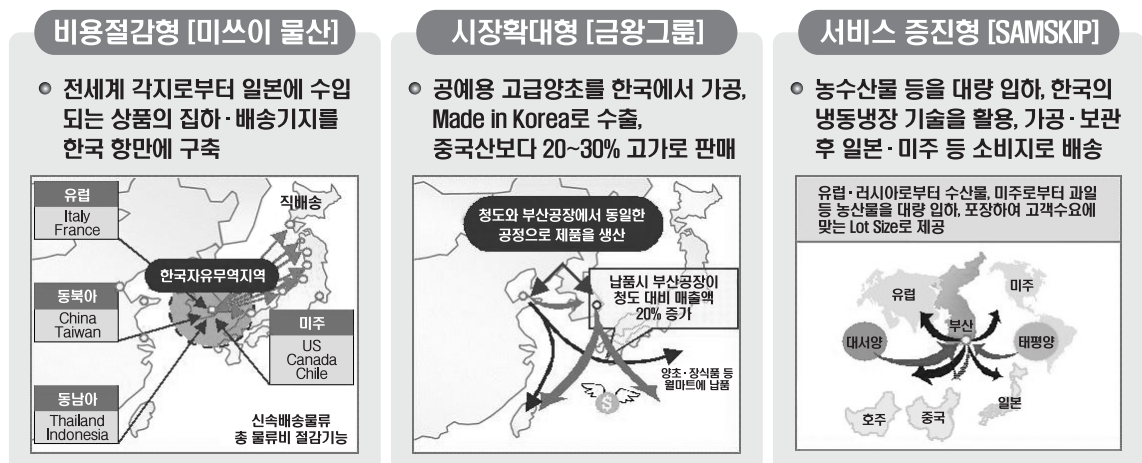
주변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리 항만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물을 싣고 나르는 공간이 아닌, 기업과 자본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 로테르담항 또한 자동화된 항만시스템과 다각화된 운송수단, 배후물류단지를 갖추고 저렴한 임대료와 세금우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화물과 기업을 유인하고 있다.

타깃 마케팅 강화해 외국 화물·기업 유치

정부는 고객의 수요에 맞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화물이 찾아오는 차별화된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앞선 IT 환경을 바탕으로 u-Port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화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산·인천 항운인력을 항만 물류업체 직원으로 상용화하여 항만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림 1〉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투자사례(2006년)





부산 신항만

그리고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 분야의 보안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활용하여 화물이동의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상품화하여 주요 교역국과 협정을 통해 우리 항만을 경유하는 화물이 국외 항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과 배후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항만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산업을 항만 배후단지에 집약시켜 원료조달·제조·유통 등 관련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항만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최적의 물류기지로 인식하는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화물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한·중·일 통합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국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길 원하는 중국기업과 운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이 우리 항만을

최적의 투자대상지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요를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여 물류특성을 분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타깃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중국과 일본의 물류산업동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여 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화물과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에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화물량이 적어 물류기지 확보를 주저하는 중소물류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배후단지 조성시기를 앞당기고 입주기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노동계와 함께 현행 외

세계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 소요자원 조달 등의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의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기반으로, 러시아·ASEAN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물류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틀 안에서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기업 적극 육성

물류허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항만으로 화물과 기업을 모으는 데서 더 나아가, 약 6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물류시장의 부가가치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해외 물류거점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과 투자정보의 부족은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허치슨, 두바이 포트 월드,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등 세계 5대 터미널 운영사가 전체 시장의 44.4%를 점유하고, 세계 10대 제3자 물류기업이 전체 시장의 21.9%를 차지하는 등 과점화되고

있는 세계 물류시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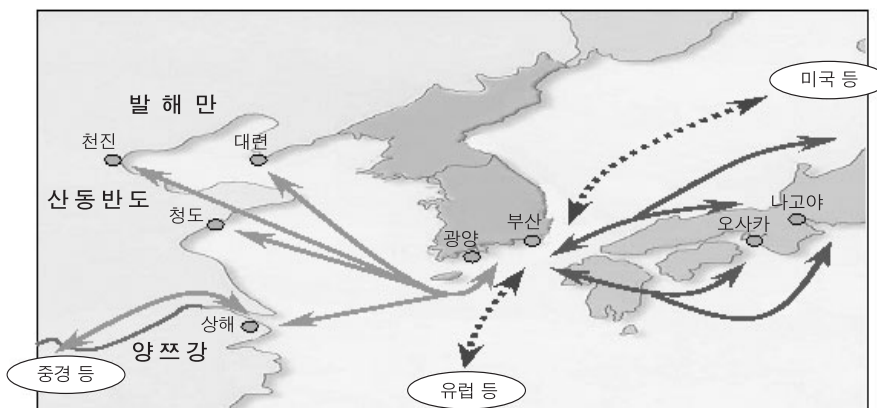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항만 중심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리스크를 분산하고 소요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등의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란 끊임없이 흐르는 혈관과도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막힘 없는 물류흐름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일본 등과 함께 물류장벽을 허물어 동북아가 하나의 통합 물류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 9월 7일 개최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3국의 물류협력

채널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한·중·일 국제물류포럼’을 함께 개최하여 국가 간 물류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기반으로, 러시아·

〈그림 2〉 한·중·일 3국 간 물류협력 개념도(2005년)





평양항 조감도

ASEAN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물류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간 물류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일 물류협력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3국의 물류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물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류협력의 기반이 될 물류정보망 공유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여 동북아 통합물류시장의 형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물류정책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제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물류의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들은 다양한 정부부처와 물류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합적 정책인 만큼, 정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부산항과 광양항이 로테르담항과 같이 화물과 기업,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남영희

◀ 관련 자료 ▶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세계시장 적극 진출」, 2006. 6. 8(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참조)



‘전자상거래 10년’, 세계시장으로 가자!

도입 10년이 지난 전자상거래는 현재 거래 규모나
사업자 수익 증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달의 초점’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방안과 과제 및
해결책을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註〉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를

인

터넷이 상용화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과 웹 기술은 개인의 생활방식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업무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 10~20년 전에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생각되었던 일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뱅킹·교육·의료·조달·판매·민원처리 등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또한 수십년 동안 축적된 고객 기반과 시장을 가진 오프라인 기반의 기업을 제치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무장한 온라인 기업이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프라인 기반의 월마트가 100억달러 규모의 거래를 만드는 데 대략 25년이 걸렸음에 비해 온라인 기업인 eBay는 불과 7년이 걸렸을 뿐이다.

내년 전자상거래 세계시장 규모 7조달러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품·서비스의 구매·판매, 파트너와의 협업 등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통해서



김덕현
한국전자거래학회 수석부회장
(dhkim@sjcu.ac.kr)

전자상거래는 이미 개인생활의 편의성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서비스의 효율과 품질향상, 나아가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는 정책적·경제적·사회적 요구의 고도화와 전통적 정보기술은 물론 유비쿼터스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시장조사회사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02년 9,360억달러, 2003년 1조6천억달러, 2007년 7조달러에 이를 것이며,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기술적·업무적·제도적 장애 요인이 남아 있는데다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추진전략상의 오류로 인해 보다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업에게는 ①내부 업무의 효율을 높여 주고(비용절감, 시간단축, 생산성 향상 등) ②외부의 고객과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며 ③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성과를 높여 주는 수단이 된다. 고객·소비자에게 전자상거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래는 필요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가운데 보다 싸고, 신속하며,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보면 ①물리적 이동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비용·에너지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며 ②경제적·사회적·국가적 격차를 좁힘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③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도입, 적용함으로써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거래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기업활동의 효율성·투명성과 고객·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표 1〉 참조).

둘째,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진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이 등장, 발전하였다. 옥션의 경우, 2005년 말 매출액 1,581억원, 영업이익 418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업소모성자재(MRO) 관련 B2B e-마켓플레이스도

〈표 1〉 온라인을 통한 거래비용 및 금액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율	4.5	9.1	12.8	16.7	19.1	21.0
금액	58	119	178	235	315	358

〈표 2〉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표준 프레임워크 미흡
- 인터넷·초고속 통신망 등 기술적 인프라 불충분
- 새로운 기술(특히, SW)과 기존 기술 간의 상호운용성 미흡
- 웹 서버,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장비와 미들웨어 등 신규 투자 필요
- 보안(기밀성 유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 취약
- 전자상거래 자체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기반 미흡
-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및 정책 존재
- 변화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불충분

빠르게 성장하였다.

셋째,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삼성전자·LG전자는 협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합하였고, 동부그룹·만도·포스코·KT는 RTE(필자註 :

Real Time Enterprise, 기업의 핵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판단, 실행 과정이 시간적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를 구축하였다. 포스코·현대자동차·INI스틸 등은 프로세스 혁신과 BPM(필자註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된 업무 프로세스의 모델링, 자동화 실행, 모니터링, 분석 및 최적화 등을 지원하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킴)을 구축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역량이 증대되었다. ERP(전사적자원관리) 구축 기업 수가 증가되었으며, ASP(필자註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고가의 구입·설치·유지 비용이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임대, 사용하게 해 주는 사업자)를 이용한 업무정보화 확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응용 분야의 고도화 및 확대를 가져왔다.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며,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e-러닝, e-헬스케어 산업의 신장도 괄목할 만하다.

변화를 수용하되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전자상거래가 더 빨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표준 프레임워크 미흡, 인터넷·초고속 통신망 등 기술적 인프라 불충분 등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되어 왔다(〈표 2〉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더 확대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에 대



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업무혁신 ‘전략’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이면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잦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가·산업·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장·고객·기술 등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지만 정책·전략의 기초는 유지되어야 한다. 일관성 없는, 일과성의 전략으로는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전략은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과 사람·절차 등이 어우러진 시스템으로 실체화된다. 하나의 시스템은 각 구성품들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사람과 제도·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legacy) 시스템에 대한 투자 보호와 상호운용성의 보장을 감안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라는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국부적으로, 사람보다는 기술 관점에서 구현할 경우 성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는 첨단 정보기술이라는 수단에 의해 시작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기술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시스템의 구성요소일 뿐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시스템은 ‘기술의 적용’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내지 고도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시스템·기술 측면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 조직문화, 교육훈련, 예산, 규정·지침, 추진조직, 기술, 프로세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종래의 종이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을 선호하고 투명하지 못한 거래 관행을 견지하려는 조직문화가 타파되지 못할 때 전자상거래의 고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훈련은 전략·시스템·기술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담아서 기획·계획자, 개발자, 관리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적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은 전자상거래를 적용하는 일반기업(또는 사용자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솔루션 기업의 육성이나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제품·서비스의 혁신이나 시장개척에 못지않게 전자상거래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

글로벌 선진기업은 제품·서비스의 우위는 물론 전자상거래에서도 선진기업이다. 규정·지침, 즉 법·제도는 디지털 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추진조직은 물리적으로는 분

산되어 있더라도 논리적으로는 통합되어야 한다. 부처별·부문별로 각개 약진하는 식의 추진체제로는 전자상거래라는 복합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기술은 기회 요인인 동시에 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협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신기술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가면서, 경제적·운용적(operational) 타당성이 입증되는 시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1차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업무 프로세스를 일관화 내지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업무 프로세스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비가 없다면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비즈니스 아키텍처 설정하라

전자상거래의 고도화를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의 e-비즈니스와 향후 추진하게 될 u-비

즈니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키텍처가 우선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기업 차원의 아키텍처로 연계되어야 하고, 운용·시스템·기술 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아키텍처는 범부처적인 추진체제를 마

련하고 중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배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u-비즈니스를 기존 e-비즈니스에 대한 기술 중심의 혁신이라고 볼 때 두 전략과 시스템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e-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보호가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B2C/B2B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조세 감면이라든지 소

비자 보호 등이 계속해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기업·산업의 수직적 가치사슬에 대한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전체 기업의 수평적 내지는 네트워크 형태의 통합도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핵심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역동적 가상기업의 멤버가 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e-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의 육성 또한 필요하다. 특히, 제품보다는 솔루션에 초점을 둔 글로벌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정책은 이제 수요자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일관성 있는 장기 목표하에서 핵심 분야의 선택 및 집중 투자와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e-비즈니스와 향후 추진할 u-비즈니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키텍처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기업 차원의 아키텍처로 연계되어야 하고 운용·시스템·기술 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이 수요자·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장기 목표하에서 핵심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의 제1법칙

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도입 10년을 지나면서 거래 규모나 사업자 수익 증가 측면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96년 100억원 미만이었던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는 올해 13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지난해 24조원과 17조원 규모를 기록한 할인점과 백화점에 이어 제3의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거래방식과 달리 무점포, 비대면, 선지불 후배송이라는 전자상거래 고유의 특성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소비자들은 새로운 거래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오픈마켓 등장으로 소비자 피해 여지 커져

국내 전자상거래는 1996년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을 시작으로 1997년 신세계 백화점 쇼핑몰, e현대, 한솔CS클럽 등 대기업이 진출하고 1998년 옥션과 YES24 등 인터넷 전문기업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옥션은 일반화된 비즈니스 모델인



김기욱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kokim@skku.edu)

B2C에 온라인 장터의 개념으로 C2C를 처음 도입하여 급성장함으로써 B2C시장에서는 인터파크, C2C시장에서는 옥션이라는 양강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가격 중심의 경쟁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 자금력과 브랜드파워를 지닌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에는 오픈마켓의 급성장이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매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매 주체가 되는 전통적인 판매방식과 달리, 사이버시장을 개설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인과 유사한 지위로 운영하는 판매방식이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C2C)이지만 중소 규모의 전문몰이나 개별사업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업체 내 물인몰(mall in mall) 형태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까지 옥션이 주도하던 오픈마켓은 2004년 종합몰 인터파크의 G마켓 등장과 아울러 2005년 포털 다음이 인수한 다음온켓 그리고 GS·CJ 등 대기업까지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오픈마켓은 전통적인 판매방식에서 통신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던 사업자를 중개인과 유사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지위로 옮겨 놓아 소비자를 더 큰 거래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통신판매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로 옮겨 간 사업자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책임 없음’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확인을 해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는 브랜드파워가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할 때 사업자를 신뢰하여 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다고 인식하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자라는 사실, 따라서 소비자는 신뢰하고 들어간 쇼핑몰 안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가격비교사이트와 같이 정보제공이 주된 업무였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오픈마켓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중개사업자에 대한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시급히 요청된다.

소비자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저렴한 가격을 찾는 소비자의 알뜰심리와 맞물려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고유의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며 급성장해 온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문제를 안고 있다. 판매중개자로서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크게 민간 자율 원칙의 미국식 접근과 정부 주도 입법 위주의 EU식

접근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규제 전통이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장변화에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비용이나 관련 법률의 제정 혹은 정부의 규제에 의한 경직성과 고비용, 나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6월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출범시켜 9월에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확정 공표하였다. 각 사업자는 이 프

로그램을 소비자 피해 관련 업무의 기준으로 삼거나 이를 토대로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낙후된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해야

소비자 피해구제는 단순히 피해구제의 차원을 넘어 상품이나 기업활동의 결함을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 사업자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의 구제를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그리고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우수한 방안으로서 그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법령정비를 통한 소비자 보호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사업모델이나 거래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인해 당시에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여 법과 제도를 도입하면 때늦은 대응이 되기 쉽다. 또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규제 전통이 매우 미약하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장변화에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정부 규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 장치를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놓는다 해도 이를 준수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결여와 지속적인 감시 소홀 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2005년 3월에 개정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거래안전 장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랭킹닷컴 순위 100개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매매보호제도의 시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쇼핑몰만이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마련해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따름이다. 전자상거래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거래위험은 소비자 보호가 가장 핵심쟁점을 시사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정부 주도의 입법과 실효성 있는 집행 그리고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민간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 구축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가 시작된 이래 의류와 같이 직접 만져보고 입어 봐야 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취급 상품의 수가 급증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외에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몫을 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한 단순한 평가로부터 판매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의견 개진은 온라인 거래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의류와 같이

직접 만져 보고 입어 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소비자 후기는 다음 소비자에게 소중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순환 구조가 쌓여 직접경험을 대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웹2.0시대의 네티즌 인터넷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9.3%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용자의 상품평·이용후기·댓글 등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평·이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이유로는 다른 구매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59.8%), 포인트·할인 등 상품평을 작성할 경우 얻는 혜택 때문(14.0%)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

자의 이타적 행동이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매후기를 모으려는 트윈슈머(twinsumer, 다른 사람의 구매후기를 참고하여 구매하는 소비자) 마케팅은 쇼핑몰에서의 정보 생산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전이시키면서 비용절감 및 빈번한 트래픽 유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매후기 시스템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반응을 피드백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승화시켜야 전자상거래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소비자를 최고의 경영지표로 삼아, 소비자의 힘에 의존하는 시장이라는 생태계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 간 업무 조정·협업은 필수

전자상거래 10주년을 맞아 이제는 질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기업 간, 소비자 피해 담당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 구축과 협업문화가 절실하다.

전자상거래는 IT와 상거래 등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관련 규제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고 중복된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 업무의 분산체제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도화되고 진화하며 새로운 거래위험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와 감시활동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을 적시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업은 필수적이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판매자는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

고, 고객지향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고객지향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은 온라인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판매자는 고객지향적인 가치관의 공유는 물론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다루는 기관도 한국소비자보호원·민간소비자보호단체·전자거래진흥원·전자상거래센터 등으

로 다원화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정확한 집계와 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공유 체계가 수립되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의 정보화 강국으로서 협업 시스템 구축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전자상거래의 운용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협업 문화를 성숙시켜 국가 자원의 중복 사용에서 오는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 단위 기관의 성과에 급급한 미시적 안목으로는 전자상거래의 최대 장점을 국가 차원에서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지워진다.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나눠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도입 10년을 맞아 무결점의 성숙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질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자상거래는 IT와 상거래 등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규제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고 중복된다. 이러한 체제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우므로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담당 유관기관들의 신속한 정보 수집·공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규제장막 걷어야 세계가 보인다

국 내에 인터넷쇼핑 시대가 열린 지 올해로 만 10년을 맞았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新유통으로서 10년 만에 약 13조원의 시장규모로까지 성장한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가, 1996년 6월 1일 사이트를 오픈하고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인터파크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10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이상규
(주)인터파크 사장

라이프스타일 바꾼 '사이버 쇼핑혁명'

국내 인터넷쇼핑몰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백화점·할인점·편의점·TV홈쇼핑 등의 소매업종 가운데 인터넷쇼핑몰의 점유율은 2000년만 해도 2%에 불과했으나 소매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5년에는 할인점·백화점에 이어 15%까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성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저속 성장을 하고 있는 다른 업태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 구매 편리성, 이용 인구의 증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며 2008년경에는 할인점 시장과 선두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쇼

핑몰이 新유통을 넘어 소매유통의 주류로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쇼핑은 더 이상 새롭거나 혁신적인 사람들만이 즐기는 행태가 아닌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라이프스타일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슈퍼마켓도 백화점도 가지 않고 안방이나 회사 사무실의 자에 앉아서 손품 팔아 클릭 몇 번으로

반찬거리와 부모님 생일선물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군도 일반적인 유형상품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티켓 등 전문 상품과 보험, 대출, 온라인 강의 상품, 사진촬영, 인화, 각종 인력대행 서비스, 미용 서비스 상품 등 무형의 상품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와 유통을 흔들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국민생활에 큰 효용을 제공해왔고 연관 산업을 창출하며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거래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까지 하거나 유통단계가 획기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돼 실질소득을 늘려 주었다. 더불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와 전자지불결제(PG ; Payment Gateway) 업계 등 관련 업계가 동반 발전하였다. 1995년 TV홈쇼핑이 시작되면서 늘기 시작한 택배 물동량은 인터넷쇼핑몰이 고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했다. 한경비즈니스가 택배물량을 기반으로 추정한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조 6,200억원 수준으로,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소기업체까지 포함하면 시장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의 양적 팽창과 함께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도 성장했다.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는 금융기관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대금결제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전체 PG 시장 규모(거래액 기준)는 2005년 3조4,560억원(추정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온라인 광고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는 달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이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 광고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등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인터넷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넷째, 8만개가 넘는 인터넷쇼핑몰이 생기면서 사이트를 일일이 다녀보지 않고도 한눈에 가장 싼 가격의 제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가격비교사이트도 인터넷쇼핑몰의 수혜 사업이다. 2002년부터 매년 40% 이상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 2005년 처음으로 거래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다섯째, 인터넷쇼핑몰은 전국적으로 1,600개에 달하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시장 개척의 활로가 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한 재래시장 온라인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의 유명 재래시장이 인터넷에 등지를 틀었다.

인터넷파크를 비롯해 옥션·G마켓 등 마켓플레이스에 동대문·남대문 의류 시장과 제일평화 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이 직접 인터넷쇼핑몰에 의류 브랜드를 등록하고 인터넷몰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은 의류·생활잡화 등 오프라인 소매상과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유통채널이자 마케팅 경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터넷파크에서 가전·가구·화장품 등 브랜드 제품이 강한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중소기업체 상품의 비중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스포츠용품과 생활가전, 건강용품 부문에서는 기발한 아

이디어가 돋보이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주간 히트상품에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일 만큼 인터넷쇼핑몰에서 중소기업의 제품은 경쟁력이 높다.

품목제한·중복규제 등 규제환경 개선해야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려책과 사업자의 노력,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함께 어우러져 작용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사업자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은 향후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성을 통한 초고속인터넷의 저렴한 보급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전자상거래의 근본이 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공인인증서 강제 적용, 거래품목 제한 등이 전자상거래의 편리성·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 동일사안에 대한 규제가 각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내수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서명법」에 기반을 둔 공인인증서를 민간 부문에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결제대금예치제를 전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를 신설한 것은,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정책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온라인거래에 무리하게 적용하는가 하면, 외국의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점 또한 사실이다. 전자상거래는 편리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편리성과 경제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규제라는 명목으로 잔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의 결제안전을 위하여 도입된 공인인증서 정책에서도 공인인증서의 보급과는 무관하게 이를 강제 적용시킴으로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불편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된 공인인

증서 외에도 카드사에 의한 별도의 인증장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품목 제한이 전자상거래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유통이 가능한 민속주·전통주 등의 주류 판매가 온라인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전통주 생산농가의 유통경로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권리도 제한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와 자동차 중개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국내 규제환경을 살펴보면, 동일 사안에 대한 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복수의 행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규제를 행함으로써 사업에 있어서의 예측성과 적극성을 가로막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제환경이 국내 이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결제단계에서의 각종 인증절차 또는 구매안전장치의 의무화, 본인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엄격한 책임 등은 외국 이용자가 국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전자상거래업체가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에 기인하여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고 미래의 전자상거래 시장 또한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의 정책 중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내수시장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해외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정책의 나아갈 점이라고 생각한다. 신용협회

u-비즈니스 발전 로드맵 만든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IT 혁명의 본격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심화,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대두와 같은 작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에 명암이 교차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조선·자동차·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IT·BT 등 일부 성장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부상,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축소 우려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비관론과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우리 산업을 주도하였던 자본집약적 생산 또는 조립가공 산업만으로는 1995년 이후 머물러 있는 국민소득 1만달러의 뒷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여년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과, 조선·기계·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부문에서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 동 희

산업자원부 디지털전략팀장
(dhjung@mocie.go.kr)

e-비즈니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IT의 발달로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IT의 활용이 기업과 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IT 정책으로 인해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Korea'로 대표되는 IT 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 기회제공 및 활용도 등 11가지 지표를 이용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척도) 2년 연속(2005년, 2006년) 1위 등 각종 평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1970년대 금융기관의 컴퓨터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는 거래 과정에 IT를 적용하는 e-Commerce가 e-비즈니스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최근에는 ERP(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CM(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등 기업활동 전반의 IT화를 통한 가치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e-비즈니스를 구현하는 데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e-비즈니스의 도입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우선, e-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e-비즈니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관계부처에 설립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2000년 2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I, II’(2001년, 2002년)로 이어지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e-비즈니스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IT화, B2B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전자무역망 구축, e-매뉴팩처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e-비즈니스를 우리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듯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57조원에서 2005년 358조원으로 약 여섯 배 성장하였다. 이 중 89%에 해당하는 319조원이 B2B 전자상거래로, 기업업무 프로세스의 e-비즈니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소모성자재(MRO)·철강·병원·제지 등 업종의 B2B 거래는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추진으로 올해까지 약 3만4천여개의 기업에

ERP 등 정보화 기반의 설치를 지원해 왔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57조원에서 2005년 358조원으로 여섯 배 성장했으나 전반적인 e-비즈니스 수준은 일부 성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만족하기 어렵다. 즉, IT가 산업 부문의 연쇄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 인프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고속도로에 관광버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망 가입자 수, 인터넷 활용 시간 등 IT 인프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러나 e-비즈니스를 통한 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가치사슬의 경쟁력 제고 효과는 일부 성공기업에 한정되고, e-비즈니스 도입이 단순히 사내 정보화 수준에 머물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인터넷 활용도(38%)는 덴마크(70%)의 절반 수준으로 OECD 17개국 중 1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과 경쟁력 제고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IT가 산업 부문의 연쇄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 인프라로 작용하지 못하고 소비적 인프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써 깔아 놓은 고속도로에 다녀야 할 트럭은 보이지 않고 기껏 관광버스만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2006년 전자준비지수(e-Readiness Ranking)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위를 기록,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비즈니스



정부는 모바일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여 e-비즈니스를 u-비즈니스 차원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출시된 유비쿼터스 기기의 '유팩TV'

는 IT의 단순한 보급이 핵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활용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간 투입된 IT 관련 인프라가 기업의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기업 간 거래, 협력 관계의 심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위성을 간접적

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IT 시대 진입과정에서의 과열대응으로 인해 몸살을 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벤처기업들의 사업실패에 대한 기억은 현재까지도 e-비즈니스의 조속한 활성화를 머뭇거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2000년 IT 버블의 붕괴 및 닷컴 기업들의 퇴조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러나 선진 기업들은 여전히 e-비즈니스를 통한 기업프로세스 혁신 및 가치창출을 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e-비즈니스 도입 및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비즈니스를 통한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u-비즈니스의 도입 또한 적극 시도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델컴퓨터는 부품기업과의 SCM을 통하여 단순히 세계 1위의 컴퓨터 제조업체로 급부상하였으며, 시스코

(CISCO)는 공급망과 협업을 위한 'e-hub'를 통해 토달 아웃소싱을 실현하였다. 최근 소니·캐논·켄우드 등 일본의 해외진출 제조기업들이 자국으로 생산거점을 'U턴'하고 있는 것도 e-비즈니스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가치창출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월마트를 비롯한 선도기업들이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총아로 떠오른 RFID(전자태그) 도입을 통해

물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e-비즈니스는 기업 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해 기업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에서 선택이 아닌 기업생존의 필수 요건으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이 생산성 향상, 가치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이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협업·e-네트워크 강화 추진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율절상, 유가상승,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등의 외부적 위기 요인과,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대·중소기업 간, 중앙·지방 간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등 내부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 'e-협업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RFID·Mobile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e-비즈니스를 u-비즈니스 차원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수년 내에 도래할 u-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한 e-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도입,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등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걸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프로세스와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비즈니스는 미래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u-비즈니스의 발전방향 및 기업프로세스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u-비즈니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지원함과 더불어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시장형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한 최고경영자는, “2004년 닷컴기업 붐과 그 붐괴는 시작의 끝(the end of the beginning)이며 지난 20년간 화두였던 IT 혁명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지난 20년은 협력과 연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고 연마하는 기간이었다. 이제 이 도구들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진정한 IT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통해 우리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 'e-협업인프라'를 구축해 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RFID·Mobile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산업에 접목, e-비즈니스를 u-비즈니스 차원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u-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결제대금예치제’로 사기사건 STOP!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소비자 간(BtoC) 거래이다. BtoC 전자상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물은 1996년 6월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통계청 발표(2006년 5월 사이버 쇼핑물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사업체 수가 4,454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수적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거래규모도 2001년 한 해 동안 3조3,471억 원이었던 것이 2006년 1/4분기에만 3조1,476억 원으로 거래규모의 증가세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쇼핑, 편리하지만 소비자 피해 위험성 커

인터넷 쇼핑물은 그 구축이 비교적 용이하다. 예컨대, 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개설할 경우 입지 선정, 임대료 부담, 매장시설 비용 등 영업 개시에 소요되는 각종 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지만 인터넷 쇼핑물은 이러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이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손쉽게 창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sung007@ftc.go.kr)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쇼핑물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되는 반면에,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매우 새로운 측면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먼저, 인터넷 쇼핑물에서의 거래는 비대면 거래로서, 소비자가 실제로 어디에 소재하는 누구와 거래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규제적 장치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인터넷 쇼핑물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통신판매와 같은 모든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물은 가상의 공간에 구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나 구성의 변경, 삭제가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더욱이 인터넷 쇼핑물은 컴퓨터 모니터라는 제한된 화면상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를 담게 되는데, 이로부터 사업자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해구제 위한 법·제도 꾸준히 강화돼

1996년도에 인터넷 쇼핑물이 등장하던 시기부터 2002년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BtoC 전자상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상거래가 나타나기 이전의 주된 비대면 거래 형태였던 카탈로그 통신판매를 주로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제였던 관계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거래 형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인 '청약의 철회'도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그 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뀜)상의 개인정보 보호조항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99년 6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운용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동 법률상의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이 법에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도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비점포 판매라는 방식에서는 통신판매와 공통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거래라는 점에

서 통신판매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 관련 부분을 확대 개편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관

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종전과 동일한 명칭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역점을 두었던 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의 사용, 온라인에서의 거래에 관한

정보의 보존, 소비자 정보의 도용 시 피해 회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특성을 반영한 조항들을 설치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차원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이버 몰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나 거래조건을 명시하는 기준을 두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둘째, 법률 운영에 있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로서 종전의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위주에서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분쟁조정외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즉, 종전의 법제에서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가능해도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까지 담보되지는 못했었으나, 새 법률에서는 시정조치 전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피해 구제에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게 하였다.

셋째,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으로서, '청약의 철회' 조항이 강화되었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받아본 후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소

인터넷 쇼핑물은 구축이 용이하고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에게 좋은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희망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위 '변심철회'가 인정되지 않아서, 비대면 거래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비자로서는 배송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물건을 받은 후에는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제정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7일간의 변심철회를 인정하였고, 다만 형평성을 감안하여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배송받은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등 사업자 쪽에 철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에 20일의 철회기간이 인정되던 것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알려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더욱 강화하였다.

'결제대금예치제'로 소비자 보호 강화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관련 피해구제 사례의 비중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거래 규모의 가파른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의 기만적 상술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유형의 통신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서도 선불식 거래 관행이 만연되어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저가판매를 미끼로 대금을 선불, 특히 현금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 후 대금만을 받고 잠적해 버린다면 소비자로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실제로 2003년도에 있었던 하프플라자 사건의 경우 9만명의 피해자에게 15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고,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격비교사이트를 악용하여 시중가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가격을 인터넷 쇼핑몰에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눈길을 끈 후, 현금으로 선불된 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유형의 수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이러한 선불결제 관행을 악용한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5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업자)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금융기관의 채무지급 보증계약도 가능)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불과 넉달여가 지났을 뿐인데, 1만3천



개 이상의 사업자(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등 다른 유형의 통신판매업자도 포함)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계약을 에스스로 사업자 또는 보험업자 등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자별 개별 안내매일을 보내거나 지하철 광고를 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사업자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조만간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소비자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이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제도 실행을 준비해 놓았다고 해도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정보만을 기준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신뢰성이나 거래 안전장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의 태도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의

출현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최근 서서히 그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M-commerce 또는 T-commerce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래 방식에서 어떻게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게 할

것이며, 기만적인 행위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 BtoC 전자상거래의 중심이 개별 쇼핑몰에서의 거래로부터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률상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부분적인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명확한 책임 범위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방식의 출현에 대응한 행정적·규제적 측면의 대책뿐만 아니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소비자 정보를 더 쉽게 더 빠르게 제공하는 채널의 구축과 함께,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단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의 구축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결제대금예치제’는 선불결제 관행을 악용한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참여는 물론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이 요구되며, 거래 시 가격정보뿐 아니라 사업자의 신뢰성이나 거래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태도도 중요하다.

〈표 1〉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건,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상담건수	355,750	311,235	321,934	272,942	294,580
전자상거래 상담	5,288	10,760	20,165	17,673	25,141
전자상거래 비중	1.5	3.5	6.3	6.5	8.5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분석(200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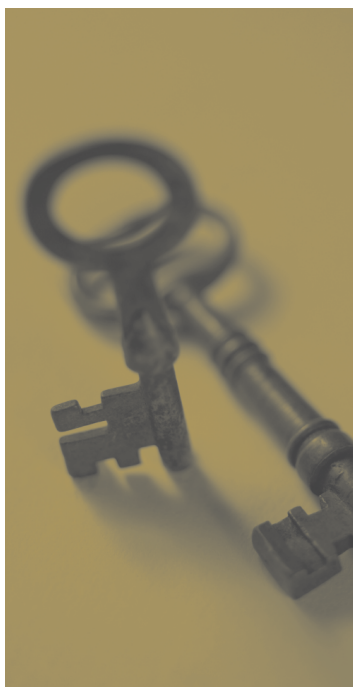
〈표 2〉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피해구제 총 실적	20,644	23,225	22,693	19,649	21,828
전자상거래 피해	628	1,045	2,081	1,666	3,248
전자상거래 비중	3.0	4.5	9.2	8.5	14.9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분석(2006. 3.)

하반기 경제 운용



60 일자리 창출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에 주력 / 윤종원·재정경제부

65 중장기적 정책시계(視界)가 필요하다 /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69 투자 걸림돌 제거 더 과감하게 /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73 한·미 FTA 의연하게 추진하라 /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고유가, 세계적 금리 동반상승 등 경기 하락 위험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취임한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겠다.···위험요소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고,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일자리 창출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에 주력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jyoon@mofe.go.kr)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경기관리 노력과 부문별 대책을 추진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 부문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노력을 강화하며, 구조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스템 혁신과 대외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각 부처와 연구기관, 일반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에 착수하여, 지난 7월 6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였다.

상반기 경제, 양호한 경기흐름 지속

우선 상반기 경제를 돌아켜보면, 경기 측면에서는 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크게 달라졌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1분기 성장률이 6.1%를 기록하였고 2분기는 5% 중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성장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소비 등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대로 1분기에 6.9% 증가하는 등 개선되었으나

건설투자는 순환주기상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진정됨에 따라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호조로 상반기 중 14% 수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19%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었다(2005년 상반기 70억달러 흑자→2006년 상반기 5억달러 수준 적자).

고용은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상반기 중 당초 예상했던 35만명보다 줄어든 31만명 증가에 그쳤으나, 소비자 물가는 상반기에 2.4%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체감경기는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당초 예상

보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실질성장률(GDP)은 1분기에 6.1%에 이르렀으나 실질구매력을 반영하는 소득지표(GNI)는 1.3% 증가에 그치는 등 양자의 괴리가 지속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은 아직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있다.

또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고 있으나 그 상당 부분이 해외소비나 수입자본재 증가로 나타남에 따라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소득분배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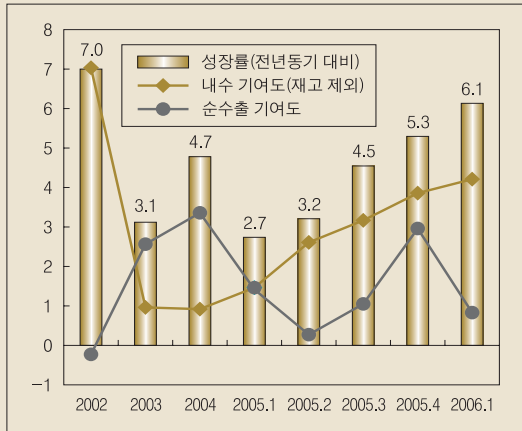
연간 5% 성장, 35만명 고용 증가 예상

하반기에는 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경기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IT 경기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유가는 이란 핵 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럴당 60달러대의 고유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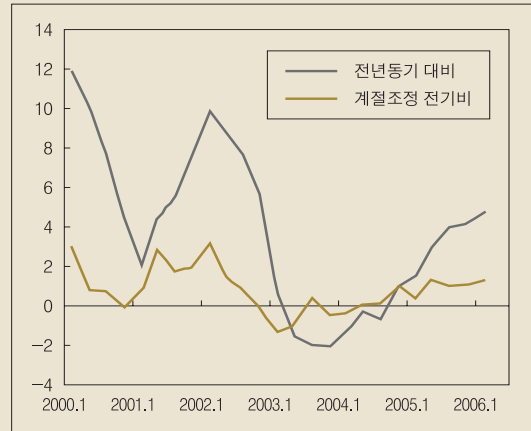
〈그림 1〉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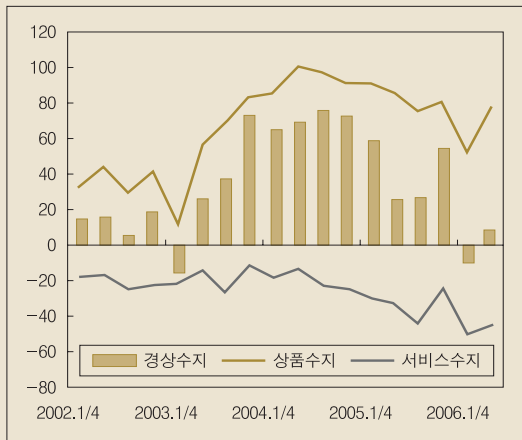
〈그림 2〉민간소비 증가 추이

(단위: %)



〈그림 3〉경상수지 흑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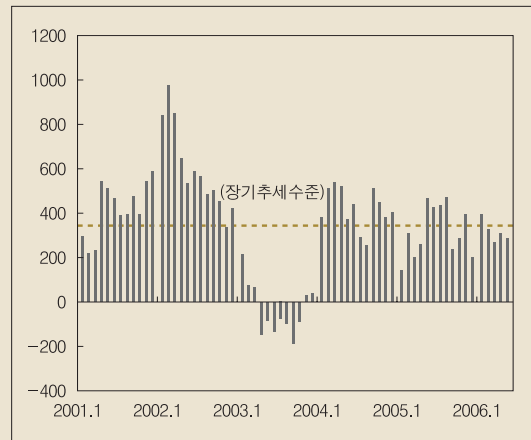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주: 2006. 2/4분기는 추정치임.

〈그림 4〉취업자 수 증가 추이

(단위: 천명)



민자사업 및 기업·혁신 도시 추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촉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북 광역재개발 추진을 가속화하며 투기 억제 관련 지역·지구 제도를 통합할 것이다. 또한 출자총액규제 대안 조기 마련,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등 전반적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소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주요국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위험 요인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심리지표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경제성과 부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는데,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진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유가·환율 등 하방위험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5%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는 상반기 5.8% 내외의 성장에 이어, 하반기는 지난해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의 반사효과로 성장률이 4%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외 전망기관의 견해를 종합한 ‘합의전망치(consensus forecast)’는 평균 5.1%, 중위 5.2%로 나타났는데, IMF·OECD 등 해외기관이 낙관적인데 반해 국내 민간연구소는 4%대 후반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함께 4%대 증가세를 나타내고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에 따라 7%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2%)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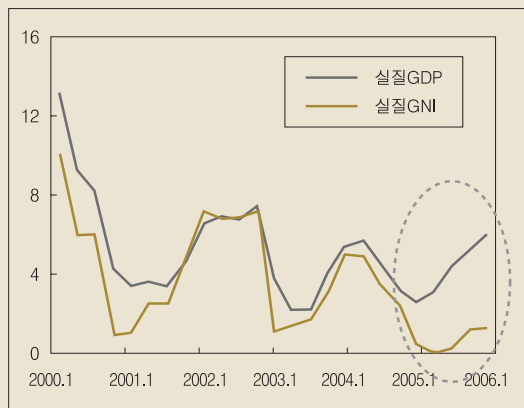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고용은 경기 후행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전망(35~40만명)보다 다소 줄어든 35만명 내외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물가는 3% 내에서 유지될 것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 디플레이션 해소 등으로 상승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 영향 등으로 흑자가 40억달러 내외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가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 소폭 적자를 나타낼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의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수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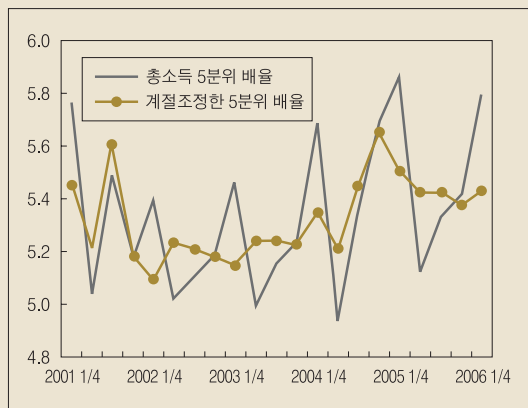
〈그림 5〉실질GDP와 실질GNI

(단위: %)



〈그림 6〉소득 5분위 배율

(단위: %)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발전기반 구축에 주력

하반기 경제정책은 이성과 같이 여건과 전망이 달라진 부분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필요한 내용은 보완·확충되 전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강화하는 틀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은 ①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경기관리 노력과 부문별 대책을 추진하고 ②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 부문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노력을 강화하며 ③구조개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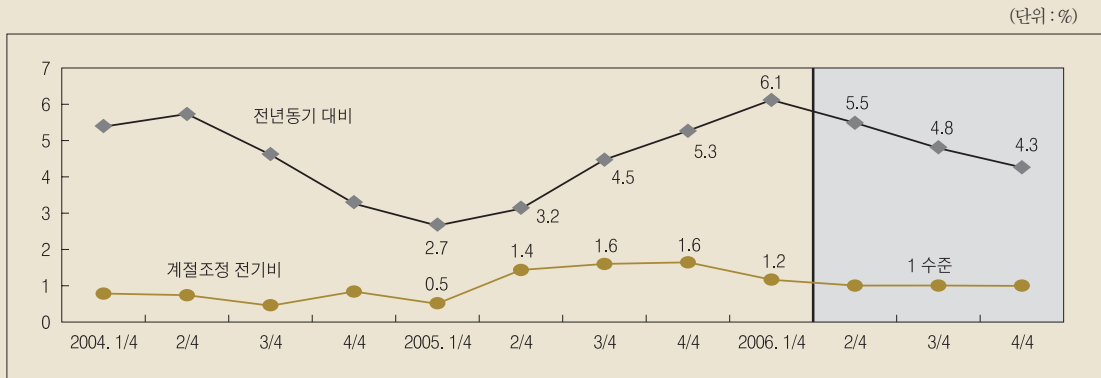
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스템 혁신과 대외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대책에서는 고용·건설투자·경상수지·재정·경기·물가·금융·외환·국제협력의 네 변수가 당초 예상보다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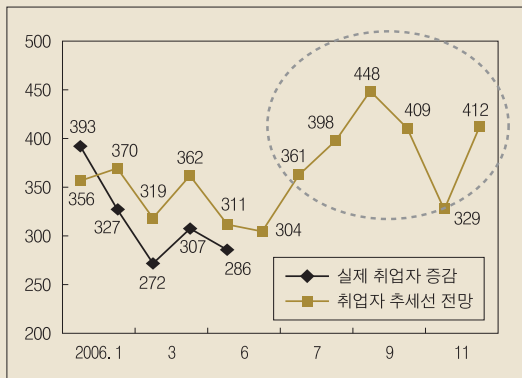
경기회복세 지속되도록 거시경제를 관리

우선, 경기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재정의 경우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아 하반기 중 여력이 있으므로 올해 예산이 불용·이월 없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리도 실물경기·물가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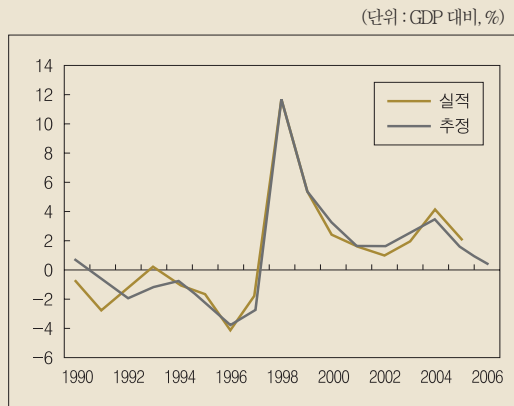
〈그림 7〉 2006년 분기별 성장 전망



〈그림 8〉 고용 전망



〈그림 9〉 경상수지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가 줄어들 경우 거시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흑자기반은 강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고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건설투자의 경우 인위적인 부양책은 경계하되, 민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업·혁신 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애로 해소(troubleshooting) 등을 통해 투자 부진이 보완되도록 하였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복잡했던 부동산투기 억제 관련 지역·지구 제도를 통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택 청약제도도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소득·가구원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를 감안하여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다.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해 20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요금 조정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서민생활 안정의 관건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함께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지속하고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등 입지·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

은 세 부담 경감 등 단기적인 지원책도 추진하되 이들 부문의 어려움이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된 것임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비전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확대,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脫빈곤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경쟁력 제고 위한 시스템 혁신과 대외 개방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노동·자본 등 고정적 재화보다는 혁신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므로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통합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원화가 국제적으로 보다 널리 통용되도록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상장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표 양성화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효력상실 시한 즉, 일몰(日沒)이 다가오는 55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장의 견제·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데 맞추어 출자총액규제의 대안을 가급적 조기에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제도를 선진화해 나갈 것이며, 선진 노사관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을 추진할 것이다.

韓·美 FTA 등 능동적 개방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학교·병원 유치 등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 정책시계(視界)가 필요하다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jun@ewha.ac.kr)

중장기적 정책시계에서 경제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대기업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개혁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회적 지원을 탈피한 획기적인 구조조정, 해외생산·업종전환 등의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보면 그 기조나 내용에 있어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었던 지난 몇해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에 충격을 줄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고유가의 지속과 국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소비·투자 심리를 부추겨 줄 결정적인 견인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보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대체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일 경제의 상승 기류가 현 시점에서 꺾인다면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은 보다 중장기적 정책시계(視界)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소비·투자 침체는 경제구조적 문제

이러한 관측은 실제 금리나 세금과 같은 가격유인이 단기적 수요 조정에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현실과도 결부된다. 지난 몇해 동안 지속되어 온 소비나 투자 침체의 주원인 자체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전통적 거시정책 수단은 어차피 실효성이 제약적이다.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이자부담과 일자리 등 미래소득의 불안감 증폭에 따른 심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 위축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투자가 크게 나아진 바 없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도 미미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당장 크게 늘 까닭이 없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보증 차입을 통한 시설확대 메커니즘이 깨지면서 투자위험을 흡수해 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국내시장의 경쟁 수준도 이제는 해외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찾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본비용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수의 양 축인 소비와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일자리의 경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성장이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고용효과가 높은 내수나 중소기업은 침체하고 수출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신규 일자리 창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통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은 고용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부진한 것도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규제완화·중소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관건

노동시장 자체의 구조적 불균형 역시 경제주체의 일자리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종신고용 관행이 사라지면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는데, 이는 그만큼 고용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신규 취업자들의 어려움이 증폭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직장 안정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투자 활성화의 경우도 노사관계 개선이나 규제개혁 차원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한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최근 들어 노사갈등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이 특별히 더 불리해진 것은 없다. 다만, 경제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와 보증 차입 관행의 소멸 등 구조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에 있어 정부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부분적인 도움만 될 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하나만 가지고도 몇해를 끌며 해답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韓·美 FTA와 같은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단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개방과 자율화의 여파로 노동시장 유연성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방어적 노조활동은 단기적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경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적어도 자체 연구개발과 교육 훈련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이러한 진단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성숙과 재정수단의 개발을 통한 투자위험 분산은 정부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생산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대기업의 해외수주 증가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 상당수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이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내기 힘든 한계기업들의 경우 일시적인 정부 지원보다 해외생산이나 업종전환과 같은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중소기업 대책들은 나름대로 적절한 처방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단편적 대안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부

품·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대책도 현 수준보다 강도를 높여 정부 차원의 '전략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전략적 사고 절실한 산업정책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보면 문자 그대로 특정 산업과 그 산업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래의 산업정책은 백화점식 목표 나열로 행해지지 어렵다. 예컨대,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시혜적인 정부 지원을 중소기업 정책의 골간으로 삼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 기반을 갖춘 중소기업 군을 창출할 묘안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 개방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장 영역이 넓어지고 국가 간 기술 전파가 빨라진다고 해서 기존의 선도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다. 해외수주 및 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 대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은 국가 간 수평적 분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내가 할 일과 외주에 의존할 일을 구분한다. 그만큼 사업 파트너를 정하는 일도 복잡해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대기업 전략을 따라가 스스로 새로운 국내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통 제조업에서 IT 산업이나 유통·금융 등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 전환에도 적응이 힘든 형편이다.

산업의 연계 및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 업종 구분이 모호해진 경우도 많은데, 이는 R&D가 활발한 기업에게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R&D와 이를 인적으로 뒷받침할 교육훈련이 없다면 기업 활동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과거처럼 단순히 국내 대기업의 편한 하청기업이 될 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살아남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판국에 모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얘기만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자명하다. 한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정치적 제약을 인식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도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게 하려면 일회적인 투자지원을 탈피해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정부 예산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중소기업 논의에서 보듯이 개방과 정보 시대의 경제정책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나아가 노동정책은 분리해 생각하기 힘들다.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대기업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좀더 세련된 산업정책의 틀에서 노동정책과 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개방과 민주화의 여파로 정책목표는 더 많아지는 데 비해 전통적 정책수단은 점점 제약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수록 보다 창의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정책수단 간의 적정 조합을 통해 정책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정책 방식에 매달리거나 '정책의 평준화'와 같은 분산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는 날로 넓어지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정책의 전반적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도 이러한 고도의 경제전략을 감당할 꼭짓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 소수의 대기업만 남게 되고, 이는 경제력의 집중과 불균형이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정치논리 포괄하는 재정정책 필요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중장기적 시계가 필요한 또 다른 분야는 정부 재정이다. 최근 들어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부족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금리나 환율정책의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재정의 총수요 조절 기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이다.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줄면서 규제나 준재정 활동이 정상적인 예산과정에 편입되는 부분도 늘게 될 것이다. 물론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조세와 정부지출은 사유재산권의 이전과 재분배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의 정치적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복지나 재분배와 관련된 지출에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을 위한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항목이라 하더라도 ‘갈라먹기(pork barrel)’ 관행이 판을 친다.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언제나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몫이 커지는 것이 재정지출의 현실이다.

세금의 경우도 단순 경제논리로 정책을 펴면 실패하기 쉽다. 보통 세금 1원 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정치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정정책을 다룰 때 흔히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 부분이다. 1,000원을 거두어 1,100원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도 조세비용이 100원보다 크다면 실패한 정책인 것이다.

특히, 과세베이스가 좁고 세금이 제공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약한 나라일수록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힘들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데도 조세저항이 심한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제 비교와 같은 무모한 단순논리나 이론적 합리성만 생각하는 순진한 경제논리를 뛰어넘는 사고가 아쉽다.

최근 정부가 재정수단에 의존해 경제정책을 운영

하는 몫이 커지면서,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재정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한 탁상공론형 정책입안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적어도 조세의 정치적 비용은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5월의 지방선거 결과를 본 다음 어떤 정치인이 용감하게 세금인상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판국에 모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얘기만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자명하다. 감세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정치적 제약을 인식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도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는 신중한 자세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세금 징수가 용이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한 총수요 활성화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결국 내수진작은 소비와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을 과거처럼 마냥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출의 집행 속도와 실효성만 높아진다면 경기수용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자재정을 겁낼 이유가 없다. 어차피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장기 세제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좀더 국민의 실득을 구하며 정부의 정책자원도 늘릴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중장기적 시계에서 정치논리를 포괄하는 전략을 짜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 걸림돌 제거 더 과감하게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ysshyn@kif.re.kr)

투자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민간소비가 서로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하반기 경기와 성장잠재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의 투자부진이 경기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5% 후반대의 높은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계의 체감경기 악화

물론 이러한 경기상승세 둔화의 중심에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원화 강세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따른 중동 불안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올해 경제전망의 기준이 되었던 수준(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56달러)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성장둔화의 우려가 확산되는 등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적으로도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및 실질 GNI 등 기업 및 가계의 내수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주가·일자리·임금 등 그동안 경기 회복을 이끌어 왔던 요인들이 모두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해 오던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올 2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최근까지 국내경제의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분기 성장률이 6.1%에 달하면서 지난해 4/4분기 5.3%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2/4분기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4~5월 중 설비투자과 도소매판매 등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산업생산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전년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생산도 5% 중반대의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상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수요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회복 속도가 이미 둔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즉, 1/4분기의 높은 성장률은 재고변동에 따른 일회적인 불규칙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1/4분기의 실질 GDP 중 재고를 제외한 소비·고정투자·순수출 등 순수하게 수요측면만을 반영한 성장률은 5.0%에 불과해 지난해 4/4분기 6.8%에 비해 오히려 크게 하락하였다. 수출의 경우도 연초 원화절상과 유가급등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0%대 중반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이마저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1~2%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려되고 있는 것은 발표일자가 최근일수록 각 기관의 2006년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선행지표 및 체감지표로 보았을 때 경기주체들의 경기상승국면 지속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있

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하반기 이후에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불확실 요인은 고유가 및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소비가 둔화되리라는 전망은 고유가와 일자리 증가폭 축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올해 1/4분기 중 6.1%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 GNI 증가율은 1.3%에 그쳤으며, 일자

리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하락(평균 취업자 수: 1/4분기 33만명, 2/4분기 28만3천명)하고 있다.

올해 배럴당 50달러 중반 정도로 예상되었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7월 15일 현재 7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와 이에 따른 내수둔화 및 수출감소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원유수입단가가 10달러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올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원/달러 환율도 예상과 달리 연초에 급락하였으며, 비록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환율의 움직임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보면 기업수익성을 악화시켜 수출과 내수를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유가의 10달러 추가 상승과 함께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5% 하락하는 경우 국내 하반기 성장률이 0.4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기가 언제쯤 정점을 통과할지에 대한 선행종합지수를 이용한 지수분석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전후로 해서 경기가 정점을 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상승세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 경기 상승의 모멘텀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4%대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투자부진이 성장잠재력을 훼손

비록 상승률이 하반기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하반기 4%대 성장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4%대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아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관건은 투자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GDP에서 고정자산투자(=건설투자+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8.9%에서 2005년 28.8%, 올해 1/4분기에는 25.2%까지 거의 13%p 이상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990년대 7~8%대에서 4%대로 빠르게 하락한 것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내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지속적·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며, 금융·법률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투자부진에 따른 추세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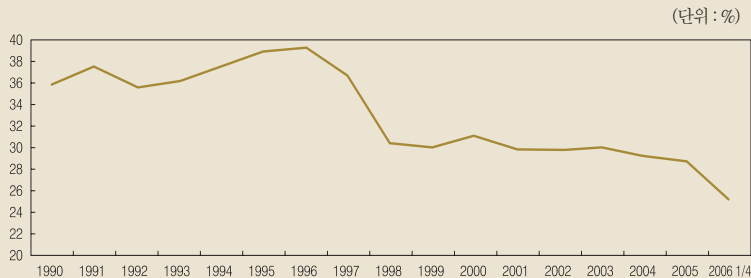
이런 현상은 최근 몇년간 더욱 두드러져 설비투자 증가율은 거의 0%대에 머물고 있어 성장잠재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비록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설비투자가 7%대 전후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장기간의 투자부진과 손상

된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올 상반기에만 제조업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7만5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상반기 10만4천개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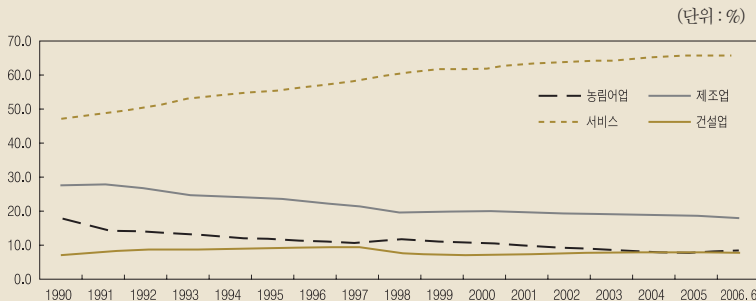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수가 조금씩 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상대적으로 상용직이 많아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제조업의

〈그림 1〉GDP 대비 총고정자산 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절노동이나 지방정부의 임시직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35~40만개로 잡았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35만개로 낮춰 잡았으나, 6월 중 실제로 증가한 일자리 수는 25만5천개에 불과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조업 부문의 투자 부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현재 수준의 소비가 향후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근거이기도 하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관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민간소비가 서로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하반기 경기와 성장잠재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의 투자부진이 경기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고려한다면,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가장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대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성과는 미진한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소니社와 함께 충남 아산 탕정에 2007년까지 총 19억달러 상당의 LCD 라인 신규투자를 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생산유발 효과가 7천억원을 상회하고 직접고용은 1천명, 총 고용효과는 1만8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 질트로니크社와 함께 싱가포르에 4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8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직접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2,700만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공

장은 원래 우리나라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합작파트너인 질트로니크社가 열악한 우리의 투자환경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싱가포르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서비스 제도개선 필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내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투자 관련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또한 전향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출자총액한도제와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포함된다. 이는 업종 다양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며 적절한 부채관리와 출자관계가 문제가 없는 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D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현행 500만달러 이상 투자)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그린필드형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와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금융, 법률, 디자인, 공연·예술, 게임·영화산업, 교육, 관광·레저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집중 육성해야 할 서비스업종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서비스협상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서비스부문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미 FTA 의연하게 추진하라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chan_huh@keri.org)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생적 견고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은 매력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 감소는 꼭 새로운 대규모 감세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지금보다 납세자 수를 늘려가며 세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며,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의 경감이 이러한 방향과 일치한다.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3년 넘게 부진 하던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원화절상·고유가 등의 악재로 인해 내수회복세 지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소규모 재정지출 증대 등 진부한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심적·물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는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성장률이 아니라 산출량 갭이 경기판단의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현 경제상황 판단과 관련된 논쟁 시 아직도 실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에 비교하는 잘못된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경제의 현재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이다. 소득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다.

경기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GDP가, 경제 전체가 큰 무리 없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준, 즉 잠재 GDP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따져야 한다. 두 수치 간의 차이를 '산출량 갭'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를 경기상황 판단의 척도로 쓰고 있다. 산출량 갭이 크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실제 생산량이 작으니 이는 총수요 부족, 또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성장률 비교와 산출량 갭의 바람직한 이해를 위해 좀더 쉬운 예를 들어 보자. 두 대의 버스가 부산을 향하여 서울에서 동시에 출발하였다. 중간에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두 버스 사이의 거리가 크게 벌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앞 버스는 천안을 지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버스는 수원에도 못 미쳤다고 하자. 경기 상황 판단의 기준으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에 비교하는 것은 마치 뒤차의 운전사가 앞차의 운전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비슷하게 있어야 할 두 차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운행속도가 아니라 두 차간의 거리이다. 즉, 맞는 질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가 되어야 한다. 먼저 앞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여야 뒤쳐진 버스가 앞차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속도로 운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성장률 5%? 4%?

민간연구소는 물론 정부연구소 등도 지난 2~3년 동안 적지 않은 산출량 갭이 쌓여 왔다고 보고 있다. 시각차는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성장률이 5%는 훨씬 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속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출량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 성장률이 6~7%에 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떤 전망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도 이에 근접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재미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전망기관들 사이에 연간 전체에 대한 성장전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올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높은 그룹(5%대, 편의상 고성장파)과 낮은 그룹(4%대, 저성장파)으로 나뉘고 있다. 보통 연초에는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나지만

이번처럼 한 해의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대개 공공 전망기관이 고성장파이고 민간 전망기관이 저성장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각 기관들의 전망치들이 더디게 수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각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넓게 당위성을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를 살펴보자.

특히, 이번의 경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생적 환경의 현재와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이들 환경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가 그 근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저성장 시각의 한 예로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의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유가의 수준이 매우 높고, 높은 유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망과 관련하여 고유가가 위협요인으로 지목된 지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해 말 이후 가파르게 절상하면서 단기간에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원화절상은 원유의 원화표시 도입단가를 낮추어 첫 번째 악재 요인인 고유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상승압력을 상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환율의 가파른 움직임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라는 두 가지 경로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의 큰 특징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매우 부진했다는 것이다. 수출채산성 추세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표〉는 2004년 4분기부터 계속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왔으며, 그 주된 원인이 원화표시 수출단가의 하락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는 호황을 누리는 것 같았던 수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표〉수출채산성 변동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증가율)						
	2004		2005				2006
	3/4	4/4	1/4	2/4	3/4	4/4	1/4
수출단가, 원화표시(A)	10.9	5.1	-4.8	-7.4	-7.4	-6.2	-4.3
생산비(B)	6.9	6.1	2.8	1.9	1.6	0.2	3.2
수출채산성(A-B)	3.8	-0.9	-7.4	-9.1	-8.9	-6.4	-7.4
원/달러(기간평균)	1,155	1,092	1,022	1,008	1,029	1,037	976



지난 7월 10일 서울에서 시작된 한·미 FTA 2차협상에서 협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가 투자 부진, 신규 고용 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 고용추세는 이런 수출채산성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04년에 수출 증가세가 수출채산성 향상과 같이 나타나면서 제조업 고용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수출과 제조업 고용의 상관관계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2005년 수출 금액(2000년 실질가격 기준)은 9.7%, 제조업 생산은 7.0% 증가했지만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이는 약 2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원화환율 절상이 수출 호조세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저감시켰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이런 환율 추세가 그동안의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압력을 크게 중화시켜준 바 크다. 절상 추세의 용인은 실물경제에 분명한 부담요인을 가증시킬 것이나 물가안정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실물경제 상황이 시원치 않은 가운데 이런 저울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환율정책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환율정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정책 스탠스 결정은 결국 기타 정책 수단,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먼저 통화정책을 살펴 보자.

지출 증대보다는 부담 감소에 초점 뒤야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 정책금리 인상 추세는 미국을 필두로 유럽·중국과 최근 일본에서도 시작되었다. 일견 범세계적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경제와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근래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실제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을 상회하여 역(逆)의 산출량 갭이 누적되어 왔다. 물가 추세를 보면 미국의 경우 뚜렷한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은 십년 넘게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이 종식되면서 그동안의 제로금리정책이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유가 등의 여파로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증가할 조짐이 있어 조만간 소비자 물가도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실물경제의 회복세 조로화(早老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환율과 금리정책을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두 정책 수단과 실물경제 안정 및 물가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있다. 두 가지 수단과 두 가지 목표 간 짝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만약 금리정책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결정된다면 환율정책은 실물경제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입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주요국 금리인상 추세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의 금리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꼭 이런 정책수단과 목적과의 조합이 유일한 것은 아니나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짝짓기(pairing)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생적 견고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은 매력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실효성이 낮았던 지난 수년간의 진작책의 경험이 그 근거이다. 아울러 그동안 연금제도의 세대 간 부담 문제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소비자들도 재정지출 증대와 이에 따른 부담의 세대 간 이연현상, 즉 리카르도 가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재정지출 증대의 효과를 저감시킨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담 감소는 꼭 새로운 대규모 감세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주문하듯이 지금보다 납세자 수를 늘려가며 세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의 경감이 이러한 방향과 일치한다. 보유세 인상 스케줄 조정, 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

원활한 거래는 역설적으로 거래세 세수 확대라는 혜택도 가져다준다. 주택 판매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부분적으로 소비진작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은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조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규제완화도 정부가 보유한 중요한 수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득실은 명분보다 실리를 바탕으로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반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면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의 기반이 순전히 철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어 고집하는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입지(立地) 못하는 생산설

비가 국내 비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해외로 이전한 경우보다 많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미 있는 균형발전은 위치에 상관없이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 어느 곳에서나 높은 소득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미 FTA, 現정부의 최고 업적 될 것

한·미 FTA는 우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참여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다. 지금까지는 충분한 對국민 설득 노력이 부족해 관련된 논란이 혼탁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넘어 온갖 종류의 정치적 시민단체, 기회주의적 이익집단, 사이비 전문가들에 의해 반대운동이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FTA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거의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여 온 우리 경제의 모습이야말로 왜 외국과의 교역이 중요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미국은 개방된 대외교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경제로서 직·간접적인 투자와 무역을 포함한다면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한·미 FTA 추진결정의 바탕에는 미국과의 교역 확대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내부의 냉정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기본적 논리에 바탕을 두어 국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노력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물 건너간 것이 된다. 아마도 유일한 대안은 포괄적 WTO 다자협상 타결인데, 이는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FTA는 소수의 국민이 단기간 불이익을 겪지만 다수의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장기적 후생 향상을 우선시하는 의연한 선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방 경제교육 목마름 해소할 ‘지역경제교육센터’!

- 부산·대구·광주·대전 4개 광역시, 7월부터 본격 활동



대구·경북 경제교육센터 개소식(7월 19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와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지역경제교육센터’가 7월 문을 열었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각 지역별 4개 광역권에 경제교육센터가 될 전문 경제교육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정을 맺어 자문이나 현장 지도, 성공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은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지방에서의 경제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지역경제교육센터 개설은 지방의 내실 있는 경제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각 지역경제교육센터는 7월 말 사회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교육 대상은 해당 지역의 청소년, 중·고교 교사, 지방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소상공인 등이며 교육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제시하는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되, 각 지역센터별 대상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개발·운영될 예정이다. 중·고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물가변동과 안정대책’, ‘세계화와 지역화’와 같은 고교 심화과정을 겨냥한 강의가 진행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시장경제의 이해’, ‘수요와 공급’ 등 경제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강의가 실시된다.

※ 지정기관 현황

	현황	경제교육센터	
		개소일	연락처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시 출연 재단법인 연구기관(원장 김영삼) - 1992. 8 개원(동남개발연구원) - 조직 현황: 6개 부서 82명(연구인력 39명) - 홈페이지: http://bdi.re.kr	7월 19일	051-860-8676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시·경상북도 공동출연 재단법인 연구기관(원장 홍철) - 1991. 6 개원, 2004. 12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개칭 - 조직 현황: 10개팀 5개 센터 80명(연구인력 54명) - 홈페이지: http://dgi.re.kr	7월 19일	053-770-5063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광주시·전라남도 공동출연 재단법인 연구기관(원장 오재일) - 1991. 12 전남발전연구원 개원, 1995. 6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 조직 현황: 총 34명(연구인력 23명) - 홈페이지: http://kodi.re.kr	7월 21일	062-230-9112
대전발전연구원	- 대전시 출연 재단법인 연구기관(원장 박광섭) - 2001. 3 대전발전연구원 개원 - 조직 현황: 5개 부서 27명(연구인력 20명) - 홈페이지: http://djdj.re.kr	7월 21일	042-471-5620



죽음의 경제학

예컨대 국제경제학을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국가 간, 기업 간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행위를 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자. 그렇다면 노동경제학은 노동이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 측의 입장은 어떻게 공급 측은 어떤 경향을 보이며, 이들이 거래를 이루는 노동시장은 그 균형에 이르는 데에 있어 일반 시장과는 달리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죽음의 경제학’도 상기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죽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거래, 이를테면 잔여 재산의 적절한 처리,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질병에 대한 대처, 살아 있는 날들 동안 얻고자 하는 즐거움 등등에 대한 금전적 지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죽음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잠시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말은 죽음과 경제학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좀더 명확히 하면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덜 생경하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경제학이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및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 학문이다. 모든 것이 경제로 측정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석유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이 급증하는 소비수요에 비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경

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용한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봉이 김선달이 거저 팔았다는 물도 이제는 많이 오염되어서 값을 치르지 않고는 맑은 물을 얻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아파트 뒤편의 맑은 공기와 새소리도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고 일조권 분쟁도 금전적 보상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귀착되고 있다.

옛날 옛적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는 길쌈을 하고 남편은 밭을 갈아 삶을 유지하던 시대는 최소한의 재화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던 자급자족 경제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고비로 대량생산과 대중소비가 촉진되었고 이들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거래시키기 위한 시장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이에 반해 통제 당국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생산에 참여한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몫을 배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제를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물론 전통적 관습에 따라 생산할 품목과 생산해서는 안되는 품목이 정해지고 소출의 일정 부분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 경제는 전통경제인 것이다.

죽음의 경제학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역의 비중이 큰 현 상황에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국민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업 역시 획일적이고 대량생산에 의한 상품판매가 아니라 다층화된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찾아 생산·판매를 해야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도 많으니 하나만 낚아도 좋다는 가족계획 구호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노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노동인구 계층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신생아 수당이 신설되고 있으며 자녀의 수는 소득과 비례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꿰뚫고 지나가며 만들어 내는 격랑, 소위 트렌드의 대반전이 단번에 격세지감으로 다가온다. 바로 이 점이다. 보통의 월급장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라야 집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인데, 자식들이 이제는 노후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시 하는 때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복지국가도 아닌 상황에서, 더욱이 길어진 평균 수명, 더 늘어나는 노인성 질병 등에 맞추어 서글프지 않은 여생을 살다 가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은 퇴직 이후의 경제적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느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이 가진 돈을 어떻게 적절히 나누어 활용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들의 빅 트렌드가 된 것이다.

금융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랑 남은 이들의 집을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집을 저장 잡혀 평생 동안 월급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모기지론이며 역모기지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은 특성상 그 비용이 소소하지 않아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

론 건강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첨부하여 판매하는 생명보험류의 상품은 주택과는 달리 그 상품 판매시점이 젊은 날로 옮겨져 있다. 젊어서부터 노후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꿈과 인생을 직장을 통해 실현한다는 패기에 찬 명사의 말은 아마 어찌면 노후와 죽음에 대한 대비책에 밀려 그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니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 붓는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보편적인 중년의 인생철학이 될 수 없다. 황혼 이혼이 두려운 소심한 월급장 이들은 이제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을 것

이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즐기던 술과 담배를 멀리할 것이고, 건강식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늘어난 수명은 해외여행이나 여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일에 치여서 변변히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이 시대의 월급장인들이 노후 여가에 대한 생각을 안할 리 없다. 다양한 서비스상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여가산업 업체들이 이를 놓칠 리도 없다. 공공 및 사립 양로시설도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은 물론 호스피스 등 부수 인력도 늘어날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노후계층의 문화도 발달할 것이며,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다.

죽음의 경제학이 경제학이라는 접미어를 가질 만큼 비중있는 것이, 그 인구 규모가 적지 않으며 퇴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 향후 국민경제에서 노후계층이 갖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우울한 과학’이라는 별칭의 경제학이 죽음의 경제학에까지 이르는 것은 서글퍼 보이지만, 전보다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 더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하자. ■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splee@kdi.re.kr)

(한국형 특허시스템) 'PCT-ROAD'를 세계 최고 브랜드로 키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급증하는 특허출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 분야의 전자정부 구현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3국 특허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은 자국 특허행정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 특허청에 보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3국 간에 기술회의를 개최해 지적재산권 정보화 분야의 국제표준은 물론 관련 제도 및 규범을 주도하고 있다.

美·日·유럽이 특허행정시스템을 좌우

3국 특허청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지재권 분야의 국제협력 구조는 특허행정의 소프트웨어를 전산화한 방대한 특허넷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특허넷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다른 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채택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특허넷시스템을 전면 재개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지재권 분야의 세계표준이나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수준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국제협력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



이병엽

특허청 정보기획팀 서기관
(kosma777@hanmail.net)

영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3국 특허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특허넷시스템은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훌륭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특허청은 자국의 특허행정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IT 인프라 미비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및 선진 특허청의 PCT 자동화에 대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WIPO는 PCT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해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전세계 출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최대 300 스위스 프랑(약 28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회원국을 위한 PCT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국제표준화 및 글로벌

마케팅을 위하여 WIPO에 이 소프트웨어를 무료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지(整地) 작업은 자국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추진 및 해외에서의 자국 정보시스템의 의존도를 강화시켜 결국 글로벌 마케팅으로 연결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 특허청은 유럽특허상표시스템을 약 4억원의 가격으로 각국 특허청에 판매하고 있다.

국제표준시스템 'PCT-ROAD' 우리 손으로 개발

WIPO와 유럽 특허청의 시스템은 각각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WIPO 소프트웨어는 PCT 전자출원 제출만 가능한 사용자 소프트웨어로 각 PCT 수리관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은 회원국들이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럽 특허청이 개발한 시스템은 훨씬 복잡하고 고가의 로열티 부담으로 회원국의 손쉬운 활용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덧붙여 각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각국은 유럽 특허청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자국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WIPO는 세계 최초로 전자출원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 특허청을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청은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시스템 규격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훨씬 간단하고, 각국의 기존 시스템에 의존되지 않는 독립된 시스템 규격(Stand alone 시스템)과 로열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 회원국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기능 모듈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 개발해 사용 중인 'PCT-ROAD (국제특허시스템)'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PCT 회원국 50여개국을 대상으로 유상보급을 추진하고, WIPO를 통한 홍보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개선에 나서는 한편, APEC·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지재산 정보화 협력사업을 추진, 한국형 정보시스템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을 검토하여 WIPO에 PCT-ROAD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특허넷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청의 정보시스템이 세계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한 것이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었다. WIPO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청의 제안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

속으로는 'Ok, That's good idea'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WIPO 주도의 시스템인 웹 호스팅(WIPO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된 전자출원 접수시스템) 기능을 제안하였다. 때문에 회의 도중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까지 하였다. 결국 우리 청 정보시스템의 기능 측면에서의 우수성·안정성 및 국제표준 규격을 강조하며 집요한 설득을 하자 마지못해 "Ok, I agree"라고 말하였다.

과정이야 어찌됐건 진정한 우리 기술로 만든 특허행정시스템을 전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우리 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함께 직접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한국형 특허행정 혁신시스템' 마케팅이 추진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WIPO 내면의 부정적인 동의와 일본 특허청의 부정적인 무관심을 등에 업고 시스템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하고 있었다. 우리 청이 가지고 있는 세계수준의 기술과 개발·

PCT ROAD는 '국제특허로 가는 길'입니다

PCT ROAD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국제특허접수시스템'이나 약자는 '국제특허로 가는 길'로서 상호 의미가 일치한다.

참고로 PCT는 1회 출원으로 다수국 출원효과를 갖도록 하는 국제특허 조약을 일컫는다.



지난 6월 7~9일간 대전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개최된 해외 특허청 정책결정자를 위한 지재산 국제회의

운영 경험의 노하우가 국제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2004년 세계 140여개국이 참가한 WIPO 총회에서 PCT-ROAD 사업이 소개되고, 국제표준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블루오션 전략과 글로벌 홍보 전략이 주효해

회원국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의 요구사항이나 인프라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회원국의 참여가 절실하였다. 우리 청은 조사를 거듭한 끝에 PCT 출원규모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PCT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스라엘 특허청 PCT 국장을 주목하였다.

그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우리 청의 특허행정 정보화 기술 수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지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시스템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것이다.

우리 청의 집요한 설득이 시작되었다. 특허넷의 우수성과 국제표준 기능으로 구성된 규격에 대한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설득으로 이스라엘 국장은 마침내 공동시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특허넷의 우수성을 익히 인정하고 있던 중국 특허청도 흔쾌히 공동시험 참여를 선언하게 되었다.

한편, PCT-ROAD 시스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혁신 의지 표명을 바탕으로 드림팀이 구성되었다. WIPO 측의 PCT 정보시스템 전문가 세 명, 특허넷 주사업자인 LG-CNS, 특허청 정보기획본부의 직원 중에서 PCT 실무경험과 시스템 이해도가 뛰어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여 2005년 1월 아홉 명의 드림팀이 구성되었다. 직원들은 새로운 국제 업무에 도전한다는 흥분과 관리자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로 선발되었다는 자신감에 용기백배하였다.

시스템 개발은 특허넷시스템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일단 4개월로 잡고, 그중 이스라엘·중국과의 공동시

험 기간을 1개월로 하여 200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였다.

일단 홍보를 위하여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하고, 브랜드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WIPO 총회 시 WIPO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제네바 연합통신 기사를 통해 국내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WIPO, OECD 포럼, 각종 WIPO PCT 회의 등에는 맨투맨 홍보 전략을 사용하거나 사업발표 등을 통하여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WIPO 홈페이지에 PCT-ROAD 전용 사이트(www.wipo.int/pctsafe/en/pct-road)를 개설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재권 관련 잡지에 게재, I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스톡홀름 쉐린저 상 참여 등 글로벌 홍보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세계 각국 특허청의 러브콜 잇따라

현실적으로는 국제 전자출원에 따른 관련 법규 및 각국의 IT 인프라 차이로 인하여 PCT-ROAD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을 채택한 기능의 우수성으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도입과 운영에 따른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2005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특허청이 PCT-ROAD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특허청의 경우 자국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PCT-ROAD의 우수성 때문에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집트 특허청은 PCT-ROAD 도입·운영과 더불어 우리 청과의 정보화 협력확대를 요청하고 지재권 교육프로그램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 특허청도 PCT-ROAD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베트남 특허청은 PCT-ROAD에 파생된 정보화 사업을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사업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세계 IT 강국으로 불리는 인도 특허청이 두 차례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국제출원은 연간 12만건으로, PCT-ROAD가 표준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용될 경우 약 2,350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 전자출원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IT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 특허행정 혁신시스템'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 청을 방문하여 PCT-ROAD와 관련된 기술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받고 인도 특허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핀란드·싱가포르 특허청은 시험운영을 통하여 PCT-ROAD를 도입하였고, 이 밖에 태국·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북한·키르기스스탄 등은 시스템 벤치마킹과 더불어 도입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처럼 'PCT-ROAD'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특허청은 자국 기금 6만 스위스 프랑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청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요청하였다. 이 사업은 PCT-ROAD를 국내 민간기업이 스페인어 버전으로 개발하여 수출하는 사업으로, 2006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하고 올 11월경 멕시코·콜롬비아·에콰도르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WIPO를 통한 국제출원은 연간 12만건으로, PCT-ROAD가 표준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용될 경우 연간 35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전세계 특허청의 특허행정 업무의 효율화 촉진과 연구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국제표준 준수에 따라 약 2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 즉, PCT-ROAD의 성공으로 2,350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특허청 및 WIPO에서 추진하는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세계 IT시장에 진출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형 특허행정 혁신시스템'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 특허청이 주도

하던 지재권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PCT-ROAD를 통해 국제 전자출원 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이미 관련 분야에서 3~4개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약 8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PCT-ROAD의 성공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마련된 경쟁시장에서 벗어난 세계 특허정보시스템인 PCT 전자출원 분야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블루오션 전략이 주효하였다. 선진 특허청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거대시장에 진입하여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인 것이다.

둘째, 세계 특허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 규격 개발의 성공이다. 이는 글로벌 시스템 개발의 기본을 충실히 지킨 경우라 할 수 있다.

셋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이 강한 핵심멤버를 공략한 맨투맨 방식의 직접 홍보 전략도 성공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혁신적인 IT 기술, 안정성이 뛰어나고 높은 품질이 뒷받침되는 우리 청의 특허행정 혁신시스템이 그 바탕이 되었다.

우리 청은 PCT-ROAD의 보급 확대를 통해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PCT 회원국 50여개국을 대상으로 유상 보급을 추진하여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WIPO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세계 특허행정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APEC·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지재권 정보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정보시스템의 확산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행정의 기술과 표준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한국형 특허행정 혁신시스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한경닷컴

원고모집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本誌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잡지'가 되기 위하여 독자가 참여하는 紙面을 늘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本誌 기사에 대한 의견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내주십시오.

-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 * 마 감 일 : 수시로 접수
- * 보내실곳 : (130-012)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팀
전 화 : (02)958-4667, 4634
e-mail : nara@kdi.re.kr

농산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전망 밝다



민경선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장
(ksmin@kotra.or.kr)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가장 큰 나라이다. 인구도, 면적도 가장 크며 자원 또한 가장 많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수출·수입 양면에서 모두 우리나라의 9대 교역국가였다. 수출 50억달러에 수입은 82억달러로 총교역규모가 132억달러에 달했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3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자원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가 1위의 수입 대상국이며, 동광·천연고무·펄프는 2위, 석탄은 3위, 목재는 4위, 원유는 7위의 수입 대상국이다. 이들 천연자원의 수입이 對인도네시아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자원공급선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ASEAN 국가 중 부존자원 가장 풍부

인도네시아는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 해외투자가 1969년 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목재사업 투자가 효시라고 하니,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역사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6년 3월까지의 對인도네시아 누적투자액은 46억달러로 중국·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베트남에 비해 우리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면서 얼마전 타결된 한·ASEAN FTA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지난 4월 타결되어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스케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협정발효 즉시 일반품목(민감품목이 아닌)의 7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08년까지는 95%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ASEAN도 6개 선방국가(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들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품목 중 50% 이상의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고, 2009년까지는 90% 이상의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2010년에는 양측 모두 일반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로를 찾는 느낌이다.

사실 ASEAN은 그동안 일본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유·무상의 경제적 지원과 현지 투자 등을 통해 ASEAN 시장을 관리해 왔다. ASEAN 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일본의 對ASEAN 수출은 785억달러로 ASEAN 전체 수입시장의 무려 2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113억달러로 일본의 14.4%에 그쳤으며, 중국은 71억달러로 일본의 9.1%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ASEAN 진출 속도가 가속을 내기 시작해 2004년 중국의 對ASEAN 수출은 432억달러로 1995년 대비 무려 다섯 배가 증가했다. 일본은 725억달러로 1995년 대비 7.7%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는 207억달러로 83% 증가에 그쳤다.

일본은 對ASEAN 제1의 수출국 위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조만간 일본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다투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은 2002년부터 ASEAN과 FTA를 추진해와 우리나라만 ASEAN 시장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느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5년 초 ASEAN과 FTA 협상을 시작, 불과 1년 반 만에 상품무역협정 타결을 이



따만미니(Taman Mini)라고 불리는 자카르타 소재 민속촌에 있는 전통 가옥

끌어낸 것이다.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FTA를 통해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ASEAN 국가 간의 역내 교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우리 상품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나 EU라고 할 때,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이 안된 이들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對ASEAN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ASEAN FTA로 우리 기업들 한숨 돌려

한·ASEAN FTA를 ASEAN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ASEAN 10개국은 싱가포르만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이 뒤져 있으며, 상품경쟁력도 약한 편이다. 따라서 FTA

를 체결하면 무역에 있어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FTA를 추진한 것은 바로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때문이다.

중국도 ASEAN과 FTA를 추진하면서 상품수출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

〈표〉한·중·일의 對ASEAN 수출 추이 비교

	1995년	1997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 국	11,346	14,857	13,457	14,831	15,058	20,727
중 국	7,130	13,483	17,399	23,212	28,272	43,210
일 본	78,535	71,264	53,259	53,084	58,078	72,498

자료 : ASEAN Trade Statistics Database, 2006. 6.

있을 것이다. 중국 상품은 FTA 이전에도 이미 경쟁력이 있어 ASEAN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ASEAN 대부분 국가에 GSP(일반특혜관세) 혜택을 주고 있어 FTA에 의한 관세철폐가 ASEAN 국가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결국 일본이나 중국은 ASEAN에서의 정치적·경제적인 주도권 내지는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ASEAN을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ASEAN 10개국은 같은 동남아 국가라고 해도 인구, 부존자원, 경제발전 상태, 문화 등에서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농산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유망

이와 같은 ASEAN과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교류는 자원개발·현지투자·교역확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선, 자원개발의 경우 우리나라의 코데코(KODECO)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공사도 3개 구역에서 유전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키데코(KIDECO)는 석탄 개발에, 코린도(KORINDO)는 조림을 통한 목재생산과 팜오일 생산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하자원도 풍부하지만 상하(常夏)의 날씨에 넓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과 임업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지의 조림산업을 통해 목재는 물론 산소배출권 확보도 가능하며, 팜오일이나 사탕수수, 피마자 재배 등을 통해 미래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도 얻을 수 있으므로 농산자원의 개발도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지 투자의 경우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 모두 유망한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인프라 개발이 정지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 공급이 수요의 60%밖에 미치지 못하

인도네시아는 常夏의 날씨에 넓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임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인프라 투자도 유망하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중국·베트남보다는 투자환경이 아직 못하지만 대체지역으로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며, 도로·철도·항만·통신 등 모든 분야가 낙후되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 자본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국내외 투자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차 인프라 서밋(summit)을 개최, 총 220억달러 규모의 91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초에 제2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여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프로젝트만 발표한다고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투자 이익도 보장해야 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 상당 수의 투자 관련 규정이 재검토되고 있어 앞날을 기대해 볼 만하다.

제조업의 경우 지금 당장은 투자환경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나은 것은 아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크게 대우해 주는 것도 없고,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 없다. 또한 인건비도 아직은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하지만 중국이 2005년부터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저임금을 활용한 전통산업은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 투자지역을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 대체지역으로서 가장 유망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2억3천만 명의 인구에 실업률이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력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 둘째, 달러로 환산한 자카르타 인근지역의 최저임금이 IMF 경제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지난 15년간 80~100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릴 만큼 임금 인상폭이 완만한 점 셋째, 노동자들이 온순해 관리하기가 편한 점 넷째,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지금은 비록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200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면 중국이나 인도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교역의 경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수출상품이 서로 달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경공업 저가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기지를 가장 경쟁적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도 우리의 생산기지로 활용해 현지 가공 경공업제품은 우리가 수입을 확대하고, 수출은 기계류 등 중화학제품과 통신장비 등 첨단제품, 현지 생산용 부품 등으로 특화하며, 기타 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는 결국 상호적이어야지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FTA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FTA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이므로 우리 기업은 물론 상대국 기업들에게도 FTA의 내용을 잘 홍보하여 FTA를 적극 활용토록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ASEAN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對인도네시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놓고 美·유럽 간 시각차 보여

OECD의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경쟁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발굴·확산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경쟁위원회 논의는 주로 카르텔과 합병 분야에 많은 비중이 두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법 위반행위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력 판단은 무리

‘시장지배력’은 경쟁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 중의 하나다. 시장지배력은 ‘어느 시장의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경쟁수준 이상의 가격을 행사



신영선

駐OECD대표부 경쟁협력관
(syson@ftc.go.kr)

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조되는 개념적 요소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EU는 ‘지배(domi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에 있어 기업이 경쟁사업자와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독점력(monopoly pow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격인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

하고 있다.

어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간접적 증거와 직접적 증거로 나누어진다. 간접적 증거에는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이 있는데, 먼저 ‘시장점유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다.

그러나 시장집중도와 시장지배력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장점유율 산출을 위한 관련 시장의 획정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 시장점유율 사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진입 장벽·수익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윤회생 테스트' 등 여러 경제적 효과 테스트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소극적인 반면 EU·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이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시장지배력의 유일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후술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은 분석의 초기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경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선진 경쟁당국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즉, 시장점유율은 사건의 스크리닝(screening) 기능을 수행하여 낮은 시장점유율을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입장벽(entry barriers)'도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시장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력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할 때 '매몰비용(sunk costs)', 규모·범위의 경제, 자본 비용, 제도적 규제 등의 구조적 요인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고의적인 과잉 설비투자, 배타적 거래 계약 등과 같은 전략적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진입장벽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밖에 '구매자의 힘'이 강할 때는 시장지배력 행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구매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된다.

이상에서 시장지배력의 간접적 증거들을 살펴본 왔는데, 시장지배력을 직접 측정하려는 접근방법들도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기업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와 경쟁사업자의 반응으로 인해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요탄력성이 낮으면 시장지배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가장 우수한 방법이기도 하나,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수요탄력성이 어느 정도로 낮아야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결과 해석상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률을 시현한다면 시장지배력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적 수익률이 아닌 진정한 경제적 수익률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초과수익률이 시장지배력 이외의 요인(고위험의 부담, 탁월한 효율성 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어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 또는 지표(시장점유율)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앞에서 살펴본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경쟁저해 판단 위한 경제적 효과 테스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특정한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접근방법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유형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방식(form-based approach ; 독일·일본·한국 등)과 행위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남용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effects-based approach ; 미국·영국·캐나다 등)으로 대별된다.



최근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법 위반행위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빌 게이츠 MS 회장

전자의 방식은 법적 확실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후자의 방식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세밀한 경제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선진 경쟁당국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정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력에 입각한 적법한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개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즉,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개념의 범주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경쟁법 학자들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경제적 테스트 방법들을 개발해 왔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윤희생 테스트(profit sacrifice test)'가 있다. 이 테스트는 어느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경쟁을 제거하거나 축소함이 없이 그 사업자가 단기적 이윤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행

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원가 이하 판매를 하지 않아 이윤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경제적 무의미 테스트(no economic sense test)'가 있는데, 이는 어느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경쟁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경제적 의미가 없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 경쟁당국이 최근 몇년간 사용

해 온 방법인데, 특정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당해 사업자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효율적 기업 테스트(equally efficient firm test)'가 있는데, 이는 어느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그 사업자와 최소한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게 하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덜 효율적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축출되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므로 시장원리에 잘 부합된다. 그러나 현재는 경쟁사업자가 덜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남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너무 관대한 테스트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소비자후생 테스트(consumer welfare test)'는 특정 행위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비교衡量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나 현

실적으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두 가지 효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해 비교 형량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구별을 위한 각종 테스트는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한 테스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경쟁당국자와 학자들 사이에 보다 나은 판단기준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남용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제재가 중요

마지막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경쟁당국이 그 남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조치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정조치 및 제재의 목적은 당해 남용행위의 중지와 재발 방지, 경쟁상태의 회복, 다른 사업자의 남용행위 억제, 부당이득의 환수 등이며, 시정조치 및 제재의 수준은 비례원칙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된다.

시정조치 및 제재의 수단은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 그리고 금전적 제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업분할 또는 자산매각(미국의 Standard Oil과 AT&T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이 대표 사례), 지적재산권의 강제실시 명령 등과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는 시장지배력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남용행위가 기업조직의 구조 또는 특정한 자산의 보유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보통이다.

각국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태적 시정조치(작위·부작위명령 등)’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당해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시정조치 및 제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소극적인 반면 EU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단독기업의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또는 경쟁촉진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우며, 따라서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재하되 심하게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EU와 유럽 국가들은 단독기업의 행위라도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의 행위는 공동행위와 비교해 그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벌금·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국과 EU 간에 견해 차이가 크다. 미국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카르텔과는 달리 적발에 어려움이 없는 한편 그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에 어려우므로, 벌금은 적절한 제재수단이 아니며 행위금지 명령이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다.

반면, EU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카르텔보다 더 폐해가 클 수 있고 벌금은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는 입장이며, 실제 경쟁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다.

이상에서 시장지배력의 정의와 그 입증의 문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 그리고 시정조치 및 제재에 대한 OECD에서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제도도 OECD에서 논의되는 세계적 모범관행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 2년 연속 정보화 최강국

- 2006년 DOI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1위 차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7월 5일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세계정보사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06년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DOI 평가에서도 180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정보통신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ITU는 전기통신에 관한 최고 국제기구로서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제·개정,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UN 전문기구이다.

정보사회 및 글로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승원

駐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sewlee05@mofat.go.kr)

ICT)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활용 수준의 측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위해 DOI 개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개인 및 기업뿐만 아니라 ICT 산업 자체 및 타 산업,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로의 발전의 이면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하나로써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정보격차 지수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 SIS)는 선언문 및 행동계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기회지수(DOI)는 UN 전문가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DOI 평가에서 세계 180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획 채택을 통해 개도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ITU와 우리 정부는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범세계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격차 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ITU와 우리 정부는 공동 협력사업인 'Digital Bridges Initiative'에 대한 MOU를 2004년 6월에 체결하고, 디지털기회지수(DOI)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ITU 전략기획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2004년 9월에 'Digital Bridges Symposium', 2005년 6월에 'WSIS Thematic Meeting', 2005년 9월에 'DOI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DOI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마침

내 2005년 11월 17일, 튀니지 제2차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에서 DOI 개발결과를 발표하고, 평등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평가하고 정보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공식지표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Digital Bridges Initiative' 협력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06년 2월, ITU와 우리 정부는 DOI 고도화를 위한 제2단계 협력사업으로 'Digital Opportunity Platform'을 일년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제2단계 사업에서는 DOI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정보화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도구(tool)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사대상 전세계 확대 후 1위라 의미 커

이번에 ITU가 발표한 2006년 DOI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일본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올라간 2위를 기록했으며, 2위였던 홍콩은 5위로 세 단계 내려갔다. 또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3위와 4위에 위치하여 아시아와 유럽국가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14위로 미주지역 국가 중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동유럽 국가 중에는 에스토니아(20위)가,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50위)가 대

DOI, 한 나라의 정보통신 수준 평가척도

디지털기회지수(DOI)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기회 제공 및 활용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11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DOI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환경 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DOI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유선전화 가입가구 비율,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가구 비율, 100명당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 PC 보유가구 비율 등 네트워크 가입자

와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 비율을 조사한다.

기회 제공 부문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지역 인구 비율, 소득 대비 이동전화 이용요금 비율, 소득 대비 인터넷 이용요금 비율 등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 가능성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측정한다.

활용도 부문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비율, 유선인터넷 가입자 중 브로드밴드 비율, 무선인터넷 가입자 중 브로드밴드 비율 등 인터넷 이용 정도와 동영상 포함한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005년 11월 튀니지에서 열린 제2차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

특별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

2006년 DOI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대상 국가 수가 2005년 40개국에서 전세계 180개국으로 확대된 점이다. 2005년 DOI 국가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기록하였지만, 이 평가는 40개 국가만을 조사한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커 전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조사대상을 전세계 180개국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정보격차 지수로서 DOI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OI는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정보통신

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환경 수준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최첨단 정보통신 서비스 및 IT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환경조성 측면에서도 세계최고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T 인프라 고도화 지속 추진해야

앞서 밝혔듯이,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ITU와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DOI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정보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개

도국들이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 경험에 대한 공유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ITU와 공동으로 DOI를 활용한 정책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개도국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도구의 개발이 개도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향후 IT시장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올해 DOI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로 평가되었지만, 일본이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등 다른 나라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디지털강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된 것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디지털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보급 확대 등 계층 간,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 우수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일등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006년 디지털기회지수(DOI) 국가별 순위

	기 회	인프라	활 용	점 수	순 위
한 국	0.99	0.74	0.64	0.79	1
일 본	0.99	0.69	0.46	0.71	2
덴 마 크	0.99	0.75	0.37	0.71	3
아이슬란드	0.99	0.72	0.37	0.69	4
홍 콩	1.00	0.70	0.38	0.69	5
스 웨 덴	0.99	0.74	0.35	0.69	6
영 국	0.99	0.68	0.33	0.67	7
노 르 웨 이	0.99	0.66	0.34	0.67	8
네 달 란 드	0.99	0.67	0.32	0.66	9
대 만	0.99	0.69	0.29	0.66	10

〈표 2〉디지털기회지수(DOI) 지표 및 선정 이유

	지 표	선정 이유
인프라 (Infrastructure)	유선전화 가입가구 비율	네트워크 보급 수준 측정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가구 비율	
	100명당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	
	PC 보유가구 비율	네트워크와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기기(device) 보급 수준 측정
기 회 (Opportunity)	이동전화 서비스지역 인구 비율	정보통신에 대한 기본적 접근성(accessibility) 측정
	소득 대비 이동전화 이용요금 비율	정보통신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affordability) 측정
	소득 대비 인터넷 이용요금 비율	
활 용 (Utilization)	인터넷 이용자 비율	정보통신 활용 정도 측정
	유선인터넷 가입자 중 브로드밴드 비율	활용기기(device) 품질 측정
	무선인터넷 가입자 중 브로드밴드 비율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Realizing Decent Work in Asia”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2006년 8월 29일(화) ~ 9월 1일(금), 부산 벡스코

www.mol2006busan.org



The Fourteenth
ILO Asian Regional Meeting

주최 : 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지구촌의 당면과제(下) - AC/UNU 「미래보고서」

지난 호(8월호)에 국제적인 미래연구 네트워크 조직인 AC/UNU(American Council for UN University)의 「미래보고서」를 소개하고, 주된 내용인 15개 ‘지구촌 당면과제’ 중 지속가능발전 분야 5개 과제를 다룬 데 이어, 이번 호에는 나머지 시장·기술 분야 4개 과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분야 6개 과제를 게재합니다. <편집자>

시장·기술 분야 4개 과제

AC/UNU의 「미래보고서」가 도출한 15개 주요 당면과제 중 시장·기술 분야 4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 : 만인을 위한 세계적인 ICT의 융합

인류 역사상 인터넷만큼 세계화·민주화·경제성장·교육 등 모든 것에 걸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 도구는 없었다. 인터넷으로 인해 쓰나미 복구 등에서부터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모든 것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고, 기존의 지배구조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cswoo@kdi.re.kr)

이경영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leeky@kdi.re.kr)

(governance)의 성격을 바꿀 정도의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4년 현재 세계인구의 약 15%인 10억명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약 14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선·후진국 간의 소위 ‘디지털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중국·인도 등 후발산업국의 정보화

가 급진전하면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일단 지구촌 대부분이 ‘지구촌 신경체계(Global nervous system)’에 연결되면 사이버공간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매체가 될 것이며, 자연적 현실과 인공적 현실의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다. 또한 ICT에 기초한 지식경제의 새로운 생산수단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경제·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종래의 수직적인 통제는 와해될 것이다. 이미 집합적인 컴퓨터/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자기조직 능력을 갖춘 메커니즘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 웹(Semantic Web)’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지구촌 신경체계’의 등장에 따라 인류문명은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사이버테러,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오염(잘못된 정보 혹은 역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 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등 ‘디지털 위험(digital risk)’, 정보전쟁, 문화적 다양성 손실, 지식격차 확대 등 ‘지구촌 신경체계’의 부작용들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원격교육, 원격의료서비스 등이 보다 일반화되어야 한다.”

정보, 포르노, 스팸메일) 등의 ‘디지털 위험(digital risk)’이 그것이다.

이미 디지털 위험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은 2004년에 약 5,070억달러에 달하며(Mi2g社), e-메일의 약 70%는 스팸메일이라 한다(MessageLabs社). ICT는 이외에도 정보전쟁,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부정, 문화적 다양성 손실, 지식격차 확대 그리고 정보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협 등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

ICT의 발전이 인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원격교육, 원격의료서비스 등이 보다 일반화되어야 한다. MIT대학이 100달러 짜리 랩탑 컴퓨터를 개발하고 강의자료를 무료로 공개하는 등 이미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다중언어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미래는 NBIC(NT, BT, IT, Cognitive Science) 융합기술의 시대이다. 이미 나노미터(십억 분의 1m) 수준을 관측할 수 있는 초극세현미경 등이 개발되어 세포막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분자 하나 크기의 유기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NBIC 융합기술은 식량과 에너지, 물의 가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사람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의 ‘집단적 지식(collective intelligence)’은 크게 증폭되고 그 결과 인류의 삶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NBIC 융합기술로 인해 앞으로 25년 후 정도면 과학기술·의약·산업이 서로 통합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R&D 외주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의 세계화도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신기술과 과학적 발전에 따른 커다란 부작용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 간의 상충이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를 고치기 위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새로운 과학적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결코 답하기 쉽지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다(나노기술의 위험성은 2005년도 미래보고서에서 심층 분석함).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전세계 과학기술지식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생명공학이나 분자 나노기술에 대한 국제적 과학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지구적 과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기술은 국제적 협력 하에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제도 :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윤리성을 갖춘 시장경제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절대

빈곤은 크게 감소하였다(예를 들어, 전세계 인구 중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의 비중은 1981년 40%에서 2001년 21%로 감소). 그러나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상위 20%가 나머지 80%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상위 5%와 하위 5%의 평균소득 격차는 1980년의 6 : 1에서 현재는 200 : 1로 벌어졌다. 선진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년 동안 30% 증가한 반면, 저개발 국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는 빈곤인구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한 '저임금 노동'과 '고급기술'로 무장한 이들 超거대국들(이미 경제규모 각각 세계 2위, 4위)의 세계무역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여타 저개발국가가 향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가 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빈곤탈출'을 위한 저소득국 국민의 이주는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제분쟁도 늘어날 것이다. 선·후진국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이를 범세계적인 윤리기준으로 보완하는 소위 '윤리적 시장경제(ethical market economies)' 모형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

윤리적 시장경제의 기초는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 지역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 사회·환경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보다 공정한 무역, 토지·자본·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행위가 수익성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 빈발하는 부패와 조직범죄가 입증하듯이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WTO의 '공정한 자유무역' 원칙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는 OECD 회원국들의 농업보조금제도 그리고 다양한 형

태의 특혜적 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등의 장애요인이 많다. 개도국으로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계속 늘었지만, 아직 목표치인 GDP의 0.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윤리적 시장경제는 소득보전과 같은 공공복지지출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혜적인 복지정책은 개개인의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확대는 그 좋은 예이며, 이를 통하여 많은 빈곤계층이 실업상태를 벗어나 자영업자가 되도록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의 자선사업, 기부활동(빌 게이츠, 조지 소로즈 등과 같은 전세계적인 거부들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은 빈부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진지한 정책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 : 여성의 지위 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난 수년간 학령기 여성의 교육권, 정치 및 경제활동 참여, 의료서비스 수혜율 등은 개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진출비율이 1997년 11.7%에서 15.9%로 증가했고, 경제활동참여율도 1994년 35%에서 2004년에는 55.8%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일본·사우디아라비아·자메이카 등에서는 역으로 여성의 고급두뇌 유출이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폭력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암이나 말라리아, 교통사고 및 전쟁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2/3는 문맹 상태에 있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보다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니계수 및 성적 차별지표들을 개선하고 신용 및 토지, 교육·훈련, 의료,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 부처 정책결정 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의 인권과 지위 향상은 AC/UNU의 여타 14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과학기술이나 금융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성은 기존의 문화적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경우 지역 여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재적 역할이 남성보다 뛰어나며, 분쟁지역 등에서 무너진 사회조직을 복구하는 활동에도 더 적합하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보다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니계수 및 성적 차별지표들을 개선하고 신용 및 토지, 교육·훈련, 의료,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 부처 정책결정 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여성에 대한 완전한 평등은 통계적 목표치 달성 이상을 의미한다. 즉,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규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적 편견의 고착화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언론매체와 직접 연계하여 다각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분야 6개 과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분야의 6개 과제는 ①의사결정체계 : 일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역량 증진 ②민주주의 : 권위주의 탈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③평화 : 가치 공유 및 새로운 안보 전략 ④국제범죄 :

초국적 조직범죄 네트워크의 차단 ⑤지배구조 : 전세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결정 ⑥윤리 : 전지구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고려이다.

의사결정체계 : 일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역량 증진

ICT의 비약적 발전으로 세계는 ‘24시간 상시접속-상시근로체제(24-7 always on)’에 들어섰다. 매일 더 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데 반해,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정보의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려해야 할 변수, 관련된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게다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최후의 잣대라 할 수 있는 철학 내지 및 종교적 신념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너무 복잡해져서 새로운 효과적인 시스템이 나타날 때까지는 ‘혼돈’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일단은 신속하고도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관리기술(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기법을 포함한)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물론 어떠한 정부나 기관도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범기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UN 기구들은 전세계적인 신뢰도를 가진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지만, 정부 위주로 운영되며 민간의 참여는 아직 미약하다. ‘자기선별적’이고 ‘자기조직적’인 성격이 강한 웹사이트 모임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인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공공 사안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책에 관한 미래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은 ‘정책입안자’와 ‘정책수용자’ 간의 파트너십이다. 산업사회의 모토가 효율성(efficiency)이었다면,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한 지식사회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정부, 기업, NGO, 대학 및 국제기구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현명한 집합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민주주의 : 권위주의의 탈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하에서는 상호분쟁이나 인도주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인류에게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2개국 중 119개 국가에서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44%가 89개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9%가 제한적 자유만이 보장되는 54개 국가에 살고 있으며, 37%(24억명, 49개국)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UN에서는 45개국에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인권고문단은 전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 대해 감독 및 기술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의 권력 남용을 낱알이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조화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 자체가 크게 지체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인은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존재, 장기적인 경제안정, 강력한 사법체계, 정치적 반대를 포용하는 문화 그리고 빈곤계층에 대한 안전망과 부패

방지 장치 등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공공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며, 정치와 정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부작용도 심각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에 기초한 조직화된 범죄, 정보전쟁, 대대적인 정보 조작의 위험성 등이 그것이다.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 차원에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계속 생성·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내야 한다.

평화 : 가치 공유 및 새로운 안보 전략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대량살상무기(WMD)에 버금갈 정도의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가 가능한 각종 소형폭탄(화학/생화학/핵) 그리고 개인의 손끝에 놓여 있는 정보전쟁 수단 등은 지구 전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테러와 전쟁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9·11 사태나 최근의 중동 사태가 입증하듯이,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군사력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발발할 수 있는 각종 테러에 대처하기 어렵다.

치명적인 분쟁의 가능성은 세계 도처에 있다. 종교·인종 및 정부 간 갈등 등, 분쟁의 원인과 성격도 다양하다. 미국 국방정보센터(Center for Defence Inform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초 현재 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무장분쟁이 2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성’을 지닌 분규 지역(hotsots)도 28곳이나 된다. 메릴랜드 대학의 ‘위험 지역의 소수집단에 관한 연구프로젝트(Minorities at Risk Project)’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수집단이 284개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론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세탁의 소재를 파악하고, 모든 금융거래 기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자금거래상의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공조 수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는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다양한 세계관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간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화와 국제무역, 실시간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전달해 주는 미디어와 인터넷, 해외여행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평화로운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국가주권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견해도 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ICC)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노예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전쟁이나 테러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을 위해 생산적이고 비폭력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UN은 테러리즘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와 무력분쟁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UN의 조기경고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등 전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WMD의 개인화·보편화 시대에 있어서 특징인의 행·불행은 바로 나의 안전과 직결된다. 무엇보다 다양성과 평등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갈등 해소 그리고 공통의 윤리적 가치에 기초한 합의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국제범죄 : 초국적 조직범죄 네트워크의 차단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진 범죄(TOC ;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는 개별 정부의 대응 능력

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다. 초국적 범죄조직은 밀수, 전통적 환전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해 2조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1조달러를 ‘돈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간 2조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계의 ‘뇌물’의 상당분에도 이들 조직이 연관되어 있다. 콜롬비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국제범죄조직과 테러리즘, 부패한 정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국제 송금시스템이나 인공적인 항정신성 약물 등이 국제범죄조직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TOC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OECD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두고 있고, UN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외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마약통제정책실 및 범죄예방 국제프로그램’ 국제마약감시기구(INCB) 등과 같은 특별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대응노력은 아직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TOC는 지속가능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21세기의 글로벌 당면과제이다. 국제적인 공론화와 함께, 국제범죄조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UN의 팔레르모조약(Palermo Treaty)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세탁의 소재를 파악하고, 모든 금융거래 기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자금거래상의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공조수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 국가주권의 부분적인 양보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

려해야 한다.

지배구조 : 전세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 결정
세계화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구촌 경제의 거대한
순환고리의 하나(great chain of being)'가 되었다.
인간 계층 프로젝트의 완성, 국제우주정거장(ISS)의
관리, 인터넷과 언론매체의 세계화, WTO의 발전 및
EU 등 거대경제공동체의 등장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한 문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전세계적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 및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tsunami) 재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과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 인식 수준이 낮고 제
도적 기반도 취약하다.

기업과 민간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눈앞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 지도자들 역시 이들의 이
해에 부합하는 단기적인 사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NGO 지도자들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으나 그 속성상 특정 이슈에만 관심이 국한되는 한
계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구촌 차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의사결정의 사
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최상위 수준에서 설정된 중장기 정책 지침과 조정안
에 따라 개별 부처의 정책이 수립·조정되는 제도적 장
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와 같이 의회에
'미래상임위원회(Committees for the Future)'를 두
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함께 5~10년 단위의 발전 시나리오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5~10년 단위 예산계획으로 뒷받침하
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이
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는 의사결정자의 미래지향적
사고와 지적 소양을 전제로 한다. 미래예측과 정책분
석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의사결정자들의 미래지향적 소양을 높이기 위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는 너무 복잡해져서 더 이상 주권국가
시대의 위계적 질서에 의해 운영·관리할 수 없다. 결
국 지구촌 차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정
부·기업·NGO·대학·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들로 구
성된 '초기관적 연합(trans-institutional coalition)'이
형성되어 AC/UNU의 '15대 지구촌 도전과제'나 UN
의 8대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
ment Goals)를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들 기관 내 리더그룹을 배양하는 것 외에, 전세계
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의 리더그룹을 서로 연
계하여 이들이 전지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결정의 맥
락에서 각각의 지역 이슈를 규정하고 모범사례를 찾
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 : 쏠지구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고려

오늘날 연예·오락·문화산업(entertainment)에는
비윤리적 행동이 범람하고 있다. '세속주의'와 '무가
치주의'가 종교적 형이상학, 주권국가의 개념에 기초
한 종래의 공공윤리 의식을 점차 침식하고 있지만, 이
를 대체할 만한 실천적인 윤리체계는 부재하다.

BNIC 융합기술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의 정체성 혼란', '기술에 의한 인성
(humanity)의 지배' 등의 문제는 인류의 새로운 윤리
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TOC)가 만
연해 있고, WMD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테러의 위협
이 주변에 상존해 있지만, 이를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
하는 것은 국가주권은 차치하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 차원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지구촌 윤리'에 대한 논의
가 증대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
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형사
재판소(ICC)와 기업 윤리지표, 종교 간 대화, UN 조

악, 올림픽, NGO, 인터넷 블로그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등 그 경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남과 우리’를 가르고 ‘남에 대한 우리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신념, 가치체계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전인류가 ‘지구촌 신경체계’의 하나에 긴밀히 통합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개인은 시스템의 ‘안전’과 ‘진화’에 있어 동등하게 중요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의 결과는 지구촌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으로 귀속된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함양하고 투명한 연결 시스템과 상세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와 기관,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시스템 통합기제(system integrator)’로서 새로운 글로벌 윤리체계에 점차 근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인류는 계몽주의 등장 이후 200여년간 사상·제도·과학기술·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숨 가쁘게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화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경로를 거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십년 후 미래에 있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지구촌 15대 당면과제’를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지구온난화, 부존자원 부족, 생태계 파괴, 테러리즘, 인간복제, 빈부격차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고 보편적 인권을 위협하는 갈등과 분쟁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시장이나 개별 정부의 힘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 200여년을 거

쳐 형성된 민족국가 시대의 수직적이고 배타적 지배 구조로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결정 체제와 지배 구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미 ‘지구촌 15대 당면과제’에서도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6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저명한 이론가인 영국의 데이비드 비덤(Beetham, 1998)은 “보편적인 인간애뿐만 아니라 공동 위협에 대한 노출도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새로운 사상·철학, 문화 및 지배구조를 창출하여야 한다. 21세기 미래의 향배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 관련 자료 ▶

- THE MILLENNIUM PROJECT, GLOBAL FUTURES STUDIES & RESEARCH(웹사이트 <http://www.acunu.org>)
- 2005 State of The Future, AC/UNU The Millennium Project
- 「2004 State of the Future UN 미래보고서」, AC/UNU The Millennium Project, 곽창규·손석호·박병원 번역, 박영숙 감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5
- 「UN 미래보고서」,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서울 교보문고, 2006

절세상품 100% 활용하기

생 활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젠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관련 멤버십 포인트가 그렇고 각종 카드 마일리지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절세상품 등이 그렇다.

절세상품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조금만 신경 쓰고 따져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과연 나는 절세상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자.

■ 주어진 절세한도를 활용한다면 초급

성인이면 누구나 금융상품 가입 시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일반세율 대신 9.5%의 우대세율을 적

용하므로 그만큼 손에 쥐는 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세금우대 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우대로 되나요? 그럼, 세금우대로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대신에 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세금우대 한도를 사용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기왕이면 이자가 많이 발생할 쪽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 상품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주어지는 생계형저축 한도(1인당 3천만원)는 세금우대보다 더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와 달리 전액 비과세다. 그리고 상품의 선택도 자유로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상품은 물론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된다.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절세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표〉 절세상품별 장·단점 비교

	절세효과	장 점	단 점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세 9.5% 과세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기간 1년 이상 상품만 적용
생계형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거의 대부분 금융상품에 적용	60세 이상 노인 등 자격 제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두 가지 절세효과 모두 가능	가입자격 제한 및 7년 이상 가입
연금저축	소득공제	저축금액 대비 소득공제가 큼.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조합예탁금	농특세 1.4%만 과세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2007년부터 절세효과 감소
주식형펀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투자실적에 따른 고수익 기대	투자위험 높음.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거액자금 투자 가능(투자한도 없음.)	10년 이상 가입 시 절세혜택
선박펀드·유전펀드	2008년까지 발생수익 비과세	거액자금 투자 가능(비과세는 투자금액 3억원 한도)	원금보장 안됨.

■ 중급은 절세상품 골라서 쓴다

세금우대나 생계형저축처럼 주어진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초급 단계라면 중급은 특정 절세상품을 스스로 찾아가는 단계다. 현재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포함),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조합예탁금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상품은 가입대상과 상품내용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의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며,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두드러진다.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월 25만원씩만 저축해도 최고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저축 후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만 받아야 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땐 상당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 연금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조합예탁금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해 그만큼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내년부터는 절세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 들 예정인 만큼 조기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투자상품의 절세효과까지 비교하는 고수들

펀드 등의 투자상품엔 보이지 않는 절세효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 투자할 수 있다면 가히 고수 수준이라 할 만하다.



우선,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주식형펀드는 주식투자 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배당수익이나 채권관련 수익만 과세할 뿐이다. 대신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주식투자수익 부분도 모두 과세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변액연금보험 등과 같은 저축성보험이나 일부 채권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절세효과가 숨어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등도 부분적으로 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생소하지만 선택펀드나 유전펀드와 같이 일부 특수한 펀드에도 세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투자금 3억원 이하에 대해 2008년까지 소득세 비과세).

따라서 이러한 투자상품들을 선택할 때에는 절세효과까지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일수록 투자위험을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자. 

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
(hans03@shinhan.com)

8초만 마음써 주세요!

현관문 열어주는 시간 8초
전철에서 신문 접는 시간 5초
넘어진 자전거 일으켜주는 시간 17초
버스 타는 휠체어 돕는 시간 30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THE
HAMILTON
PROJECT

해밀턴 프로젝트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브루킹스연구소

로저 알트만

피터 오스잭

제이슨 보도프

로버트 루빈

지난 4월 5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해밀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향후 미국 사회가 장기적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비전과 경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주의(主義)에 기초한 주장을 배제하고 경험과 실증적 증거에 기반을 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작은 정부나 감세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러한 주장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broad-based) 경제성장, 적절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정부의 투자자적 역할을 역설하고 있다.

『나라경제』는 이번 호 「특별기획」으로, 브루킹스연구소 및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 「해밀턴 프로젝트」 보고서(번역본)를 전재(全載)한다. <편집자註>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본 프로젝트는 미국 초대 재무성 장관으로서 현대 미국경제의 초석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가난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독학으로 성공한 해밀턴의 삶은 본 프로젝트의 동기인 기회와 상향성에 대한 미국적 가치의 전통을 상징한다.

그는 미국의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상업을 부흥시켰으며, 건전한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발전을 위한 폭넓은 기회가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해밀턴의 굳은 신념은 본 프로젝트의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또한 그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장의 막강한 힘뿐 아니라 시장의 힘을 강화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지원과 장려'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식하였다. 미국의 번영을 최초로 설계한 해밀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좋은 상징이다.

〈요약〉

- 교육과 근면한 노동이 개인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자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믿음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다음 시대의 기회와 번영,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 「해밀턴 프로젝트」의 경제적 전략에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즉,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개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공공 투자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는 효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밑받침하는 경제이론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재정규율의 강화와 주요 성장촉진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경제 분야 주요 인사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들 - 이데올로기나 주의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라, 경험과 증거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 을 수집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쟁의 장에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려 한다.

- 재정 관련 문제들에 관해 그간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그리고 정치적 협상과정에서의 초당파적 노력이다. 대통령과 상·하원의 양당 지도자들은 개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함께 참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점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공동의 정치적 책임

성을 확보하면서 공통의 기반에 도달해야 한다.

- 중국·인도 등의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빠르게 편입됨에 따라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전한 정책에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험과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인 작업이 새로이 필요하다.

- 따라서 「해밀턴 프로젝트」는 전국의 지도적 인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제안들을 정책토론에 부치도록 도울 것이다.

- 그간의 경험과 경제적 상황들로부터 본 프로젝트의 전제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 도출되었다.

- ① 경제성장은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broad-based)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다: 많은 국민들을 포괄하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애 비해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사회의 공공정책이 지나치게 소수에게만 유리할 때, 많은 사람들의 혁신능력과 생산성을 활용할 기회가 상실된다.
- ② 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한 강화가 가능하다: 경제성장이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 또한 경제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성장에 도움이 되나 위험을 수반하는(창업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같은) 일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예기치 못한 충격을 당한 후에도 가정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올 수 있고, 외부 경쟁에 쇠락하지는 등의 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시장은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중요한 필요품목에 투자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교육·인프라·기초연구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과, 내부적 혁신을 적극적

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네 가지 주요 정책기조에 기반을 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교육과 근로: 미국경제에 있어 생산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본 프로젝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취학 전부터 대학원까지 -을 개선하고, 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하며, 저기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 혁신과 인프라: 혁신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킨다. 세계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서 본 프로젝트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과학과 공학에 익숙하게 하고, 민간 기업에 R&D를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고 혁신 저해요인을 제거하며,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의 지를 천명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저축 및 사회보험: 사람들은 저축 및 사회보험을 통해 자기 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할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기회 포착 및 역경으로부터의 자활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의료보장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용 절감,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노후생활 보장방안 등을 고찰한다.

- 효과적 정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활동 조정, 부당한 규제 배제 및 민간기업들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정부규제 개혁, 제기된 방안들의 예산중립성 보장대책 등 정부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교육과 근면한 노동을 통해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잘살 수 있으며, 모든 개인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미국사회의 오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그간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왔으며, 미국이 2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누려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성공하기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시점에서 미국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주요 영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

또한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세계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늘날의 세계가 요구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의 미래는 크게 제약될 것이며, 미래세대의 기회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믿음은 붕괴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유연성, 교육, 새로운 사람과 사고(思考)에 대한 개방성 등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힘은 그간 세계인구의 5%에 불과한 인구규모로 전세계 GDP의 2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다. 이를 혁신적 사고, 정치적 의지와 결합시켜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과거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주요 성장촉진 영역(교육, 의료, 에너지,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이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들은 상호 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확대해 왔다. 재정적자는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투자의 부족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미래의 번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선 우선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적자규모(부분적으로는 재정적자에 의해 초래되고 있음)를 고려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2005 회계연도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3천억달러로 GDP의 2.5%를 넘는 규모이며, 향후 10년 내 5조 달러, GDP의 3%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사회보장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수혜자가 되는 시점에 이르면, 이러한 정부의 적자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재정적자는 총저축을 감소시키며, 이는 투자의 감소와 해외차입의 증가로 이어진다. 해외차입의 증가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에 반영되며, 투자의 감소(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와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국내자본의 수익 중 외국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증가하는)는 모두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아 미래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 재정적자의 지속으로 인한 비용은 급작스럽게 발생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누적된다. 최근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연방정부의 적자가 총저축과 자본축적을 억제하며 미래의 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전통적인 경제분석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상당 규모의 적자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이는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고, 국내외 기업가와 소비자의 기대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적자의 규모가 작고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 이러한 경로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나,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항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합리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당 규모의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기

대심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적자와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경제 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두 번째의 요인은, 주요 성장 촉진 부문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과 운송의 발전으로 중국·인도 등의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글로벌 경쟁이란 더 이상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과거 저임금국가의 근로자와 점점 더 고속련·고임금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질적인 저하 없이 전자경로를 통해 장거리를 넘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던 투자은행 업무나 X-레이 판독 등 고기술이 상당한 지역적 거리를 넘어서서 제공되는 원격근로가 이미 행해지고 있다.

세계화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경쟁의 흐름을 차단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하다. 이미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다른 국가로부터의 보복적 조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때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역 자유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역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지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국가는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과 피해 모두를 넓게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에는 보다 잘 설계된 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의욕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창의적 보조방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미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보다 현명하고 적절하게 투자해야 한다. 또한 이

러한 아이디어는 이데올로기나 주의·주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일에는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이 따를 것이고, 이러한 조정과정이 정부예산의 수입이나 지출 중 한쪽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세입과 세출 모두를 통제하는 보다 믿을 만한 준칙을 명시한다면,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시행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과거에 이미 시행된 것이거나 그 변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 10년 후에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고 복잡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고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특히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호(medicaid) 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장기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대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선택과 의지이며, 더 중요한 것은 초당파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중기적 재정적자 및 사회보장과 관련한 장기적 재정적자의 심각성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적 과정만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정책제안이라도 즉각적이고 신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며, 더구나 이러한 공격들은 제시된 정책제안들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켜 왔다.

따라서 대통령과 상·하원 내 양당 지도자들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초월하여 보다 특수한 정치적 과정

에 참여하여, 이러한 이슈들의 심각성과 대안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공동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여 문제해결의 공통기반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 문제와 달리, 주요 성장촉진 영역에 투자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고안하고 확정하는 데에는 새로운 지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밀턴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전략과 함께 이러한 전략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동반성장을 향한 국가적 의지를 일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국의 경제학자와 여타 전문가들로부터 근거에 기반을 둔 최선의 아이디어들을 모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책논의의 장에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아이디어들은 미국의 정책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개선시키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총체적으로 이들은 단지 포괄적인 단일처방이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모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강력한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비전과 정치적 용기뿐만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현명한 아이디어 역시 요구된다. 각계로부터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국가적 정책토론의 장에 제시함으로써 「해밀턴 프로젝트」는 모든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기회가 부여된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 부여는 보다 강력한 경제성장과 세계화 속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해밀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경제전략은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첫째, 경제성장은 장기간에 걸쳐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모두 결합되었을 때, 한계세율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

조하는 공급경제학과 현저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조세 감면이(소비 증가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수감소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다. 한계세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경우 상당한(정책적)관심이 한계세율에 집중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 이제는 그런 논의조차 한물간 것이고 따라서 한계세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다.

원칙 1. 폭넓은 계층의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다.

만약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또한 경제성장에서부터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면 그러한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불행히도, 미국은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인 벤자민 프리드만이 설명하듯이, 전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은 신화(myth)가 아니다. 전후 초기 수십 년간 미국이 누려 왔던 그리고 익숙해져 버린 경제성장은 단순히 이례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은 미국이 그 이전 한 세기 반 동안 경험했던 생활수준 향상과 그 속도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것은 오히려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현 세대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생활수준 향상이 미국의 준칙이었음에도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인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국가의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47~1973년 동안에 생산성과 중위가구의 실질소득은 매년 2.8%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생산성은 연간 2.7%씩 증가하였으나 실질 가구소득은 고작 1.0% 성장에 그쳤다. 1973~2003년 사이에 실질 1인당 GDP는 73% 늘어났으나 실질 시간당 보수의 중위값은 겨우

13%만 늘어난 상태이다. 즉, 국가의 풍요로움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못하였고 널리 퍼져 나가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선조가 그러했듯이 열심히 일하고, 원대한 꿈을 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조부 세대가 요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진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이다. 경제성장이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기회를 확장해 주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가치-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가정환경보다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성장은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된 경제성장에 비해 훨씬 견고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공공정책이 비교적 소수의 편의만을 봐주는 쪽으로 지나치게 흐르면, 미국은 자국민의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잠재능력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양질의 공교육이 없이는 중산층의 자녀가 훗날 매우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자본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없이는, 잠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의 여성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국민의 상당수가 경제성장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소외당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될 위험이 있다. 전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도 “소득편중 현상의 심화는 ... 민주사회가, 그것도 자본주의적 민주사회가 반드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치적 효과면에서 모두 범국민적 성장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미 여러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이 분야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공공재와 보완적인 투입물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모든 이에게 정치적 신뢰를 부여해 주는 일련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성장은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가 간 비교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이나, 경제성장의 원인을 밝히는 세심한 인과관계 연구 등과 일맥상통한다.”

원칙 2.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된다.

경제성장이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경제의 안정성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나 분석가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따라서 이 두 목표는 서로 상충된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첫째, 기본적인 경제안정성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더 받거나 남들과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을 추진하기 수월해지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위험에 대해 보호장치가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심하게 된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쉘러 교수는 “진정한 성취가 가능한 빠른 경제현장의 급류 속에 몸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위험을 두려워하여 상당한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도전도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역경이 실제로 닥쳤을 때 어느 정도의 원조는

이 가구가 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을 제공해 준다. 어느 정도의 금전적 도움이나, 교육 혹은 훈련기회나, 기본적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들은 역동적인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닦힐 수 있는 일시적인 경제적 역경으로 인해 영구히 좌절당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일시적인 역경을 겪은 가구들에 대해 사회안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경제안정성은 보호주의를 비롯하여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줄여준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쟁은 경제 전체로 혜택을 파급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종종 어떤 산업 혹은 어떤 직종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에 저항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제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수월하게 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 정책입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경제안전망은, 일하고 혁신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동기의욕을 지나치게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균형을 잃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장에 미치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의 경제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경제안전망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문제-특히, 정책이 사람들의 동기의욕에 초점을 맞추어 고안되었는가 아닌가-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경제안전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익하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안전망의 형태와 수준이 경제성장과 개인의 행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당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칙 3.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시장은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시장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사회에 바람직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또한 시장만으로는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초과학이라든가 사회 인프라-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명백한 상업적 이득을 손에 쥐어 주지는 않으나, 정부의 자금으로 보조받아 후에 인터넷 발명의 기초가 된 'blue sky'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충분히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고 범국민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장의 힘은 효율적인 공공의 역할에 의해 지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경쟁이 공평하고 투명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고르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장기에 걸친 견고한 성장이 단순히 '정부만 간섭하지 않고 사라져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건전한 정부정책은 장기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가장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역할 변화 역시 재발견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이 정부의 주요 기능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 내부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기회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역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정부규제를 고안함에 있어, 정부 지도자들은, 완화는 가능하지만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쓸모없고 어리석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위험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내야 할 것이다.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여 정부의 짐이 단순히 후세대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가 강조하는 필요에 맞게 그들의 일을 조정하고 이러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금전적인 세입을 확보해야만 한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제안

「해밀턴 프로젝트」의 제안은 네 가지 주요 정책기조—교육과 근로, 혁신과 인프라, 저축과 사회보험, 효과적인 정부—에 기반을 둔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현재의 정책은 향후 몇십년 동안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근로

미국경제의 생산력은 국민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한 예로 관리예산처(OMB)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내 민간 소유의 상업 건물과 설비의 가치는 13조달러이지만, 인력의 기술에 체화된 ‘인적자본’의 가치는 48조달러에 이른다.

인적자본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유인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통합되어 가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상당수의 미국국민이 교육과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산층 가정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립학교와 대학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들이 은퇴하기 이전에 또 다른 경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의 노동자들이 희망적인 취업기회를 가진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기회와 생산성 모두를 향상시키므로 폭넓은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일정한 수익률을 낳듯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수익률이 존재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실질수익률—초기 비용에 대응하여 생애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연 7%에서 10% 사이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은 양질의 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의 성취도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뒤처져 있다. 한 예로, 2003년 미국 15세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능력은 세계 21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평균적인 학업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위 1%의 학업능력에서도 미국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체계 역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대학교육 이수율 격차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70년대 말에는 소득 기준 하위 75% 가정의 학생들이 전체 학사학위 취득의 56%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42%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노동력 양성 그리고 노동의욕 고취의 영역에서 연구에 기초한 정책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들의 자질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교사들의 질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러한 문서상의 요건들이 유능한 교사들을 가려내는 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문서상으로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교실에서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사들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교사를 고용하고 평가할지에 대해 커다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 자격요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의 효과성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매년 많은 수의 교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들이 채용되고, 그중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소수만이 재임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다른 제안은 소위 ‘여름방학 중 학습 소외’에 대

한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고소득층 자녀에 비해 여름방학 동안 더 많은 퇴행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는 여름학교가 이러한 학습 소외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유치원부터 5학년에 이르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모가 선택하는 6주 기간의 여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름 교육기회 장학금(Summer Opportunity Scholarships ; SOS)’을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제안과 더불어,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몇몇 제안들은 취학 전 교육, 직업교육훈련체계,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유인 등을 다룰 것이다.

혁신과 인프라

혁신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킨다. 내셔널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는,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적 경제성장은 주로 과학적 이해의 추구, 공학적 해답의 응용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발견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물적·법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세계의 선도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최근 IMD의 『국제경쟁력 연보』는 미국을 1위로 선정하였다. 발표된 연구논문의 수나 그 인용빈도로 볼 때 미국의 연구자들은 세계 1등이다. 그리고 최근의 비교에 따르면, 세계의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 50곳 중 38곳이 미국에 있으며, 수십년간 전세계의 가장 우수한 과학 및 공학 대학원생들이 이들 연구기관들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몇몇 관찰자들은 세계 과학의 선두자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에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 학사학위의 비중은 지난 몇십년간

변하지 않았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교육적 성취가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다. 중국은 2010년까지 미국보다 더 많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박사를 배출해 낼 것으로 추정된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과학적 연구에 대한 투자는 더욱 중요해진다. 역사적으로도 R&D에 대한 투자는 20% 내지 30%로 추정되는 수익률을 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과학 및 공학에 익숙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채택해야 하고, 새롭게 구축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과학자와 공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려는 대학 신입생 중 절반 이상이—일부는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준비 없이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실제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과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다른 직종보다 보상이 떨어지는 탓으로 졸업 후에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태어난 과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외국인 숙련 과학자와 공학자를 유인해야 한다.

실제로 실리콘 벨리에서 1990년대에 설립된 기업들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나, 미국인 7만5천명이 생업을 잇는 강력한 경제적 시장인 e-베이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어 같은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대학과 대학원에 과학 및 공학 전공 학생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대학원생 수와 연구 장학금을 늘리는 등의—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유인은 조세체계나 특허제도 등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받는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특허제도가 ‘천재성의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

을 붓는 것'이라고 특허제도의 미덕을 찬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특허제도는 오·남용되고 있다. 미국 내 특허 신청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가 되었다. 선제적인 수단으로서 특허를 획득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비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가 공적인 영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서 혁신에 악영향을 미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03년에 "의심스러운 특허들은 경쟁의 중요한 장애이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적이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셋째, 연방정부는 R&D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구비 지원은 그 절대적인 액수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하여 있지만, 그 구성 면에서 장기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극명한 예가 '국방선진연구계획기구(Defense Advance Research Project Agency ; DARPA)'(역자註 : 본 기구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자금을 받아 1958년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발족 당시 명칭은 고등군사연구계획국이었다. 이 기구는 선진군사기술에 대한 혁신적 연구 및 개발위험도가 높더라도 전망이 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직원은 약 240만명이며, 예산규모는 20억달러에 이른다)의 새로운 지원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인터넷, 통신 및 날씨 위성, 위치추적 기술, 구글이 사용하는 새로운 검색 기술 등 당장의 상업적 성과는 부족하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혁신을 낳았던, 제한이 없고 당장에 이익은 없었던 연구를 희생하고 즉각적인 산출에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5년 내지 10년 안에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R&D 정책을 재조정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이 축적될 가능성과 제안된 연구가 다른 연구에 기반이 될 잠재력 등에 기초하여 연구계획을 선택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을 더욱 잘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처녀 비정부 유인 우주비행에 주어진 X-Prize(역자註 : X-Prize 재단은 민간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곳으로, 1996년 민간우주여행에 성공하면 현상금 1,000만달러를 주는 'Ansari X-Prize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05년까지 자체 개발한 3인승 우주선에 최소 1명이 탑승해 1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업을 2주 안에 되풀이하는 것으로, 미국·영국·이스라엘·루마니아 등 27개 팀이 경쟁에 참가하였다)처럼 정부가 특정한 과학기술 업적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어떻게 혁신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기초연구비 지원에 대한 약속과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와 유망한 신기술의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과 분쟁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는 에너지 정책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그런 이유로,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반응하여 설립되었던 DARPA처럼 석탄·석유 등의 탄소계 연료에 새롭게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할 연방 연구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 연구 외에도,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현대적인 물적 인프라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관리에는 둔감하다든지, 밀집지역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없이 사용빈도가 낮은 시설을 짓는다든지 또는 시점이나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사용료처럼 시장 친화적인 유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무료 접근을 강조하는 등 잘못된 계획에 기초한 것이 자주 있었다.

현재 많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 건물 중 75%가 학생의 기초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항 설비는 지난 15년간 1% 증가

한 데 비하여 항공교통량은 약 35% 증가했다. 그리고 노후한 상수시설을 대체하고 복구하는 데 매년 1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공적 인프라의 관리 및 효과적인 가격 전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저축과 보험

저축 및 사회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다 많이 확보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기회를 포착하거나 역경을 이겨내기가 더 쉬워진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에 비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은 제고되었으나, 가계소득은 변동성이 증가하여 부침이 심한 편이다.

일례로, 예일대학교의 제이콥 해커 교수가 지적했듯이 향후 2년 동안 가계소득이 20% 감소할 확률이 1970년대 초반의 12%에서 현재는 25%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경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반가계들에게 적절한 경제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소득 불안정성 이외에 미국 가정에 가장 큰 재정위협이 되는 것은 의료비용과 재난적 중증질환으로 인한 개인파산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상당액의 현금을 부담할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례의 절반이 의료비용과 관련이 있고 본인부담 의료비용은 평균 1만2천달러에 육박한다. 이 밖에도 높은 의료비용은 회사로 하여금 여타 인건비를 축소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실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올해 들어 가계의 재정위험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정책 대안 발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예방적 진료 제공을 위한 혁신모델 구축 등의 구조적 개혁과 성과 제고 및 의료 부문의 정보기술 채택 확

대를 위한 노인의료보험 내의 성과급 이용 확대방안 등의 점진적 개혁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본 프로젝트가 제안한 정책대안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 가정들이 자주 겪는 또 하나의 경제적 위험은 해직이다. 문제는 해직자들이 실업기간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적절히 완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본 프로젝트는 정리해고 이후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번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는 퇴직 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노후생활 보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401(k) plan]에 가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회사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퇴직저축(retirement saving plan)에 가입시키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효과적 정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격변의 시기에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확한 결과 창출,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의 효과적 사용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정부는 비효율적인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활동 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례로, 연방정부는 3천억달러에 달하는 시설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원(GAO)이 내

린 결론에 따르면, 이러한 방대한 자산구성의 대부분이 중요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1950년대의 경영모델 혹은 기술환경에 기초해서 구축된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부분의 자산이 달라진 정부의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조정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자산을 경매 처분하는 등의 정부재산 관리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다른 예로 스웨덴·뉴질랜드·독일 등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고용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우정공사(USPS)의 효율성과 장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우정공사의 보편적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는 또한 정부 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방정부 부문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다른 정부부문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선도 경영컨설팅 기업인 맥킨지社가 마련한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자체 운영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규율하는 제도상의 효율성도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 보정을 위해 개입해야 하지만 위험·보상 구조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대법원장이 강조했듯이 정부가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할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당면한 특정 위험을 어느 정도로 감소시키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또 다른 위험들을 얼마만큼 초래하는가? ... 규제로 인해 사용자들의 현재 혜택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정부의 규제목적은 모든 위험의 근절보다는 위험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불공정거래규제법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에 요구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기된 방안들 중 상당수는 기존 재원을 재분배하는 것으로서 예산중립적이다. 하지만 일부는 추가 재정소요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불균형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제기된 방안들의 지출소요를 절감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제안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혁신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일례로, 매년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중 5억 시간 정도를 절감해주는 무신고소득정산제(역자註 : return-free tax filing,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고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체계로, 소득신고에 투입되는 납세자들의 시간소비를 절감해 주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의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의 세입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를 들 수 있겠다.

결론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상향이동’이라는 본질적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가치와 경제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즉,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 역할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뛰어난 경제사상가들의 혁신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해밀턴 프로젝트」는 실제 경험과 증거에 기반을 둔 세련되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회, 번영 그리고 견고한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지표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	1인당 GNI	제조업 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총취업자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광의통화 (M2) (평잔)
	10억원		달러	2000=100			1,000명	%	2000=100	10억원
1998	484,103	476,245	7,355	68.3	86.8	80.6	19,938	7.0	97.0	596,168.3
1999	529,500	523,355	9,438	85.4	97.7	91.1	20,291	6.3	97.8	676,674.7
2000	578,665	576,160	10,841	100.0	100.0	100.0	21,156	-4.4	100.0	691,393.5
2001	622,123	621,028	10,160	100.2	95.9	106.7	21,572	4.0	104.1	739,337.0
2002	684,264	685,069	11,499	108.4	99.7	115.6	22,169	3.3	106.9	824,227.8
2003	724,675	725,420	12,720	113.8	99.7	114.3	22,139	3.6	110.7	888,988.6
2004	779,381	781,174	14,193	126.0	102.5	113.6	22,557	3.7	114.7	929,640.6
2005	806,622 p	805,886 p	16,291 p	134.0	102.1	116.6	22,856	3.7	117.8	993,960.1
2004. 6	193,868	193,908	-	127.6	104.5	113.8	22,822	3.4	114.2	927,101.8
7	-	-	-	122.2	100.0	110.1	22,750	3.7	114.9	931,581.5
8	-	-	-	119.3	96.5	107.0	22,382	3.6	115.9	936,302.7
9	196,573	197,043	-	123.7	98.5	113.3	22,809	3.4	115.9	946,264.9
10	-	-	-	133.9	106.6	115.2	22,901	3.4	115.9	946,832.6
11	-	-	-	134.8	107.2	114.9	22,802	3.5	115.2	948,780.2
12	197,608	198,431	-	132.4	103.6	121.3	22,495	3.8	115.4	954,714.0
2005. 1	-	-	-	130.3	102.7	112.7	22,078	4.2	116.2	958,086.2
2	-	-	-	110.9	86.8	106.5	22,086	4.3	116.9	965,151.9
3	196,873 p	196,913 p	-	136.1	108.6	119.2	22,576	4.1	117.8	977,425.0
4	-	-	-	131.2	104.8	115.3	22,934	3.8	117.9	982,103.7
5	-	-	-	132.3	104.0	117.8	23,199	3.5	117.7	985,474.4
6	199,311 p	198,924 p	-	132.3	103.6	117.3	23,246	3.6	117.3	995,904.3
7	-	-	-	131.1	101.8	113.7	23,184	3.8	117.8	1,004,960.2
8	-	-	-	127.6	96.2	112.7	22,847	3.5	118.2	1,008,802.0
9	203,556 p	203,384 p	-	133.3	98.2	117.3	23,048	3.6	119.0	1,008,223.6
10	-	-	-	144.9	104.9	117.8	23,186	3.6	118.8	1,008,215.2
11	-	-	-	151.0	108.7	121.4	23,191	3.3	118.0	1,011,582.7
12	206,882 p	206,664 p	-	147.0	104.5	127.9	22,699	3.5	118.4	1,021,591.6
2006. 1	-	-	-	139.5	99.9	117.3	22,471	3.7	119.4	1,027,697.4
2	-	-	-	134.9	97.5	109.5	22,412	4.1	119.6	1,034,711.9
3	206,830 p	206,113 p	-	150.4	109.3	124.0	22,848	3.9	120.2	1,042,293.6
4	-	-	-	144.2 p	103.4 p	119.7 p	23,242	3.5	120.3	1,048,598.6
5	-	-	-	148.4 p	105.9 p	122.9 p	23,484	3.2	120.5	1,055,855.4
6	-	-	-	-	-	-	-	-	120.3	-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2006. 7)〉

	콜금리 (익일물)	회사채 수익률	경상수지				자본 수지	외 환 보유액	수출	수입	대미 환율
			상품	서비스	소득						
						100만달러					
	%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100만달러		₩/\$
1998	15.07	15.10	40,371.2	41,665.0	1,024.1	-5,638.3	-3,196.7	52,040.8	132,313	93,282	1,207.8
1999	4.93	8.86	24,521.9	28,463.0	-651.0	-5,159.0	2,040.3	74,054.5	143,686	119,752	1,145.4
2000	5.05	9.35	12,250.8	16,953.6	-2,847.8	-2,421.3	12,110.0	96,198.1	172,268	160,481	1,259.7
2001	4.65	7.05	8,032.6	13,488.0	-3,872.1	-1,198.1	-3,390.8	102,821.4	150,439	141,098	1,326.1
2002	4.18	6.56	5,393.9	14,777.4	-8,197.5	432.3	6,251.5	121,412.5	162,471	152,126	1,200.4
2003	3.97	5.43	11,949.5	21,952.0	-7,424.2	326.3	13,909.4	155,352.4	193,817	178,827	1,197.8
2004	3.63	4.73	28,173.5	37,568.8	-8,046.1	1,082.8	7,958.8	199,066.1	253,845	224,463	1,043.8
2005	3.33	4.68	16,558.5	33,473.0	-13,092.2	-1,320.1	490.5	210,390.7	284,419	261,238	1,013.0
2004. 6	3.76	4.91	2,274.4	3,155.5	-660.4	47.4	-3,300.8	167,029.7	21,657	18,544	1,152.5
7	3.76	4.77	3,425.1	4,297.3	-751.1	6.3	-432.4	168,006.4	21,004	18,390	1,168.3
8	3.61	4.38	1,141.5	1,773.1	-910.9	273.7	869.5	170,492.0	19,799	18,124	1,153.8
9	3.52	4.10	2,998.8	3,682.5	-679.2	181.4	-1,574.2	174,448.1	20,831	18,193	1,147.9
10	3.51	4.01	2,295.4	2,747.0	-535.3	116.3	710.2	178,388.3	22,663	20,408	1,126.0
11	3.34	3.86	2,824.7	3,483.5	-712.5	295.7	7,666.8	192,602.3	23,077	20,312	1,047.9
12	3.27	3.73	2,213.0	2,939.3	-1,264.1	880.2	2,444.9	199,066.1	23,197	20,968	1,043.8
2005. 1	3.26	4.11	3,876.2 p	4,491.6 p	-863.4 p	492.8 p	-822.5 p	199,699.3	22,454	19,450	1,026.4
2	3.26	4.63	949.7 p	1,590.0 p	-969.3 p	460.3 p	487.5 p	202,162.4	20,401	18,397	1,008.1
3	3.24	4.48	1,051.0 p	3,074.1 p	-1,172.3 p	-710.1 p	3,543.1 p	205,447.3	23,952	22,780	1,024.3
4	3.25	4.28	-994.1 p	2,330.1 p	-945.3 p	-2,120.2 p	1,959.8 p	206,376.4	22,873	21,245	1,002.5
5	3.29	4.12	1,358.2 p	2,610.4 p	-1,169.8 p	153.8 p	797.9 p	206,100.4	23,123	21,162	1,002.5
6	3.27	4.18	2,239.1 p	3,700.0 p	-1,123.4 p	-121.1 p	-1,277.3 p	204,985.9	23,708	21,289	1,024.4
7	3.24	4.52	1,445.3 p	3,166.2 p	-1,465.3 p	-66.2 p	-773.6 p	205,684.6	23,236	21,509	1,028.3
8	3.24	4.75	-486.5 p	1,585.8 p	-1,820.0 p	-45.7 p	509.4 p	205,712.2	23,343	22,001	1,031.0
9	3.24	4.92	1,690.1 p	2,830.9 p	-1,074.3 p	139.1 p	-642.5 p	206,731.2	24,519	22,719	1,038.0
10	3.45	5.20	2,689.8 p	3,110.2 p	-590.3 p	297.0 p	-2,279.2 p	207,307.3	25,353	22,653	1,042.7
11	3.49	5.50	2,198.1 p	3,178.1 p	-767.7 p	-44.4 p	-264.1 p	208,230.3	26,826	23,950	1,036.3
12	3.70	5.49	541.6 p	1,805.6 p	-1,131.1 p	244.6 p	-748.0 p	210,390.7	25,632	24,186	1,013.0
2006. 1	3.74	5.50	91.2 p	1,478.2 p	-1,644.1 p	571.4 p	3,628.2 p	216,932.9	23,249 r	22,962 r	971.0
2	3.92	5.33	-782.8 p	837.7 p	-1,808.2 p	418.9 p	2,110.2 p	215,949.9	23,785 r	23,416 r	969.0
3	3.97	5.30	-426.8 p	2,907.1 p	-1,544.0 p	-1,472.0 p	786.0 p	217,344.3	26,855 r	25,754 r	975.9
4	3.97	5.24	-1,608.1 p	1,883.9 p	-1,345.7 p	-1,876.5 p	4,862.8 p	222,890.0	25,554 r	24,172 r	945.7
5	3.96	5.05	-1,272.3 p	2,728.2 p	-1,354.7 p	387.1 p	513.1 p	224,689.2	27,822 r	26,027 r	947.4
6	4.17	5.17	-	-	-	-	-	224,357.3	28,268 p	25,984 p	960.3

주 : p는 잠정치, r은 수정치임.

나라경제 주요 기사 목록

(2005년 8월호~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통권 제177호)

[특집] 하반기 경제 운용
[탐방]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만남] 남철공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지방자치제 10년,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경제정책해설]
신용보증제도 개편 / 추경호
쌀 관세화 유예 연장 / 정일정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창출 / 채희봉
법정부 차원의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 / 이완영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 / 안세경
정책담당자 칼럼 :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해야 / 최광학

[해외시장리포트] 중국 / 이효수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제4: 학습자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제3: 등유 유출로 인한 낚시터 물고기 피해 / 김상호
금융분쟁 조정사제1: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 여부 / 정준아

[기획기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2005년 9월호 (통권 제178호)

[특집] 여성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시대
[탐방] 환경부 환경정책실
[만남]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위안화 절상,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경제정책해설]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 남봉헌
이공계 대학 융합형 소양교육 지원 / 이동진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 이충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안종운

[해외시장리포트] 체코 / 이규남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제5: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제4: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농가에 첫 배상 결정 / 김상호
금융분쟁 조정사제2: 고지주의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 여부 / 정준아

[기획기사] 여성인력개발 지원제도

2005년 10월호 (통권 제179호)

[특집] 과학기술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
[탐방]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만남]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이 달의 초점] 고유가 파고 어떻게 넘을 것인가

[경제정책해설]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최원목
2005년도 세제개편안 / 변상구
사회적 의제의 선제 발굴 위해 '정보의제관리 시스템' 시행 / 진양현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 정책 / 김동수
친환경농업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정황근
외국인력 활용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송문현
SI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김순중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김진형

[해외시장리포트] 멕시코 / 우재량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제6: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제5: 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 결정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제3: 자동차보험에 있어 '운행 중 사고'의 의미 / 김효연

[글로벌 포커스-규제개혁1]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와 시사점 / 차문중
OECD 규제개혁 보고서: 일본 / 구균철

[참고자료]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005년 11월호 (통권 제180호)

[특집] 2006년 나라살림 어떻게 꾸려야 할까
[만남] 변양군 기획예산처장관
[이 달의 초점] 우리 證市의 선진시장 도약 가능한가?

[경제정책해설]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 이동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최대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지원 / 최남호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편 / 김성섭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 / 서명교
부담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 김순중

[해외시장리포트] 폴란드 / 오세광

[기업정보]
환경분쟁 조정사제6: 골포장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제4: 표현대리에 의한 연대보증책임 성립 여부 / 정준아

[글로벌 포커스-규제개혁2]
규제개혁과 경제성장-OECD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안상훈
OECD 규제개혁 보고서: 아일랜드 / 구균철

2005년 12월호 (통권 제181호)

[특집] 2006년 경제운영에 바란다
[만남] 이수훈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년, 보완 과제는?
[탐방]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경제정책해설]
금융허브 추진체계 구축 / 이원식
성과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도입 / 조올래
방사선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 이인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환경관리 기본틀 마련 / 김학주
작업환경 측정제도 혁신 / 김병욱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체계 개선 / 김용석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 김진형

[해외시장리포트] 태국 / 주덕기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제7: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제7: 도로공사시 소음 등으로 인한 숙박업 영업피해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제5: 과도한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김효연

[글로벌 포커스-규제개혁3]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제도적 환경과 경제성장 / 차문중
OECD 규제개혁 보고서: 독일 / 구균철

[기획기사]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2006년 1월호 (통권 제182호)

[특집]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탐방]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만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 달의 초점] '韓流', 문화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려면

[경제정책해설]
금융회사의 고객알기제도와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 정완규
5억 거대시장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서명 / 김영무
전자조달시스템 해외진출 추진 / 이재웅
전통식품산업의 세계화 적극 지원 / 최대휴
폐기물 없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 김성봉

[해외시장리포트] 베트남 / 김영웅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8 : 국제전화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8 :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 기각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례6 :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 정준아

[글로벌 포커스-규제개혁4]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에 위한 과제 / 김용성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프랑스 / 김정미

[기획기사] 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2006년 2월호 (통권 제183호)

[특집] 2006년 경제운용 방향
[탐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
[만남]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이 달의 초점] 韓·아세안 FTA의 영향 및 대응과제

[경제정책해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8·31 대책 후속입법/ 박선호
중장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 / 양도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 이찬희
내수 중심으로 주요 산업 성장탄력 강화 / 전민영

[해외시장리포트] 베트남 / 이한철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9 : 컴퓨터 유지 보수업자의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사례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9 : 아파트형 공장 내 기계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여부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례7 : 직원의 예탁금 횡령으로 인한 증권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 / 김효연

[글로벌 포커스-미래연구]
해외의 미래연구 동향 / 우천식 · 홍현정

[기획기사] 200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시책

2006년 3월호 (통권 제184호)

[특집] 양극화 현상 심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탐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만남] 이해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韓·美 FTA, 선진경제 도약 계기 삼으려면?

[경제정책해설]
성장잠재력, 서비스산업 경쟁력,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 진양현
아세안 후발개도국 지원에 주력 / 정진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의 場 마련 / 조원량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대책 축소 / 안일환
工事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실상 공개입찰로 전환 / 정경진

[해외시장리포트] 싱가포르 / 류중현

[기업정보]
공정거래 심결사례 : 무심고 동의한 약관, 화 부른다 / 박도하
환경분쟁 조정사례 : 사업장 발생 먼지로 인한 과수피해 / 임성재

금융분쟁 조정사례 : 병 났는데 보험금을 안 준다? / 정준아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년 4월호 (통권 제185호)

[특집] 저출산으로는 '희망한국' 없다-저출산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탐방] 인천국제공항
[만남]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 달의 초점] 경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그 대안은?

[경제정책해설]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 / 이세준
실거래가 신고로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성 높인다 / 김홍진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국가가 관리 / 방종식
4월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이신재
공공과 민간의 전자상거래 틀 통일 / 한성부

[해외시장리포트] 캄보디아 / 왕동원

[기획기사] 2006년도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시책

2006년 5월호 (통권 제186호)

[특집]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탐방]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만남]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이 달의 초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경제정책해설]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배태민
혁신형 중소기업 2008년까지 3만개 육성 / 박건수
'e-비즈니스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정동희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 김양현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에 역량 집중 / 박선호
국가통계 '품질진단' 의무화 추진 / 정규남

[해외시장리포트] 미얀마 / 오재호

[기획기사] 2006년도 기술개발촉진 지원제도

2006년 6월호 (통권 제187호)

[특집] '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탐방] 농림부 축산국
[만남] 송위섭 사람임국·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이 달의 초점] 국제유가 급등,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경제정책해설]
안전한 먹을거리, '브랜드肉'이 책임진다 / 윤기호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차질 없이 추진 / 전운배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 / 원 열

[해외시장리포트] 말레이시아 / 박진형

[기획기사] 벤처기업 지원제도

2006년 7월호 (통권 제188호)

[특집] 韓·美 FTA,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
[탐방]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만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 달의 초점] 해외건설 '제2의 르네상스'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정책해설]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 / 장훈기
30대 그룹으로 '상생협력' 확대 / 박건수
표준제도 표준화 통해 국제 경쟁력 밀착한다 / 김진태
물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최용철
기반시설 '무임승차' 막는다 / 박민우
1천m밀당·고속철 등 5대 수출명품 개발 / 이성해

[해외시장리포트] 필리핀 / 손성만

[기획기사] 2006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나라경제 정기구독 신청서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앞

FAX : (02) 3295-0744

아래 사항을 기입하신 후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기간** : 2006년 ____월호부터 200__년 ____월호까지 (____년간)

▶ **신청부수** : ____부

▶ **신청자** : 개인 ☐ 기관 ☐

〈개인〉 성명 : 전 화 :
직장명 : 직 위 :
우송처(주소) :
e-메일 :

〈기관〉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우송처(부서) :
신청자 성명 :

▶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 지로입금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254-012362-13-145
(예금주 : 한국개발연구원)

〈지로 입금〉 • 은행비치 지로용지 이용시 7530243번 기재후 송금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 필요시 연락바랍니다.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료**

- 1년 25,000원
 - 2년 45,000원
- (* 해외에서 구독시 우편료 별도)

☐ **구독 문의** : 전화 : (02)958-4656/(02)958-4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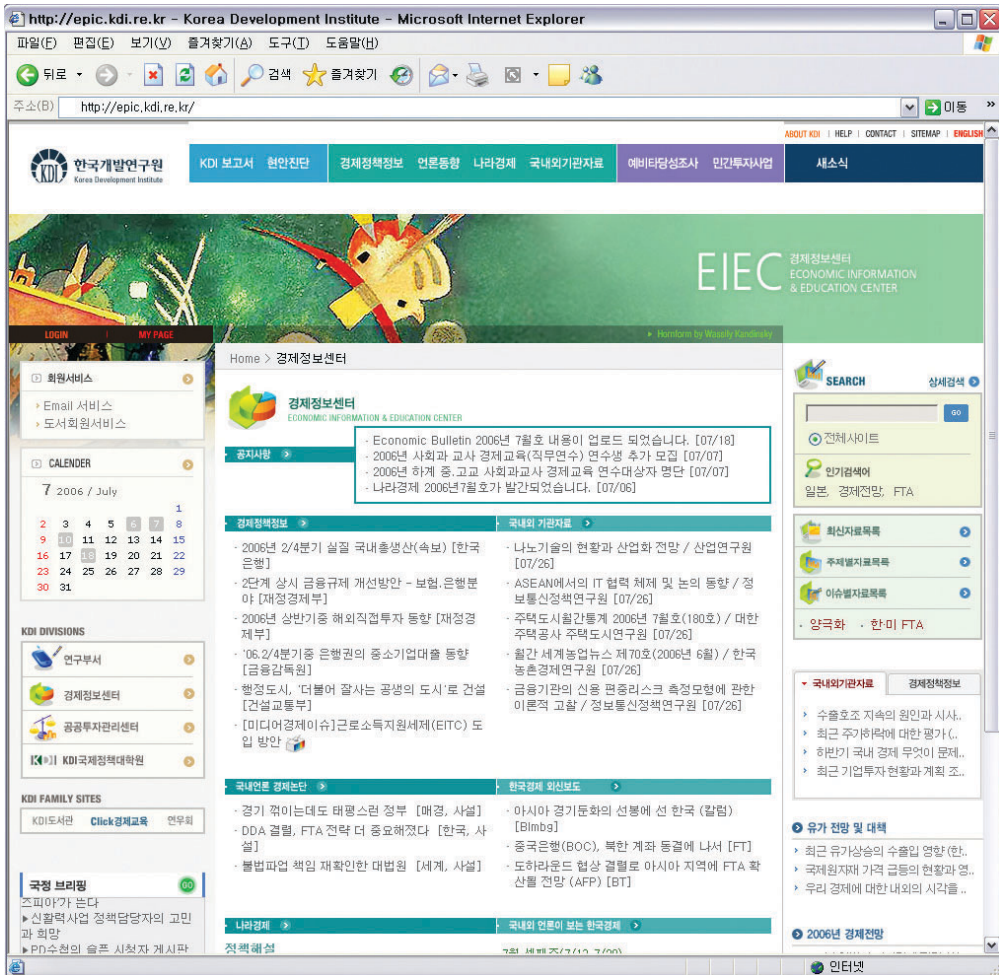
e-메일 : nara@kdi.re.kr

홈페이지 : <http://nara.kdi.re.kr>



경제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외 기관자료(Infolink)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클릭 경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와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

키를 뽑으면 저금통이 됩니다

계속되는 고유가시대,
절제하는 습관만이 우리 경제에 힘이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세계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마다 우리 경제는 땅이 꺼집니다.
누구나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두고 걷는 습관 하나가 나 자신과 국가경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